

인문사회연구회

업동연구총서 2000-09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한 만 길(한국교육개발원)

양 현 모(한국행정연구원)

윤 종 혁(한국교육개발원)

김 창 환(한국교육개발원)

오 기 성(인 천 대 학 교)

차 우 규(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 유 환(동 국 대 학 교)

통일연구원

머 리 말

최근 들어 통일교육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지난 6월의 남북정상회담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데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한편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하여 북한사회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통일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북한사회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인식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 동안 북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의 소리도 들리고 있다. 또한 북한사회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지 못한데 대하여 정부나 언론, 학교교육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학교는 과거의 반공교육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북한의 약점을 과장하거나 우리 체제의 우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통일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특히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통일교육의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를 모색하고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남북관계의 전환기에 있어서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제 통일교육은 평화공존 모형에 기초하여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평화와 화해·협력을 바탕으로 평화공존과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모형에 기초하여 학생과 교

원들의 통일의식을 조사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통일교육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학교 통일교육과 사회 통일교육, 공무원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독일의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남북한 화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이 공동 연구로서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한만길 박사가 연구책임자로서 2장 통일교육의 접근 방향 탐색, 3장 통일의식 조사, 4장과 5장의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 8장 독일의 정치교육 부분을 담당하였으며, 한국행정연구원의 양현모 박사가 연구책임자로서 6장 공무원 통일교육, 7장 독일의 통일교육 부분을 담당하였다. 마지막 10장 통일교육의 과제에서 1절~4절은 한만길 박사, 5절은 양현모 박사의 책임으로 집필하였다.

이 연구에는 통일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였는데 이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협의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여기에 통일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토론과 조언을 하였다. 또한 이 분들은 연구 내용을 보완해 주고 검토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특히 고려대 김동규 교수, 한신대 강순원 교수, 통일교육원 김용재, 권영경 교수, 동국대 고유환 교수, 통일연구원의 조민 박사의 협조에 감사드린다. 이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은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진을 비롯하여 공동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2000년 11월 30일

요

약

본 보고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0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회 산하 9개 국책연구기관이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 연구는 남북한 화해 협력 시대를 맞이하여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고,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통일교육의 본질과 접근 방향을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은 학생들이 ‘평화능력’, 즉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평화능력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분단상태가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남북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며, 통일의 과정과 통일 후 수많은 갈등 상황에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교육은 평화교육의 한국적 형태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남북정상회담 이후 학생과 교원의 통일 관련 의식을 통일관과 북한관을 중심으로 조사한 내용을 정리·분석하였다. 통일의 당위성과 가능성, 통일 미래상 등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남북한의 상호 불신과 대립보다는 평화와 화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과 북한 사회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관계가 원만한 관계로 변화하는 상황이 학생과 교원들의 통일의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학생들은 현재의 통일교육에 대하여 비교적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교과서 등 교육내용이 재미없다거나 교수학습 방법이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 통일교육은 1990년대 이후 통일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다양하고 개방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통일교육은 정부 중심의 교육 형태에서 민간 단체로 확대되고 있으며, 교육내용이나 방법 또한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사회 통일교육의 유형

을 교육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그런데 공공 교육기관의 통일교육은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민간단체의 통일교육은 가상 및 현실체험학습, 수련활동,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 통일교육 가운데 공무원 통일교육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무원 통일교육은 북한정세 이해와 통일준비역량 제고, 그리고 안보현장 답사 등을 통하여 통일의지를 함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북 화해·협력시대에 부응하는 통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방향에 기초하여 통일교육의 내용을 개편해야 할 것이며, 북한사회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독일의 통일교육 사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동서독의 통일교육이 주는 시사점은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공존과 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통일교육은 평화교육의 접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남북간의 갈등, 반목, 적대감을 해소하고, 남북한이 공존 공영 속에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기반 조건으로서 평화교육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첫째, 통일교육의 접근 방향은 평화공존 모형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통일교육의 방향은 남북한간의 평화와 화해·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평화공존을 추구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일교육이념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민주’, ‘민족’, 그리고 ‘평화’의 이념 아래 통일교육이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통일교육은 평화교육의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평화교육의 한국적 형태가 통일교육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통

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에 적합한 형태로 교육내용 역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북한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통일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 구성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통일교육의 방법 역시 과거의 주입식 강의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시대의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셋째,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통일교육 관련 교과를 모든 교과로 확대하여 북한 및 통일문제를 각 교과에 특성에 적합하도록 반영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체험활동, 특별활동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교원들 역시 통일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통일교육 연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회 통일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과 강의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교수방법의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교육방법과 교육기간 등에서 다양한 통일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교육이 지향해 나갈 기본 목표와 방향을 교육강령의 형태로서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통일교육강령은 통일교육의 기본적인 명제로서 범국민적 토론을 통하여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초당파적 차원에서 제정 공포하도록 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통일교육강령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남북의 통일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실현한다. 2. 남북의 통일은 주변 국가의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실현한다. 3.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청산하고 이제는 화해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4. 남북은 한 민족이다. 5. 남북은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유지해 오던 생활공동체

를 회복하는 것이 남북의 발전과 번영에 유익하다. 6. 남북은 상호 상대방의 차이와 이질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7. 남북의 이념과 가치, 사회현실에 대하여 보편적 가치에 기초하여 비교하고 비판할 수 있다. 8. 남북의 통일은 한반도의 안정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9. 남북의 통일은 점진적인 협의를 통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 10. 남북의 통일 절차와 형태는 공동의 협의를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국가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가운데 만들어 가는 것이다. 11. 남북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남한 사회의 화합과 안정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통일문제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당파적인 통일교육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국민들의 북한관이나 통일관의 차이와 혼란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통일교육 기본 지침을 개발하거나, 공공 및 민간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통일교육 지원체제가 강화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통일교육지원법 등 법적·제도적 정비도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도 통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통일교육을 지원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가 중요하며,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민간 교육기관의 관심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II. 통일교육의 접근 방향 탐색 - 평화교육의 관점을 중심으로	7
1. 통일교육의 본질과 필요성	7
2. 평화교육의 한국적 형태로서의 통일교육	10
3. 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통일교육의 접근방향	18
III. 학생과 교원의 통일의식 조사 결과	28
1. 통일관	28
2. 북한관	40
3. 통일의식의 변화와 통일교육의 과제	49
IV.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특성	62
1.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62
2. 학교 통일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72
3. 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91
V. 남한 사회 통일교육의 형태와 특성	107
1. 교원 연수기관의 통일교육	107
2. 강의와 토론 중심의 통일교육	109
3. 강의와 체험학습 형태의 통일교육	113
4. 가상 체험 형태의 통일교육	116
5. 수련활동 형태의 통일교육	119

6. 지역 축제 형태의 통일교육	122
7. 사회 통일교육의 특성과 문제점	125
VI. 공무원 통일교육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131
1. 통일교육원의 공무원 통일교육	131
2. 각급 공무원 교육원의 통일교육	143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147
VII. 독일의 통일교육 운영체계	153
1. 독일의 정치교육	154
2. 통일관련 정치교육의 주요 내용	160
3. 통일교육(정치교육)의 담당기관	170
4. 독일 통일교육의 시사점	186
VIII. 통일 이전의 독일의 정치교육	189
1. 구 서독의 정치교육	189
2. 구 동독의 정치교육	195
3. 구 동·서독 정치교육과정 비교	205
4. 시사점	217
IX.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222
1. 평화공존 모형으로의 방향 전환	222
2.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227
3.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의 개선 방안	243
4.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251
5. 새로운 통일교육체제 확립방안	259
X. 결론	271
참 고 문 헌	278

표 차 례

<표 I-1> 표집계획 및 조사결과	5
<표 III-1>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	29
<표 III-2> 통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	30
<표 III-3> 통일이 되면 우리 나라가 발전할 것이다	31
<표 III-4> 통일이 되면 사회가 혼란해질 것이다	32
<표 III-5> 통일이 되면 나는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33
<표 III-6>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한 인식	34
<표 III-7> 남북간의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우선적 과제	35
<표 III-8> 북한사회 이해 증진에 기여	37
<표 III-9> 남북한 화해와 협력에의 기여	38
<표 III-10> 통일실현을 앞당길 것이다	39
<표 III-11>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층에 대한 인식	40
<표 III-12> 북한 일반주민에 대한 인식	41
<표 III-13> 북한 주민이 친근하게 느껴진다	43
<표 III-14> 북한 주민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44
<표 III-15> 북한 주민들은 근면한 사람들이다	45
<표 III-16> 북한 주민들은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46
<표 III-17> 남북한 차이에 대한 인식	47
<표 III-18> 북한 문화에 대한 인식	48
<표 IV-1> 초·중·고등학생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	63
<표 IV-2> 교원들이 인식하는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64
<표 IV-3> 통일관련 수업에 관심이 적은 이유(학생)	65
<표 IV-4> 통일교육에 학생들의 관심이 적은 이유(교원)	66
<표 IV-5> 현행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평가	67
<표 IV-6> 현행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	68
<표 IV-7> 현행의 학교 통일교육이 부진한 이유	69

<표 IV-8> 통일교육 교사연수는 현장통일교육에 도움을 준다	70
<표 IV-9> 북한 및 통일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요소	71
<표 IV-10> 통일교육 강화 방안	71
<표 IV-11> 교육과정 총론 상의 학교 통일교육 관련 내용	75
<표 IV-12> 6차와 7차 교육과정 총론상 통일교육 관련 내용 비교	76
<표 IV-13> 남북한 생활문화를 소재로 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예시	86
<표 IV-14> 민속놀이를 소재로 한 통일대비 능력 신장 프로그램	87
<표 IV-15> 체험학습 프로그램(초등학교 용)	89
<표 IV-16> 체험학습 프로그램(중·고등학교 용)	90
<표 IV-17> 청소년 통일의식 하계 캠프	90
<표 IV-18> 제6차, 제7차 도덕과 통일 교육 연간 시수 비교	94
<표 IV-19> 제6차, 제7차 도덕·윤리와 통일 교육 내용 비교	95
<표 IV-20> 도덕·윤리와 통일 교육 관련 내용의 생활 문화 중심으로 전환 방안 ..	97
<표 IV-21> 제7차 교육과정 사회과 내용 체계와 통일 교육 내용 반영 방안 ..	99
<표 V-1> 자유총연맹의 통일준비 교원연수 프로그램	110
<표 V-2> 아태청년아카데미의 제12기 교육프로그램	112
<표 V-3> 경실련 통일협회의 제9기 민족화해아카데미	113
<표 V-4> 여성이 열어 가는 평화통일-함께 나누고 더불어 사는 남과 북	115
<표 V-5> 제 1기 남북통합교실 프로그램	117
<표 V-6>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평화교육 교사 연수 프로그램	118
<표 V-7> 남북나눔 운동의 6기 통일 학교 프로그램	120
<표 V-8> 흥민통의 2000 청소년 지역화합 한마당 프로그램	122
<표 V-9> 여성문화통일문화 놀이마당	123
<표 V-10> 범서울시민 걷기 대회 프로그램	124
<표 VI-1> 통일교육원 교육목표	132
<표 VI-2> 통일교육원의 교육 추진방향	133
<표 VI-3> 통일교육원 교육내용	134
<표 VI-4> 통일교육원 교육운영계획	135
<표 VI-5> 통일행정요원 교과과정 및 교과목	139

<표 VI-6> 교육교사·행정공무원반 교과과정 비교표	140
<표 VI-7> 통일직무요원과정	145
<표 VIII-1> 10년제 종합기술학교의 교육과정 편제안	197
<표 VIII-2> 상급고등학교(EOS)의 교육과정 편제안	198
<표 VIII-3> 전기중등학교(7-10학년) 사회 교과	207
<표 VIII-4> 7학년 “국가시민” 교과	213
<표 VIII-5> 8학년 “국가시민” 교과	214
<표 VIII-6> 9학년 “국가시민” 교과	215
<표 VIII-7> 10학년 “국가시민” 교과	216

그림 차례

[그림 IX-1]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모형	223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그 동안 남북한은 분단 상황에서 상호 대결적이며 경쟁적인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과거에는 반공교육 또는 통일안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경계하거나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 교육하였다. 반면에 북한은 남한을 적화통일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남조선해방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려는 교육을 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은 한 민족이며 동포이면서도 학생과 주민들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교육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세계적으로 개방화의 추세 속에서 한편으로는 협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하는 국제 경쟁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 민족은 반목과 대결보다는 화해와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경쟁의 시대에 있어서 남북한은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우리 민족 모두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의 과제를 모색하는 일은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남한에서는 국가안보교육, 국민정신교육, 민주시민교육, 반공교육, 승공교육, 멸공교육, 통일안보교육, 이념교육, 知共教育 등의 다양한 명칭하에 통일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러한 교육은 민족의 이질화된 생활공간을 재통합시키기 위한 동질성 회복의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남북한간의 이질화 및 적대감만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통일교육은 남북한 주민간의 이해와 화해의식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근본적인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였다.

통일교육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통일교육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소련을 비롯한 구 공산권 국가들의 민주화와 냉전 구도의 종식,

2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그리고 동서독의 통일은 우리의 분단상황과 통일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통일교육은 기존의 냉전적 사고를 기초로 북한을 대결대상이나 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함께 살아야 할 민족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전제위에서 기존의 반공교육이나 안보교육의 문제를 포용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통일교육으로 전환하였다.

현재의 대북포용정책을 통해 지속되어 온 남북한간의 대결과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서해교전과 같이 간헐적으로 나타난 대결과 긴장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직접 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4자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협의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정부는 북한과의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여러 채널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남북한간에 금강산 관광 및 교역의 증가에 따라 경제공동체 건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북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교류와 스포츠 교류 등을 통해 남북관계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지원법의 제정은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통일교육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국제적으로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남북간의 화해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시되는 상황에서 남북간의 분단으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 상호 적대적이며 대결적인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화해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는 과제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남북한은 모두 상호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학생과 국민들에게 상대방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와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육분야에서 상호 적대적이며 대결적인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남한 주민이나 북

한 주민들에게 모두 서로에 대한 이해와 화해를 도모하고 남북의 통일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통일교육은 국민들의 통일에 대비하는 합리적인 태도와 건전한 의식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통일을 준비하는 중요한 노력이자 과제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간의 상호 이해와 화해를 도모하고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은 남북간의 상호 존중과 공존을 모색하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지혜와 자세를 터득하도록 해야 한다.

남북한은 상호 노력을 통하여 학생과 주민들에게 건전한 통일관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 교육을 통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통일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남북한간 이해와 화해협력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개방적인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이 상호 이해와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남북한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통일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남한 교육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에 대한 교육 방식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남한의 통일교육 실태를 분석하는 한편, 동서독의 화해협력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살펴 본 후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한의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교육의 과제를 제시하려고 한다.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촉진하는 교육의 본질은 무엇인가?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지향할 교육의 방향과 가치는 무엇인지를 구명하고자 한다. 남한은 기존의 반공교육이나 멸공교육, 이념교육, 안보교육, 통일안보교육과는 차별되게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개념을 규정하고자 한다.

이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여 하나의 민족을 지향하는데 필요한 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평화와 화해 협력을 바탕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통일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방향과 모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한의 초·중등학생, 대학생, 교원에 대한 통일의식 조사를 통하여 통일관, 북한관, 통일교육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다. 특히 지난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통일의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과 교원들이 통일교육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초로 하여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독일의 통일교육 사례를 살펴본다. 먼저 통일 이전 동서독의 통일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동서독 주민들의 이해와 화합을 위한 교육 실천 사례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동서독의 정치교육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서독의 연방정치교육센터 등 통일교육담당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집중 분석한다. 다음으로 동서독의 학교통일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사례 분석에 기초하여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상의 분석에 기초하여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로서 통일교육의 방향, 실천과제, 지원대책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연구 방법

(1) 통일교육에 관한 문헌 분석

먼저 남북한의 통일교육과 관련한 각종 문헌자료를 분석한다. 또한 독일 통일 및 통일교육과 관련된 각종 문헌 및 자료를 분석한다.

(2) 통일교육에 관한 의견조사

남한의 통일교육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교원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집은 학급별, 지역별로 유층표집과 군집 표집으로 이루어졌다.

<표 I-1> 표집계획 및 조사결과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교원	전체
학교수	20	20	20	8	26	94
조사대상자수	700	700	700	600	500	3200
최종응답자수	607	578	459	527	450	2621
회수율(%)	86.7	82.6	65.6	87.8	90.0	81.9

전체 94개 학교를 대상으로 3200명을 표집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621명이 최종적으로 응답을 보내주었다. 평균 회수율은 81.9%이며, 교원이 가장 높은 회수율을 보인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는 65.6%로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본 의견조사에 사용된 설문도구는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교원들의

6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관, 북한관, 및 통일교육 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따라서 설문지에도 이 세 가지 영역과 관련된 질문을 제시하였다.

II. 통일교육의 접근 방향 탐색

- 평화교육의 관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천 년,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한반도의 지역 구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에 공동으로 합의·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한 화해협력 및 체제간 통합을 위한 논리를 총괄적으로 종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남북한은 한 민족으로서 공생할 역사적 주체임을 인식할 수 있는 의식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남북한이 상호 이해하고 화해 협력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조성해 주는 통일교육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¹⁾

1. 통일교육의 본질과 필요성

통일교육은 한민족 당사자간의 분단을 해결하는 과정으로서 통일이 라는 개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통일교육은 독일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여러 가지 난제들을 교훈으로 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대체로, 한반도의 통일과정은 독일식의 흡수통일, 베트남식의 무력통일, 오스트리아식의 중립통일과 구별되는 21세기형의 새롭고도 독특한 한반도식 모델을 서로 합의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독일, 베트남, 예멘, 오스트리아 등의 민족통일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민족에 대해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과 결과가 매우 다양하고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측면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남북한 양측의 화해협력을 위한 방안으로서 통일교육은 우선 이념적인 측면에서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표준형 교육체

1) 이 부분은 강순원(한신대 교수)과 박보영(연세대 강사)이 집필한 원고에 기초하여 수정 보완하였음

제를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 제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취학전 교육, 학제구성, 의무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에 대한 다각적인 개혁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통일교육에 대해 개방적이며 융통성 있는 사고구조를 통해 민족통합, 정치사회화, 국제이해교육, 사회복지 등의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통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가능성과 신념에 대한 의식 고양을 통하여 구체적인 통일과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남북한 화해협력을 위한 교육목적과 내용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1945년 해방 이후 우리 민족은 주변 강대국들의 직·간접적인 영향과 개입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분단 속에 반세기 이상을 지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중·소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를 겪으면서 국제정세 역시 탈냉전·탈이념의 새로운 전환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도 냉전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대립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는 기축으로서 ‘6.15 남북선언’을 발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남북한의 통일은 1989년 독일의 베를린장벽 붕괴로 상징되는 흡수통일 방식과 비교해 볼 때, 다각적인 과제와 전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민족으로서 가질 수 있는 혈연적·언어적 통합으로서의 화해 과정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정치·경제·사회체제가 통합되고 남북한 주민의 의식과 가치관까지도 통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간 화해하고 협력하기 위한 ‘우리민족 이해교육’, 그리고 이에 기초한 ‘우리 민족 서로 돕기’ 등의 과정이 통일교육 차원에서 기본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즉, 상호간 화해하고 협력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통일교육 속에서 새로운 의미의 평화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남북한 화해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 통일교육을 인식해야 한다. 즉,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과 통일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으로 통일교육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화해협력을 구축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것이다.

통일은 형식적으로는 정치적인 통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면 민족의 화합과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없다. 통일을 성취한다고 하더라도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통일 이후 사회는 혼란과 갈등 속에서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될 지도 모른다. 따라서 분단의 현 상황에서 서로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통일에 대비한 교육 분야의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신뢰를 다지고 통일의 바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 협력과 공조가 필요한 단계적인 통일 실현 방안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교육은 통일을 서로 합의하고 화해하여 실현할 수 있는 평화적 측면을 강조해야 하며, 통일된 국가에서 행복한 삶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 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현재의 통일교육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도화된 사고 구조’를 극복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제도화된 사고 구조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책행위에 대한 내용과 과정에 대해 의식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사고 범주의 울타리 역할을 담당하는 기본적인고도 이념적인 철학적 사고의 틀을 말한다.

이와 같이 제도화된 사고구조는 남한의 경우 반공주의, 반사회주의, 유교주의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북한의 경우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 전통사상,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김일성 주체사상 등으로 대표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는 각각의 통일교육 저변에서 민족 상호간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로 되었다. 따라서 남북한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단 이후 지금까지 상호간 냉전 논리와 대결 논리에 입각하여 상호 불신과 부정, 비방과 공격 일변도의 교육을 실시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 반목과 질시로 일관해 온 대립적 관점의 통일교육에서 탈피하여 남북한 상호간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을 정립해야 한다. 우선 통일교육을 새롭게 개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화된 사고구조’를 혁파하고,

조금 더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고구조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통일교육은 새로운 민주주의 의식의 함양, 상호 민족적 신뢰감의 회복, 통일준비 및 운영능력의 배양, 통일조국 건설능력 배양 등을 주요한 교육과제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통일을 준비하면서도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일관되면서도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의미한다. 결국 통일교육은 남북한 화해·협력을 기조로 하는 체계적인 지침 아래 민족의 통합교육, 정치교육, 국제화 교육 및 정보화 교육, 사회복지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취학전 교육 단계부터 성인교육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의 통일교육은 그 내용 면에서 분단을 고착화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통일국가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공동체 구성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남북한을 단일권역으로 하는 공동체적·공감대적인 가치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의 통일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할 것이며, 통일 이후 민족 사회의 상황 전개에 따른 적절한 대응과 이상적인 민족 사회를 건설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가치관과 태도를 배양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교육은 통일을 대비하면서 통일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2. 평화교육의 한국적 형태로서의 통일교육

가.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평화교육

현재 우리의 삶을 둘러싼 세계는 통일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인 구성속에서 이에 대립하는 차원의 폭력과 갈등 등의 분단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과 갈등 속에는 전쟁과 테러와 같은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 뿌리 박혀 있는 빈곤과 차별, 인권의 유린, 생태계의 파괴와 같은 구조적 폭력이 통일에 대한 장애물로서 대립되

고 있다. 이와 같은 폭력과 비평화의 구조에 대하여 우리는 ‘세기말’을 들먹이기도 하였고, ‘총체적 위기’, ‘전지구적이고 조직적인 비평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문제의식을 높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위기 의식 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비평화의 구조에 대하여 무언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다각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도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들이 처한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나가기 위한 실천 활동을 펼쳐 나가기 시작하였는데, 이와 같은 교육적 노력들이 지향하는 바를 ‘평화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평화교육은 인간의 삶을 둘러싼 현실의 문제에 대해, 교육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우리를 둘러싼 총체적 비평화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비평화적 상황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평화의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나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소극적 개념으로부터 차별, 불평등,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억압 등의 구조적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적극적 개념까지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평화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으로부터 전지구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의 문제까지를 포괄하는 다층적이고 중층적인 영역의 문제이기도하다.

따라서 평화는 개인마다 그리고 시대와 문화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이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평화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가 존재한 이래로 각 문화와 언어권마다 평화라는 개념에 대한 고유한 의미를 간직하며, 인간의 삶과 관계의 이상적인 모습으로서 평화를 지향해왔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 평화에 대한 다양한 이해 속에 존재하는 공통분모들로부터, 평화는 곧 인류가 -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 함께 지향할 수 있고, 동시에 지향해야 할 삶의 질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인류에게 교육을 통하여 인류가 평화의 문화를 실현해 나가야 함을 깨닫게 하였고, 그러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평화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교육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통적 평화교육으로 불리워지는 유네스코(UNESCO)의 ‘국제이해교육’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이후 실천과 이론의 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을 포괄하는 비판적 평화교육의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현재 평화교육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가치로운 삶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적 실천들을 포괄하는 보편적이고 전지구적인 개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나. 한국적 특수성으로서의 통일교육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평화교육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실천된다. 즉 각각의 사회는 그 사회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구성원들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영역으로부터 평화교육적 실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평화교육의 구체적 실천형태는 사회마다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전개되어 왔다. 예를 들어, 유대인과 아랍인의 갈등이 첨예한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과 아랍인의 공존을 위한 ‘공존교육’(co-existence education)이 평화교육의 구체화된 형태로 자리잡고 있으며, 카톨릭교도와 신교도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북아일랜드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종교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유산교육’(Cultural Heritage)과 ‘상호이해교육’(Education for Mutual Understanding)이 바로 평화교육이 구체화된 예이다.²⁾

그런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평화교육에 대한 논의는 통일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 내에서 평화로운 삶

2) 또 다른 관점에서 평화교육이 보편적 이해를 기초로 하여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유럽과 북미에서는 군축교육, 반핵교육,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 간의 긴장이 깨진 이후에는 환경교육이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는 반면, 라틴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등에서는 민족해방교육, 인권교육이, 또 한국에서는 통일교육이 각 지역에서의 평화 실현을 위한 교육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고병현(1994), 『평화교육의 성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의 질서를 가로막는 요인들에 대하여 고찰하고, 그러한 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설정하고 창조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이 한국에서의 평화교육의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음으로써 파생되는 다양한 비평화적 현상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분단이 한국사회에 야기하는 비평화적 현상은 지극히 구조적이고 체제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가려내는 일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를 들어보아도 남북한의 비평화적 상황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대치로 인한 전쟁이나 테러 등 물리적 폭력 상태에 대한 항상적인 잠재 위협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문제, 남북한 사회가 모두 체제 유지와 안보를 위한 사상과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상황, 비민주적인 사회분위기, 전체적인 긴장과 불신의 분위기, 군비확장과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인한 자원의 낭비 등의 헤아릴 수 없는 구조적 폭력이 조직화되어 있다. 따라서 한반도 내의 모든 비평화적 현상들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분단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에서는 분단이 반세기 넘어 계속되면서 분단 그 자체가 주민들의 일상생활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리며 일정한 삶의 양식으로 ‘고착화’하였다. 그리고 한반도의 상황에서 분단은 철저하게 비평화적 삶의 양식을 구조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분단의 구조적 성격은 분단의 고착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조가 말 그대로 남북 주민 모두의 일상생활에 그 나름의 뿌리를 내렸고, 그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는 상당 수준의 자기재생산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한반도 내에서의 삶이 분단체제로 인해 철저하게 제약되어 있다면, 한반도에서 평화문제는 분단체제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거치지 않고서는 풀릴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내에서의 평화교육은 곧 분단체제의 비평화적 상황을 변화시키고, 분단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 평화교육의 접근이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

통일교육은 이전부터 여러 단계의 변천을 거치면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다. 그러나 통일교육에 대하여 평화와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통일교육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실천방향에 대하여 새로운 발상전환의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 통일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으로서의 ‘평화’

통일은 처음부터 단지 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평화의 문제와 복합적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통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문제 자체가 한반도의 분단상태가 우리의 삶을 비평화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고통과 번민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단으로 인한 비평화적 상황은 이산가족의 문제, 과도한 군사비 지출, 이데올로기 통제를 통한 국민들의 부자유스러운 삶, 비민주적인 사회분위기 등으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결국 남한과 북한 두 사회가 모두 분단으로 인한 긴장과 갈등에 무의미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단상황이 야기하는 한반도의 비평화에 대한 해결점은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 과정 속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분단되어 있던 두 사회의 통일은 분단이 고착되어 있던 이전의 사회보다도 더 혼란스럽고 비평화적일 가능성 또한 크다. 어찌면 이러한 사실이 바로 우리 사회가 처한 평화문제의 가장 어려운 딜레마일 것이다. 하지만,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평화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혼란을 우려하여 분단의 상황을 고착시키고 통일을 외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단이 남한과 북한 사회에 불러 일으킨 물리적/구조적 폭력의 심각성과 이의 파급 효과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통일적 상황을 연출하는 것은 바로 평화적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갈등 해결을 외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남한과 북한 사회를 비평화적 상황으로 만드는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그로 인한 물리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 해결 과정으로서 평화적인 통일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전제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 측면에서 분단체제는 한반도의 모든 비평화적 현상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 자체가 한반도의 다양한 갈등들을 극복하기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2) 과정으로서의 통일

평화의 관점에서 볼 때, 통일은 단지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의 문화, 즉 평화의 문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은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의 상황이 남북한 주민의 삶을 너무나 제약하고 있고, 비평화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비평화를 극복하기 위한 지향으로서 평화로운 통일이 상정되는 것이다.

평화는 그 개념 자체가 역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언제나 더욱 평화로운 상황을 창조해 나가기 위한 역동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대한 평화적인 이해는 통일을 하나의 일회적인 사건이나 상태가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과 같은 흡수통일이나 급격한 변화에 의한 통일, 전쟁에 의한 통일을 절대적으로 지양한다. 이와 같은 형태의 통일은 통일을 하나의 맹목적인 지향으로 만들어, 더욱 비평화적 상황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이해와 입장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한 다양한 입장 중에는 통일을 하나의 사건이나 상태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다. 통일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면, 통일은 곧 장벽이 무너지거나, 남북한 정부가 어느날 하나로 통합되는 것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통일을 이해하는 과정은 통일 그 자체가 불시에 일어날 지 모르

는 우연적인 상황으로 희화화될 수 있다. 즉, 통일에 대한 점진적이고도 충분한 준비의 과정과 그 속에서 요구되는 상호간 평화적인 합의 과정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한은 아직 상호간 충분한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통일이 하나의 사건이나 상태가 될 경우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는 꾸준한 과정으로 통일을 이해할 때, 통일은 이미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 단계별로 진행되는 개별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비평화적인 삶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평화를 창조해나가려는 작은 움직임 속에서 통일은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항상 낮고 느슨한 단계의 동질화 과정에서 시작하여, 그 다음 단계로 이행해 가는 과정은 남한과 북한 주민들의 민주적인 의사수렴 절차를 거쳐서 평화로운 과정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정치적 제도의 통합과 통일에 앞서 심리적인 공존과 조화를 준비하는 통일교육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3) 평화능력의 형성

평화교육은 학생들이 ‘평화능력’(Peace Capacity), 즉 평화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평화를 창조한다는 것은 기존의 삶의 조건 속에서 갈등의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러한 갈등을 평화적인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며, 이전과는 다른 대안적인 삶의 질서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개인과 사회에 대한 인지적 지식과 문제의식 뿐만 아니라, 공감과 비판의 감수성, 자신의 사고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행동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평화교육은 평화에 관한 교육, 평화를 통한 교육, 평화를 위한 교육을 이에 도달하는 통로로 설정하고 있다. 평화에 관한 교육이란 평화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지적 지식과 비판의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학생들은 평화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문제의 인식과 다양한 해결통

로들을 모색해볼 수 있다. 평화를 통한 교육이란 평화능력의 형성을 위한 교육이 인지적 영역의 학습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적인 평화능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습공동체가 평화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교육은 그 자체가 민주적이고 생동감있는 토론장이 되어야 하며, 일상의 실천을 통해 평화문화의 창조를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평화를 위한 교육이란 전체적인 교육의 목적을 평화능력의 형성에 두고,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요구되는 평화능력들을 교육의 세부목표로 구체화하고, 이러한 교육목표에 맞추어 평화교육이 몇몇 교과에 한정된 교육이 아니라 전교과를 비롯한 전체적인 교육의 과정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평화능력은 분단체제를 극복해나가는 통일의 과정에 있어서도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상황에서 평화능력은 곧 통일과정을 이끌어가는 문제해결능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통일과 관련된 지식을 포함하여 다층적인 삶의 차원에서 겪게 될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해결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통일교육은 평화적 관점에서 이해할 경우, 통일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북한에 대한 인지적인 지식을 많이 알도록 하는 것이 전제로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바로 통일교육 그 자체로서의 본질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오히려 통일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더라도 갈등상황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준다면 실제적인 통일의 과정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은 평화에 관한 교육, 평화를 통한 교육, 평화를 위한 교육이라는 통로를 통해 실천되어야 한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학생들은 ‘머리(평화에 대한 인지적 인식능력) - 가슴(평화에 대한 감수성) - 손(평화문화의 창조를 위한 실천능력)’의 조화로운 발달을 교육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해결능력과 행동능력이 통일에 대한 지식보다 앞서서 강조될 때 진정한 의미의 통일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지식전달 위주의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현장실습, 토론, 글쓰기 등의 다양한 교육형태를 적용하여 현장 실천 중심의 수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통일교육은 단지 통일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육 전체의 변화, 그리고 전체적인 삶과 관련된 문화의 변화까지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평화와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통일교육의 방향과 지향점에 대하여 새로운 전환점을 확보할 수 있다. 평화라는 화두는 우리에게 방법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분단체제를 극복해야 하는가?”,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어떤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가?”, “어떤 통일의 과정을 밟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던져주기 때문이다.

3. 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통일교육의 접근방향

가. 통일교육을 구성하는 관계형성의 네 가지 차원

통일은 남한과 북한이라는 양 체제만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 차원으로부터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평화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평화교육은 인간을 둘러싼 다층적인 관계 속에서 갈등이 발생되고 경험되며 또한 극복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평화교육을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통일교육은 우리 삶의 평화문제를 둘러싼 다층적인 관계의 영역에서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평화능력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삶 속에서 맺게 되는 관계에 대한 다층적인 차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문제해결의 양식과 평화능력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을 둘러싼 다층적인 관계 속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

여 살펴볼 수 있다.

(1) 자기 자신과의 관계

첫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통일의 문제는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환원될 것이다. 여기에서 평화적인 통일의 과정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기존의 역사 속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민족이라는 정체성, 세계시민이라는 정체성을 조화롭게 통합해 내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현재까지 역사 속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권력을 지닌 어느 한 쪽에 의해 정체성이 억압되고 말살되어 동일한 정체성 아래에서 획일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비평화적인 과정은 다시 새로운 구조적 폭력으로서 통일을 방해하는 분단 고착화 과정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역사적 삶에 근거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고무하고 격려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는 남한 또는 북한의 주민으로서의 정체성과 한민족이라는 정체성, 세계시민이라는 정체성이 인간의 심리적 구조 속에서 조화로운 인격체로 형성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2) 개인간의 관계

개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통일의 문제는 차이를 지닌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경험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은 학습자들이 서로 다른 개인들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표면적인 갈등 해결의 기술만으로는 형성될 수 없고, 서로간의 다양성과 상이성을 인정하는 근본적인 관용의 태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서로 다른 존재에 대한 관용의 태도는 서로 다른 삶의 역사에 대한 인지

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다양성과 상이성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평화의 문화 속에서 형성될 수 있다.

(3) 집단간의 관계

집단간의 관계에 있어서 통일의 문제는 집단 대 집단으로서의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은 그 동안 상호 이질적인 문화와 풍토 속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키워 왔다. 이러한 적대감은 상대방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고착시키고 주입시키는 교육을 통해 형성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이제까지의 교육에서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형성되어 온 고정관념, 편견, 그리고 상호간에 그릇되게 인식하고 있는 이야기 구조들을 바로잡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이제까지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변화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 상대방의 체제를 하나의 실체로 인정하고, 그 체제가 절대악도 절대선도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바탕하여 편견과 선입견으로 상징되는 분단문화와 분단구조를 비판하고, 이에 따라 형성된 적대적 구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가름과 차별, 적대의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서로를 살리는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선 상호간의 가치에 대해 인정하는 관용의 과정 속에서 남한과 북한은 미래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만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상호간 이질적인 요소와 차이점을 인정하는 관용적 자세를 길러 낸다는 통일교육 본래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4) 전지구적 관계

전지구적 관계에서 통일은 한반도를 넘어선 더 큰 차원에서의 평화를 위한 동료의 발견과정으로 경험될 것이다. 통일을 남한과 북한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함께 같은 곳을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차원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 갈등은 갈등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갈등에만 몰두할 때보다는 갈등 당사자들이 공유된 삶의 목표를 가진 동료임을 깨달을 때 더욱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문제를 푸는 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이 전지구적이고 생태적인 차원에서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동료임을 깨닫게 하고, 이를 위한 공동의 시도를 모색해보는 것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1민족 1국가 체제에 대한 닫힌 태도를 버리고 지나친 민족주의적 사고를 극복하여야 한다. 즉 전지구적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물음은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떻게 전지구적인 맥락 속에서 협력해야 할 존재인가에 대한 문제의 제기이다. 이를 통해 남한과 북한은 전지구적이고 나아가서는 우주적이고 생태적인 차원에서의 평화문화의 형성에 함께 참여하는 동료로서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세계평화와 인류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관계를 형성하는 범주 속에서 통일교육의 내용체계가 새롭게 재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나. 평화문화의 정착을 위한 통일교육

통일교육은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일인 동시에 통일 이후의 보다 가치롭고 의미 있는 삶의 문화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통일교육은 남북한이 서로 합친다는 사실을 넘어서는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통일을 넘어서는 통일교육의 지향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1) 동반자관계(partnership)의 형성

통일교육이 지향해야 할 지점은 한반도 내에서 관계를 설정하는 양식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 개인간의 관계, 집단간의 관계, 그리고 전지구적인 관계 모두에 있어서 동반자적인 관계로 형성되는 것이다. 동반자로서의 관계란 그저 양편이 하나의 제도 속에 합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과 힘을 공유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특히 통일교육은 남한과 북한이 동반자로서 서로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남한 사회에서는 이제까지 줄곧 북한을 적개심의 대상으로 보아 오다가, 최근 대북관계의 변화로 인하여 이러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의 북한 사회의 경제위기를 목격하면서, 남한에서는 여전히 북한을 멸시와 경멸의 대상으로 여기며, 북한 주민들을 이등시민화하는 일종의 인종주의적 태도가 뿌리깊게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경멸과 멸시의 감정 또한 적개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서로간의 편견과 선입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이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아주 멀고 지난한 과정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평화를 창조해나가는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은 동반자로서 서로의 가치와 자원을 공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동반자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만 남한과 북한은 분단으로 인한 양쪽 사회의 상처와 비평화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2) 평화문화의 정착

통일교육은 궁극적으로는 평화문화를 일상적인 삶의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은 일상성 속에 뿌리

내리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분단이 반세기 넘어 계속되면서 분단체제 속에서의 비평화적 삶의 방식이 우리의 일상생활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리며 ‘고착화’하였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려는 통일은 어떤 식으로든 그러한 일상을 획기적으로 타파할 수 있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분단 과정 속에서 비평화적인 삶의 방식이 고착되었기 때문에 전쟁 같은 파국을 상정하지 않는 한 일상에 뿌리박은 지속적인 변화가 아니고서는 통일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며, 통일을 넘어서는 평화문화의 정착 또한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갈라진 남북한을 다시 합치려는 통일교육은 일상 속에 천착하는 기초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일상적인 삶의 문화로서 평화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통일교육이 지향해야 할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일교육은 단지 통일교육의 변화만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이고, 전체적인 교육 구조의 변화, 그리고 삶에 바탕한 문화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평화문화가 정착하는 것이 바로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보는 학교교육의 문제

평화교육은 인류 공동의 선한 가치인 평화를 유지하고(peace keeping) 평화를 만들어 내고(peace making) 그리고 평화를 증진시킬 수(peace improving) 있도록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의식적 노력이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평화란 용어가 매우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있어 무엇보다도 평화란 개념을 교육적 원리 위에서 재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판적 평화론자들은 갈등이나 폭력을 심인적, 소극적 폭력과 구조적, 문화적, 적극적 폭력으로 나누면서 탈정치적 평화주의자들의 입장을 비판한다.³⁾ 즉, 모두가 동의

3) Galtung, Johan(1990), "Violence and Peace", *A Reader in Peace Studies*, (ed.) Smoker, Davies & Munske, Pergamon Press, pp. 9-18

할 수 있는 평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선 구조적 폭력-계급갈등, 성차별, 인종차별, 문화적 폭력, 남북간의 경제 격차-이 정의롭게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평화연구, 평화교육 그리고 평화운동은 동시적인 측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구조적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과 방법은 최대한 비폭력적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평화교육은 비폭력적 갈등 해소 방법을 개발하고 교육시켜야 한다. 따라서 평화교육은 평화를 이루는 가장 평화적인 도구이자 목적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평화교육은 각 사회가 처한 역사적 조건에 따라 구체적 프로그램에서의 차별성을 낳는다. 우리 나라의 평화교육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내외적 요인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비폭력적-전쟁과 같은 폭력적 방법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에 의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여 궁극적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 가치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의식적인 교육활동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⁴⁾ 따라서 평화교육의 내용은 미국 중심의 세계화 전략을 비롯한 불평등한 국제 관계, 민족분단으로 말미암은 남북한간의 문제와 한국전쟁의 극복 과제, 오랜 군부독재로 인한 비평화적 권위주의 문화, 급격한 경제성장 위주의 산업화가 낳은 빈부격차, 지역차별, 성차별, 학력차별 등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모든 핵심주제가 구성적 요인이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평화교육은 무엇보다 일상적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면 평화적, 비폭력적 분위기 속에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성적 차로 인한 갈등도 학교 평화교육의 주요 주제가 된다. 성적 차로 인한 갈등에 대한 해소를 모둠을 구성하여 집단 놀이나 공동체활동 등의 형식으로도 할 수 있고 집단상담 같은 기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국어 시간에 릴레이 글쓰기 등을 통해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한다. 결국 이런 다양한 평화교육 기법을 활용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 도달하여 공부 못하는 아

4) 강순원(2000), 『평화. 인권 교육』, 한울

이 뿐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아이가 겪는 마음의 고통도 이해하게 하여 서로의 벽을 허물게 한다. 그러면서 학벌사회에 대한 비판적 안목도 기르고 미래의 자신에 대한 낙관적 전망도 갖게 된다. 물론 이런 평화교육은 일회성 프로그램에 끝나서는 안된다. 종합적인 틀 안에서 지식적 범주와 가치, 태도적 범주 그리고 다양한 평화교육 기법 등이 조화되어야 한다. 이런 학급내 갈등해소를 위한 평화교육은 무엇보다 교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 자신이 학급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할지도 모른다는 가정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다양한 갈등모형을 가상으로 전제하여 몇 개의 실험안을 만들어 가면서 평화교육적 가치가 학급 내에서 어떻게 구현될지를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게 되면 교실이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새로운 교육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은 평화교육적 지향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첫째 학교 풍토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학교는 기본적으로 입시준비를 위한 경쟁체제이다. 사회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준비로서 학교에서 먼저 이겨야 한다. 경쟁의 유일 기준은 성적이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과외는 물론이고 때에 따라 컨닝도 불사한다. 규칙은 존중해서 지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생활기록에 나쁘게 남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저 따를 뿐이다. 이렇듯 ‘나’도 없고 ‘남’도 없고 그래서 ‘우리’도 없는 학교풍토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적 문화로 바꾸어야 한다. 유네스코도 21세기 교육보고서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⁵⁾ 앞으로 사회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되어 가고 갈등이 심화될 것 같은 예견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키우기는 매우 중요한 학습목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평화교육적 가치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속에서 교육과정이 입시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교과서도 입시와 관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과적 내용이 아닌 주제는 제대로 다루어질 수도 없고 다룰 시간도 없는 실정

5) Report to UNESCO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1996), *Learning : The Treasure Within*, UNESCO

이다. 현재 다양한 교육방법을 제시하여 실천하고자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에서 지배적인 형식은 교과서 중심의, 그리고 교사가 주도하는 입시 적응형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방과 후 교육활동이나 특별활동도 대부분 특기·적성에 관련된 교과활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나 우리 주변의 문제를 이해하고 더불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현재와 같이 반강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전환이 안된 상태에서 점수따기식 활동 과정으로 이해할 뿐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은 지식을 외워 소비해 버리는 형태에서 벗어나 지식을 생산하고 응용하여 사회에 적절히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단일 교과적인 내용을 암기하여 입시에서 소비해 버리는 그런 교육으로는 창의력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가 없다.⁶⁾ 따라서 호기심, 문제제기, 자기 표현, 참여, 비판적 사고 등의 평화교육적 기법이 실제 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 사회문제와 관련된 핵심적 주제들과 대안적 기법들이 교과간 학습(Cross-subject study) 혹은 중핵과정(core course)으로 제시되고 있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 환경은 세계인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 보편적인 핵심주제일 것이다. 따라서 교과주의적 교육과정 연구를 이제는 통합형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셋째, 평화교육을 실천하기 어려운 조건 중의 하나가 교사와 학부모의 태도이다. 평화교육이 학교나 가정에서 제대로 실천되느냐 못되느냐는 전적으로 교사나 학부모에게 달려 있다. 하지만 교사들의 경우 평화교육에 대한 인지도도 매우 낮고 또한 교과전공자로서의 자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평화교육은 자기 과목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과서에 독립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 교사지침서에 참고사항으로라도 나와 있지 않으면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

6) 김성재(1999), “교육개혁에 대한 발상의 대전환 : 하나의 세계체제와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국가발전 전략과 교육개혁』, 새교육공동체위원회, 8-20쪽

한다. 그리고 입시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학급과 진도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여유가 없다. 만일의 경우 학부모가 항의할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관심이 없고 교사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평화교육은 사실상 거리가 먼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평화교육이란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보편적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친구끼리 싸웠을 때, 부모님과 갈등이 생겼을 때, 선생님이 싫어졌을 때, 죽고 싶을 때, 성폭행 당했을 때, 남북 통일문제가 궁금해졌을 때, 코소보 어린이가 불쌍해졌을 때, 아버지가 실직당했을 때 등등 미시적·거시적 차원의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당당하게, 그러나 폭력적 해결이 아닌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평화교육이다. 따라서 수업시간에도 주제별로 적용시켜 볼 수 있고, 조례나 종례 시간에 짧게 집단활동을 해 볼 수도 있고, 소풍가서도 할 수 있고, 뒤뜰에서의 야영활동 등등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다. 만일 학부모도 함께 참여하게 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이다. 가정은 학교 이상의 교육적 의미를 가진다. 그런 면에서 교사와 학부모는 문제의 원인이자 동시에 해결을 위한 동반자가 된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평화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교육과정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면 사회문제의 반은 이미 평화적으로 해결될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Ⅲ. 학생과 교원의 통일의식 조사 결과

지난 6월 남북한 정상회담은 남한에 거주하는 학생들과 교원들의 의식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본 장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 관련 의식을 통일관과 북한관을 중심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하도록 한다.

1. 통일관

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

남북한 통일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71.2%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드시 이를 필요는 없다”가 14.3%, “현 상태 유지”가 10.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집단별로 살펴 보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초등학생 78.6%, 중학생은 57.0%, 고등학생 54.7%, 대학생 74.4%, 교원 92.6%로서 교원은 절대 다수가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통일을 반드시 이를 필요는 없다”는 응답은 고등학생(23.3%), 중학생(18.3%), 대학생(14.9%), 초등학생(11.3%) 등의 순이었으며, “현 상태 유지”는 중학생(17.7%), 고등학생(16.3%), 대학생(7.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체로 교원, 초등학생, 대학생은 통일의 당위성에 동의하고 있지만, 중고생의 경우 동의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통일교육의 과제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표 III-1>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 분	통일이 되어야 한다	현상태 유지	만드시 이를 필요는 없다	관심없다	전체	유의도
초등학생	475 78.6	39 6.5	68 11.3	22 3.6	604 100.0	$\chi^2 = 249.29435$ $(p < .05)$
중 학생	328 57.0	102 17.7	105 18.3	40 7.0	575 100.0	
고등학생	249 54.7	74 16.3	106 23.3	26 5.7	455 100.0	
대 학생	390 74.4	40 7.6	78 14.9	16 3.1	524 100.0	
교 원	414 92.6	13 2.9	16 3.6	4 0.9	447 100.0	
전 체	1856 71.2	268 10.3	373 14.3	108 4.1	2605 100.0	

나.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물음에 대해 초·중·고·대학생 및 교원 모두가 “매우 그렇다”(29.9%), “그렇다”(46.2%)라고 응답한 반면에 “그렇지 않다”(3.9%), “매우 그렇지 않다”(1.5%)는 반응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전체 집단의 76.1%가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를 각 집단별로 살펴 보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항목을 합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초등학생은 80.3%, 중학생은 67.2%, 고등학생 68.2%, 대학생 79.4%, 교원 85.9%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 항목을 합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초등학생 4.3%, 중학생 7.7%, 고등학생

7.2%, 대학생 5.2%, 교원 2.7%로서 전체적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태도는 교원 집단 및 대학생, 초등학생 등에서 80%대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표 III-2> 통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유의도
초등학생	244 40.3	242 40.0	93 15.4	18 3.0	8 1.3	605 100.0	$\chi^2 = 124.66533$ ($p < .05$)
중 학생	146 25.3	242 41.9	145 25.1	31 5.4	13 2.3	577 100.0	
고등학생	82 17.9	231 50.3	113 24.6	21 4.6	12 2.6	459 100.0	
대 학생	161 30.7	255 48.7	81 15.5	22 4.2	5 1.0	524 100.0	
교 원	148 33.0	237 52.9	51 11.4	11 2.5	1 0.2	448 100.0	
전 체	781 29.9	1207 46.2	483 18.5	103 3.9	39 1.5	2613 100.0	

다. 통일 미래상

통일 이후의 사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통일 이후 국가발전, 사회혼란, 개인의 행복과 관련하여 질문하였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 항목에 나타난 바와 같다.

(1) 통일과 국가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통일과 국가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통일이 되면 국가가 발전할 것이다’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26.7%, “그렇다”는 응답이 35.4%인 반면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3.2%,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9%였다. 결국 전체 집단의 62.1%가 통일이 되면 우리 나라가 발전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조사 결과를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항목을 합쳐서 통일이 되면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초등학생은 71.3%, 중학생은 51.8%, 고등학생 49.1%, 대학생 63.8%, 교원 62.1%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 항목을 합친 통일 이후 국가발전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은 초등학생 11.5%, 중학생 25.7%, 고등학생 25.5%, 대학생 14.8%, 교원 7.6%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통일 이후 국가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교원 집단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지만, 중·고등학생들은 통일 이후 발전에 대해 약간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 통일이 되면 우리 나라가 발전할 것이다

(단위: 명,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유의도
초등학생	237 39.4	192 31.9	103 17.1	53 8.8	16 2.7	601 100.0	$X^2=183.52776$ $(p<.05)$
중학생	133 23.1	165 28.7	129 22.4	106 18.4	42 7.3	575 100.0	
고등학생	76 16.6	149 32.5	116 25.3	94 20.5	23 5.0	458 100.0	
대학생	126 24.1	207 39.7	112 21.5	61 11.7	16 3.1	522 100.0	
교원	123 27.5	208 46.5	82 18.3	29 6.5	5 1.1	447 100.0	
전체	695 26.7	921 35.4	542 20.8	343 13.2	102 3.9	2603 100.0	

(2) 통일과 사회혼란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통일 이후 사회 혼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통일이 되면 사회가 혼란해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12., “그렇다”는 응답이 33.6%인 반면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7.6%,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2%였다. 통일 이후 사회가 혼란해질 것이라는 응답(45.6%)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24.8%)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 통일이 되면 사회가 혼란해질 것이다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유의도
초등학생	51 8.5	93 15.6	205 34.3	157 26.3	92 15.4	598 100.0	$\chi^2 = 361.96062$ $(p < .05)$
중학생	82 14.3	194 33.9	170 29.7	100 17.5	27 4.7	573 100.0	
고등학생	88 19.3	208 45.5	114 24.9	36 7.9	11 2.4	457 100.0	
대학생	74 14.1	254 48.4	130 24.8	46 8.8	21 4.0	525 100.0	
교원	17 3.8	124 27.8	150 33.6	118 26.5	37 8.3	446 100.0	
전체	312 12.0	873 33.6	769 29.6	457 17.6	188 7.2	2599 100.0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항목을 합친 통일 이후 사회가 혼란할 것이라는 우려가 초등학생은 24.1%, 중학생은 48.2%, 고등학생 64.8%, 대학생 62.5%, 교원 31.6%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 항목을 합친 응답은 초등학생 41.7%, 중학생 22.2%, 고등학생 10.3%, 대학생 12.8%, 교원 34.8%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통일 이후 사회가 혼란할 것이라는 우려는 중·고·대학생 집단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교원 및 초등학생 집단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3) 통일과 나의 행복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통일과 나의 행복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통일이 되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물음에 전체적으로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11.9%, “그렇다”는 응답이 18.7%인 반면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6.9%,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0%로서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약간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5> 통일이 되면 나는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단위: 명,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유의도
초등학생	149 24.9	161 26.9	207 34.6	51 8.5	31 5.2	599 100.0	$\chi^2 = 312.34990$ (p<.05)
중학생	50 8.7	85 14.8	260 45.4	130 22.7	48 8.4	573 100.0	
고등학생	16 3.5	44 9.6	247 54.0	118 25.8	32 7.0	457 100.0	
대학생	46 8.8	86 16.4	294 56.1	80 15.3	18 3.4	524 100.0	
교원	47 10.5	111 24.9	225 50.4	61 13.7	2 0.4	446 100.0	
전체	308 11.9	487 18.7	1233 47.4	440 16.9	131 5.0	2599 100.0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항목을 합친 통일 이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초등학생은 51.8%, 중학생은 23.5%, 고등학생 13.1%, 대학생 25.2%, 교원 35.4%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 항목을 합친 부정적인 반응은 초등학생 13.7%, 중학생 31.1%, 고등학생 32.8%, 대학생 18.7%, 교원 14.1%였다.

결국 통일 이후 나의 삶이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초등학생, 교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는 행복해질 것이라는 응답보다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라.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1)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현 정부의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표 III-6>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지원해야 한다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관심이없다	전체	유의도
초등학생	444 73.4	64 10.6	97 16.0	605 100.0	$\chi^2 = 204.34039$ (p<.05)
중학생	320 55.7	128 22.3	127 22.1	575 100.0	
고등학생	266 58.2	94 20.6	97 21.2	457 100.0	
대학생	403 76.9	66 12.6	55 10.5	524 100.0	
교원	405 91.0	25 5.6	15 3.4	445 100.0	
전체	1838 70.5	377 14.5	391 15.0	2606 100.0	

북한에 대한 우리의 지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심이 없다”가 15.0%,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가 14.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집단별로 살펴 보면,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초등학생 73.4%, 중학생은 55.7%, 고등학생 58.2%, 대학생 76.9%, 교원 91.0%로서 교원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중학생(22.3%), 고등학생(20.6%), 대학생(12.6%), 초등학생(10.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2) 평화와 화해협력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교원들은 남북간의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표 III-7> 남북간의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우선적 과제

(단위: 명, %)

구분	남북한평화협정체결	북한에 대한 지원	교류협력 확대	주변국가와 공조관계유지	확고한 안보 구축	전체	유의도
초등학생	329	101	81	57	30	598	$\chi^2=345.55823$ (p<.05)
	55.0	16.9	13.5	9.5	5.0	100.0	
중학생	216	70	158	76	47	567	
	38.1	12.3	27.9	13.4	8.3	100.0	
고등학생	133	41	199	29	49	451	
	29.5	9.1	44.1	6.4	10.9	100.0	
대학생	177	27	251	5	61	521	
	34.0	5.2	48.2	1.0	11.7	100.0	
교원	200	25	151	7	62	445	
	44.9	5.6	33.9	1.6	13.9	100.0	
전체	1055	264	840	174	249	2582	
	40.9	10.2	32.5	6.7	9.6	100.0	

전체적으로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교류 협력 확대”, “북한에 대한 지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앞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고등학생을 제외한 모든 집단이 남북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평화와 화해 협력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류 협력 확대”가 44.1%로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평화협정 체결”에 응답하고 있다.

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견

다음으로 지난 6월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물었다.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은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사회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남북 화해협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 회담이 통일실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의 세가지 항목이었다.

먼저 지난 6월 13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22.8%, “그렇다”가 39.3%, “보통이다”가 28.2%, “그렇지 않다”가 7.2%, “매우 그렇지 않다”가 2.5%로 나타났다. 대체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친 62.1%의 응답자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반응하였다.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쳐 북한 사회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초등학생 71.4%, 중학생은 58.0% 고등학생 58.5%, 대학생 52.6%, 교원 69.4%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를 합쳐서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그리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응답은 고등학생(12.8%), 중학생(12.6%), 대학생(11.2%) 등의 순이었다.

위의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집단에서 이번 정상

회답이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과 교원은 70%대의 응답자가 북한사회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 III-8> 북한사회 이해 증진에 기여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않 다	전체	유의도
초등학생	229 38.4	197 33.0	127 21.3	25 4.2	19 3.2	597 100.0	$\chi^2=169.44376$ $(p<.05)$
중학생	113 20.0	215 38.0	167 29.5	49 8.7	22 3.9	566 100.0	
고등학생	67 15.3	189 43.2	126 28.8	41 9.4	15 3.4	438 100.0	
대학생	80 15.7	188 36.9	185 36.3	50 9.8	7 1.4	510 100.0	
교원	93 21.1	213 48.3	115 26.1	19 4.3	1 0.2	441 100.0	
전체	582 22.8	1002 39.3	720 28.2	184 7.2	64 2.5	2552 100.0	

다음으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남북한 화해와 협력에 도움을 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34.6%, “그렇다”가 45.7%, “보통이다”가 16.0%, “그렇지 않다”가 2.2%, “매우 그렇지 않다”가 1.6%로 나타났다. 대체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친 80.3%의 응답자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각 집단별로 살펴 보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쳐 남북한 화해와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초등학생 80.1%, 중학생은 72.0%, 고등학생 81.2%, 대학생 83.4%, 교원 86.4%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를 합쳐서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중학생(7.3%) 이외에는 5%대 이하의 낮은 응답을 하였다.

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집단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원, 대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등의 순으로 80% 이상의 응답자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표 III-9> 남북한 화해와 협력에의 기여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유의도
초등학생	279 46.7	200 33.4	97 16.2	13 2.2	9 1.5	598 100.0	$\chi^2=146.51748$ $(p<.05)$
중학생	188 33.3	218 38.7	117 20.7	23 4.1	18 3.2	564 100.0	
고등학생	115 26.3	240 54.9	65 14.9	6 1.4	11 2.5	437 100.0	
대학생	181 35.3	247 48.1	71 13.8	12 2.3	2 0.4	513 100.0	
교원	121 27.4	261 59.0	59 13.3	1 0.2		442 100.0	
전체	884 34.6	1166 45.7	409 16.0	55 2.2	40 1.6	2554 100.0	

마지막으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통일실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29.5%, “그렇다”가 40.1%, “보통이다”가 22.6%, “그렇지 않다”가 5.4%, “매우 그렇지 않다”가 2.3%로 나타났다. 대체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친 69.6%의 응답자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통일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조사 결과를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

쳐 통일실현을 앞당길 것이라는 응답이 초등학생 79.7%, 중학생은 63.5%, 고등학생 62.4%, 대학생 67.4%, 교원 73.9%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를 합쳐서 통일 실현에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응답은 중학생(12.1%), 고등학생(10.3%), 대학생(7.9%) 등의 순이었다.

모든 집단에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이번 정상회담이 통일실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초등학생과 교원의 기대 수준이 가장 높았다.

<표 III-10> 통일실현을 앞당길 것이다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유의도
초등학생	301 50.5	174 29.2	94 15.8	18 3.0	9 1.5	596 100.0	$\chi^2 =$ 239.89220 ($p < .05$)
중학생	163 29.0	194 34.5	138 24.5	45 8.0	23 4.1	563 100.0	
고등학생	78 17.8	195 44.6	119 27.2	27 6.2	18 4.1	437 100.0	
대학생	126 24.9	215 42.5	125 24.7	32 6.3	8 1.6	506 100.0	
교원	83 18.8	243 55.1	98 22.2	16 3.6	1 0.2	441 100.0	
전체	751 29.5	1021 40.1	574 22.6	138 5.4	59 2.3	2543 100.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들과 교원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을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이번 북한 방문 과정에서 대중매체를 통해 본 북한의 모습에 대해 학생들이 북한 사회를 좀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북한

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북한관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 지도층과 일반 주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 북한지도층에 대한 인식

북한 지도층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지도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전체적으로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라는 응답이 7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계하고 싸워야 할 적”이라는 응답이 16.5%, “관련없는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응답이 12.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층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경계하고 싸워야할 적		관련없는 다른나라사람		함께 살아야 할 이웃		전체		유의도
	1999년	2000년	1999년	2000년	1999년	2000년	1999년	2000년	
초등학생		44 7.4		42 7.0		510 85.6		596 100.0	X ² = 204.74334 (p<.05)
중학생	490 54.6	89 15.7	186 20.7	110 19.4	221 24.6	368 64.9	897 100.0	567 100.0	
고등학생	440 49.7	81 18.1	169 19.1	94 21.0	276 31.2	273 60.9	885 100.0	448 100.0	
대학생	180 56.4	138 27.0	32 10.	55 10.8	107 33.5	318 62.2	319 100.0	511 100.0	
교원	255 52.4	69 16.1	33 6.8	10 2.3	199 40.9	349 81.5	487 100.0	428 100.0	
전체	1365 52.7	421 16.5	420 16.2	311 12.2	803 31.0	1818 71.3	2588 100.0	2550 100.0	

※ 지난해 조사대상에서 교원은 교원을 비롯하여 사회교육기관 담당자, 강사요원 임. 따라서 올해 조사대상의 초·중등교원과 유사한 신분을 지닌 집단이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함.

조사결과를 각 집단별로 살펴 보면,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라는 응답이 초등학생 85.6%, 중학생은 64.9%, 고등학생 60.9%, 대학생 62.2%, 교원 81.5%로서 초등학생과 교원집단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하고 있다. 한편 “경계하고 싸워야 할 적”이라는 응답은 대학생(27.0%), 고등학생(18.1%), 교원(16.1%), 중학생(15.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체로 모든 집단에서 북한의 지도층도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라는 반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99년의 조사 결과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 이것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가져온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북한 일반주민들에 대한 인식

북한의 일반주민과 학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표 III-12> 북한 일반주민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경계하고 싸워야할 적		관련없는 다른나라사람		함께 살아야 할 이웃		전체		유의도
	1999년	2000년	1999년	2000년	1999년	2000년	1999년	2000년	
초등학생		20 3.4		38 6.4		537 90.3		595 100.0	$\chi^2=102.09773$ (p<.05)
중학생	23 2.5	37 6.5	123 13.6	78 13.6	756 83.8	457 79.9	902 100.0	572 100.0	
고등학생	33 3.7	14 3.1	101 11.4	56 12.5	749 84.8	377 84.3	883 100.0	447 100.0	
대학생	8 2.5	14 2.7	21 6.6	26 5.0	291 90.9	476 92.2	320 100.0	516 100.0	
교원	14 2.8	5 1.1	15 3.0	5 1.1	463 94.1	431 97.7	492 100.0	441 100.0	
전체	78 3.0	90 3.5	260 10.0	203 7.9	2259 87.0	2278 88.6	2597 100.0	2571 100.0	

관련한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라는 응답이 8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계하고 싸워야 할 적”이라는 응답이 3.5%, “관련없는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응답이 7.9% 순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로 살펴 보면,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라는 응답이 초등학교 90.3%, 중학생은 79.9%, 고등학생 84.3%, 대학생 92.2%, 교원 97.7%로서 교원, 대학생, 초등학교 등의 순으로 높은 반응을 하고 있다. 한편 “경계하고 싸워야 할 적”이라는 응답은 중학생 6.5%를 비롯하여 대체로 모든 집단이 3%대 이하로 응답하였다.

대체로 모든 집단에서 북한의 일반주민과 학생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라는 반응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친근감은 북한의 지도층에 대한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지난해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친근감, 신뢰도, 근면성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북한 주민이 친근하게 느껴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8.5%, “그렇다”는 응답이 23.8%인 반면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0.7%,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5%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 주민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감정과 그렇지 않다는 감정이 다소 엇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집단별로 살펴 보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항목을 합쳐 북한 주민을 친근하게 느끼고 있다는 응답이 초등학교는 41.0%, 중학생은 25.0%, 고등학생 22.8%, 대학생 25.2%, 교원 47.4%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 항목을 합친 북한 주민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19.8%, 중학생 31.8%, 고등학생 34.2%, 대학생 31.3%, 교원 13.5%로 나타났다.

대체로 교원 및 초등학교는 북한 주민을 친근하게 느낀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에, 중·고·대학생 집단은 북한 주민을 그리 친근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북한 주민이 친근하게 느껴진다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않 다	전체	유의도
초등학생	94 15.5	154 25.5	237 39.2	80 13.2	40 6.6	605 100.0	X ² = 203.47668 (p<.05)
중학생	50 8.7	94 16.3	249 43.2	138 24.0	45 7.8	576 100.0	
고등학생	13 2.8	92 20.0	197 42.9	130 28.3	27 5.9	459 100.0	
대학생	20 3.8	112 21.4	228 43.5	135 25.8	29 5.5	524 100.0	
교원	44 9.8	169 37.6	175 39.0	59 13.1	2 0.4	449 100.0	
전체	221 8.5	621 23.8	1086 41.6	542 20.7	143 5.5	2613 100.0	

다음으로 ‘북한 주민이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2%, “그렇다”는 응답이 18.0%이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9.6%,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9%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이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응답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다소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를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항목을 합쳐 북한 주민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응답이 초등학생은 38.0%, 중학생은 19.2%, 고등학생 15.5%, 대학생 18.4%, 교원 21.5%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 라는 응답도 초등학생 19.0%, 중학생 30.4%, 고등학생 34.2%, 대학생 21.1%, 교원 18.3%로 나타났다.

대체로 초등학생은 북한 주민을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신뢰하고 있는

반면에 그 이외의 집단들은 대체로 북한 주민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4> 북한 주민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않 다	전체	유의도
초등학생	76 12.7	152 25.3	258 43.0	79 13.2	35 5.8	600 100.0	$\chi^2=199.01417$ ($p<.05$)
중학생	17 3.0	93 16.2	290 50.4	130 22.6	45 7.8	575 100.0	
고등학생	11 2.4	60 13.1	230 50.3	126 27.6	30 6.6	457 100.0	
대학생	14 2.7	82 15.7	315 60.5	98 18.8	12 2.3	521 100.0	
교원	16 3.6	80 17.9	268 60.1	76 17.0	6 1.3	446 100.0	
전체	134 5.2	467 18.0	1361 52.4	509 19.6	128 4.9	2599 100.0	

다음으로 ‘북한 주민이 근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12.6%, “그렇다”는 응답이 34.8%인 반면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6%,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7%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5% 이상이 북한주민은 근면한 사람들이라고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를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항목을 합쳐 북한 주민이 근면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초등학생은 36.4%, 중학생은 49.1%, 고등학생 43.9%, 대학생 51.7%, 교원 58.1%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 라는 응답은 초등학생 10.2%, 중학생 11.8%, 고등학생 13.8%, 대학생 8.7%, 교원 6.4%로

나타났다.

대체로 교원,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의 순으로 북한 주민이 근면하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5> 북한 주민들은 근면한 사람들이다

(단위: 명,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않 다	전체	유의도
초등학생	89 14.8	130 21.6	321 53.4	43 7.2	18 3.0	601 100.0	$\chi^2 = 140.52299$ ($p < .05$)
중학생	101 17.5	182 31.6	225 39.1	42 7.3	26 4.5	576 100.0	
고등학생	47 10.3	154 33.6	194 42.4	47 10.3	16 3.5	458 100.0	
대학생	47 9.0	224 42.7	207 39.5	39 7.4	7 1.3	524 100.0	
교원	43 9.7	215 48.4	158 35.6	26 5.9	2 0.5	444 100.0	
전체	327 12.6	905 34.8	1105 42.5	197 7.6	69 2.7	2603 100.0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은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9.8%, “그렇다”는 응답이 26.0%인 반면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5.0%,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6%로 나타났다. 대체로 북한 주민들이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각 집단별로 살펴 보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항목을 합쳐 북한 주민들이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초등학생은 57.8%, 중학생은 33.7%, 고등학생 21.6%, 대학생 27.8%, 교원 33.0%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 라는 응답이

초등학생은 18.5%, 중학생 23.6%, 고등학생 28.0%, 대학생 15.6%, 교원 12.1%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서로 도와 가며 사는 주민이라는 응답은 초등학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반응은 고등학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16> 북한 주민들은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유의도
초등학생	149 24.8	198 33.0	142 23.7	69 11.5	42 7.0	600 100.0	$\chi^2 = 388.26469$ (p < .05)
중학생	57 9.9	137 23.8	246 42.7	93 16.1	43 7.5	576 100.0	
고등학생	19 4.1	80 17.5	231 50.4	103 22.5	25 5.5	458 100.0	
대학생	17 3.2	129 24.6	296 56.5	74 14.1	8 1.5	524 100.0	
교원	13 2.9	134 30.1	244 54.8	52 11.7	2 0.4	445 100.0	
전체	255 9.8	678 26.0	1159 44.5	391 15.0	120 4.6	2603 100.0	

다. 남북한 차이에 대한 인식

남북한 사회의 전반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청소년의 생활태도, 주민들의 생각, 언어생활, 전통적인 풍습, 의식주 생활방식, 음악·미술등의 예술, 정치이념과 제도 등의 일곱개 항목에 대한 남북 차이의 인식을 물었다. 차이에 대한 인식은 대상 집단 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집단의 반응 경향을 함께 제시해보기로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사대상들은 남북한 사회가 많이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생활태도, 주민들의 생각, 언어생활, 음악·미술 등의 예술, 정치이념과 제도 등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남북한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한이 이들 항목에 대해서 다르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0~80%정도 혹은 그 이상이다. 의식주 생활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의 56.3%가 남북한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전통적인 풍습에 대해서는 44.9%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7> 남북한 차이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매우 다르다	다소 다르다	다소 비슷하다	매우 비슷하다	전체
청소년의 생활태도	1429 54.8	877 33.7	277 10.6	23 0.9	2606 100.0
주민들의 생각	854 32.8	1184 45.5	525 20.2	38 1.5	2601 100.0
언어생활	672 25.8	1345 51.6	532 20.4	58 2.2	2607 100.0
전통적인 풍습	267 10.3	902 34.6	1223 47.0	212 8.1	2604 100.0
의식주 생활방식	428 16.4	1035 39.7	978 37.5	166 6.4	2607 100.0
음악·미술 등의 예술	654 25.2	1191 45.8	667 25.7	88 3.4	2600 100.0
정치이념과 제도	1692 65.1	630 24.2	234 9.0	42 1.6	2598 100.0

라. 북한 문화에 대한 인식

북한 문화에 대한 소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우상화 문

화”라는 응답이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름대로 독특성을 지닌 문화”가 21.9%, “우리 문화 발전의 소중한 자료”가 16.3%, “전통을 현대화했다”는 응답이 11.1% 순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로 살펴 보면, “우상화 문화”라는 응답이 초등학생 38.6%, 중학생은 60.7%, 고등학생 66.3%, 대학생 49.0%, 교원 40.8%로서 고등학생, 중학생 등이 이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나름대로 독특성을 지닌 문화”라는 응답은 교원(34.3%), 초등학생(23.3%), 대학생(20.8%) 등의 순이었으며, “우리 문화 발전의 소중한 자료”는 초등학생(23.7%), 대학생(18.1%), 교원(14.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체로 모든 집단에서 북한의 문화가 우상화 문화라는 특성에 동의하고 있으면서도, 교원, 대학생, 초등학생 등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독특성을 지닌 문화로서 우리 문화 발전의 소중한 자료라는 인식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8> 북한 문화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우상화 문화	나름대로 독특성 지닌 문화	전통을 현대화함	우리문화 발전의 소중한 자료	전체	유의도
초등학생	233 38.6	141 23.3	87 14.4	143 23.7	604 100.0	$\chi^2 = 155.35686$ ($p < .05$)
중학생	349 60.7	99 17.2	56 9.7	71 12.3	575 100.0	
고등학생	301 66.3	68 15.0	35 7.7	50 11.0	454 100.0	
대학생	257 49.0	109 20.8	63 12.0	95 18.1	524 100.0	
교원	183 40.8	154 34.3	47 10.5	65 14.5	449 100.0	
전체	1323 50.8	571 21.9	288 11.1	424 16.3	2606 100.0	

3. 통일의식의 변화와 통일교육의 과제

가. 통일의 가능성과 필요성 인정

이번 통일의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생과 교원들은 통일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먼저 통일의 가능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76.1%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통일의 당위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71.2%가 동의하고 있다. 특히 통일의 당위성은 지난해에 59%가 동의하였는데 비해서 올해에는 현저하게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6월 13일 남북정상회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95%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통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고 응답하였다.⁷⁾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중·고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남북정상회담으로 통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가라는 질문에 29.9%가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하였다.”⁸⁾는 것이다.

한편 통일 이후의 사회는 다소 혼란스러울 것이지만 국가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일 이후의 생활에 대하여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비관적인 기대보다 다소 많다. 통일 이후의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증가하는 현상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통일을 개인의 행복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통일되면 개인적으로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고 보는 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이 특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결국 학생들은 통일을 개인적인 행복과 연관지어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통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이버설문조사 결과 참조.(홈페이지 <http://www.acdpu.go.kr>).

8) 전교조 보도자료, 7월 21일자, <http://cham.ktu.or.kr/>

일 문제를 개인의 행복과 관계없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통일 문제에 대하여 그 만큼 관심이 적을 것이며 통일에 관련되는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고등학생들이 통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통일의 가능성을 전망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생들은 통일 이후의 국가 발전, 사회 안정, 개인의 행복 등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고등학생들은 통일이 되면 사회가 혼란해 질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높고 개인적으로 행복해 질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낮다.

나.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변화

이번 조사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해소되고 우호적인 인식으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특히,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층에 대한 인식이 ‘싸워야 할 적’으로서의 인식에서 ‘함께 살아야 할 이웃’으로 변화하였다.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은 북한의 지도층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과 학생들에 대한 인식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학생이나 교원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한편, 북한 지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지난해에는 51.8%가 동의하였는데 올해에는 70.5%로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교원들은 91%가 북한 지원에 동의하고 있으며, 중학생들이 55.7%로서 가장 낮은 동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북한 지원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은 교원을 비롯하여 전체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과 교원들은 북한 사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북한 주민에 대하여 친근감과 신뢰감을 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고등학생들이 북한 주민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친근감에서 22.8%, 신뢰감에서 15.5%만이 응답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근면성에 대한 평가는 다

른 요소보다는 높게 나타나 근면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학생과 교원들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이루어진 다른 의견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의 양서중학교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계기로 하여 5월과 6월에 실시한 의견 조사⁹⁾를 보면 북한을 대등한 협력 관계로 보는 학생들의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김정일을 포함한 북한 지도자들은 물러나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약화된 반면(48%→14%), ‘대등한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강화되었다(34%→51%).

그 동안의 경향을 보면 국민들은 북한에 대하여 대체로 무관심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북한을 협력 또는 지원 대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북한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지만 이러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사회의 변화와 개방 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의 변화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¹⁰⁾

북한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과거의 적대적인 인식에서 최근에는 우월 의식 또는 비교 우위 의식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도 학생들의 통일 백일장에서는 “전화도 TV도 없는 북한 아이들은 정말로 불쌍하다”라든지, “통일이 되면 북한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실컷 밥을 먹이겠다”라는 글¹¹⁾이 등장하는 것으로 여전히 북한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사회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한 탈북 학생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학교 친구들은 북한을 무조건 못 사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9) 이정화, 통일 및 북한교육의 방향과 어려운 점, 한국교총, 한국정치학회 공동 주최, 교육정책토론회,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 자료, 2000. 7. 5

10) 통일연구원, 「1999년도 통일 문제 여론조사」, 1999; 민족화해협력범국민 협의회, ‘청소년 통일의식 여론조사 결과보고’, 1999(<http://www.kcrc.or.kr/>)

11) 한겨레신문, 7월 10일자, ‘부정적 청소년 통일관’.

보고 친구들이 하는 말은 ‘정말로 그렇게 못 사냐’, ‘거기서 살 때 뭘 먹었느냐’, ‘북한에도 저런 자동차가 있느냐’는 식이에요. 그럴 땐 정말 대답하기 싫죠. 애들은 이북 사람들은 다 거지처럼 사는 줄 알고 있어요. TV에서 그런 것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¹²⁾

북한 사회에 대한 보도에서 열악한 측면을 집중적으로 비취주는 것은 남북 관계를 우열관계로 보고 남한의 우월 의식을 갖게 하는 데 영향을 준다. ‘북한의 경제 상황은 나쁘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도와주어야 하는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은 북한 주민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북한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남북한 주민들간의 동반자적 인식을 약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동정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의 한편에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북한 문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서 나타난다. 학생들은 북한 문화에 대하여 이상화 문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50.8%)고 판단하고 있으며, 북한 문화를 나름대로 독특성을 지닌 문화(21.9%)라거나 전통을 현대화시킨 문화(11.1%) 또는 우리 문화 발전의 소중한 자료(16.3%)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로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에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 통일의식의 변화 요인으로서 남북관계

남북정상회담은 우리의 통일의식을 변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무엇보다도 남북의 주민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이다. 조사 결과가 보여 주듯이 교원과 학생들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

12) 지난 6월에 있었던 한 탈북 학생과의 인터뷰 내용

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에 도움을 주었으며, 통일을 실현하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관계의 우호적 변화라는 환경요인 만큼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더 중요한 요인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서울과 평양에서 몇 차례에 걸쳐 공연한 소년 예술단의 솜씨는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 북한의 예술은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한다거나,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찬양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들의 공연을 통하여 우리 민족 예술의 전통을 나름대로 계승 발전시켜 왔으며, 우리와는 다른 북한 예술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TV를 통하여 드러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습은 남한 주민들이 가져 온 선입관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내성적이고 괴팍한 지도자, 부도덕하고 무능한 은둔자라는 식으로 언론을 통하여 심어준 그의 모습은 활달하면서도 예의바르고 윗사람과 여성을 배려할 줄 아는 인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북한 사회 또는 김정일을 비롯한 지배 세력에 대하여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이들은 그들의 행동이 철저히 계산된 연출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변화할 것인지, 그들이 믿을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유보적인 자세는 우리 사회에서 전쟁을 체험한 기성세대의 체험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전쟁을 통하여 북한과 몸소 싸워 본 경험을 가진 전쟁 세대의 체험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혈육과 재산을 온통 빼앗긴 피해자들의 역사적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그 동안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에서 북한 관련 정보가 통제되었기 때문이며, 정치적 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강화되어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북한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전쟁 도발 세력으로 간주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적’으로 인식하는 강력한 반공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국내의 정치적 안정과 통합을 도모하는 냉전 시대의 결과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또는 우리 민족의 분단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주변 강대국의 이해가 개입되기도 하고, 강대국의 무책임한 언론, 그리고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냉전적 대결 체제에서 파생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통일의식의 변화는 남북 관계와 정치적 상황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국민과 학생들의 북한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 이 모든 것은 남북 관계와 정치적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냉전시대 반공 교육은 교육 내부의 문제가 결코 아니며 남북 관계와 정치적 환경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결적이며 경쟁적인 남북 관계가 지속되면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어 왔다. 여기에 집권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반공 교육과 이데올로기교육을 주도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통일의식 조사 결과를 통하여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남북 관계의 변화가 북한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일의식의 변화를 초래하는 데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의 의식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남북 관계를 비롯한 통일 환경의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남북 관계를 비롯한 정치적 상황, 언론 매체의 북한 보도 성향, 사회적 여론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통일관을 함양하려면 우선 남북한 관계를 상호 협력적 관계로서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언론매체는 북한과 통일 문제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북한의 현실과 통일 상황을 정확히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은 통일과 북한에 관한 정보를 TV를 비롯한 언론 매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¹³⁾ 국민들의 통일의식 형성, 학생들의 건전한

13) 중고교 학생, 대학생 및 사회교육기관 강사들은 북한 관련 정보와 지식의 획득 방법으로서 언론매체는 92.5%를 들고 있는 데 비해서 학교교육은 5.3%에 불과하다.

통일관을 정립하는 데 언론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통일교육의 관점에서 언론의 기본 방향은 언론인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평화공존의 바탕에서 북한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¹⁴⁾ 따라서 언론은 북한에 대한 사실적 보도와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 자세가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일 정책에 대하여 정치권의 개방적인 논의와 합리적인 조정, 그리고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와 통일 정책에 대하여 정치권의 논쟁 과정을 지켜보면서 남북 대화에 앞서 남남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를 말해 주고 있다. 정치권이 통일 문제에 대하여 심층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한다면 교육 현장에서는 통일교육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도 곤란할 것이다. 교사들이 호소하는 통일교육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통일교육의 방향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 합의 과정과 정책 조정 과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라. 변화하는 통일 환경에 대한 개방적 인식

세계는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인 환경도 변화하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도 변화하고 있다. 물론 변화의 속도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남한이나 북한도 변화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 국민이나 학생들의 북한관, 통일관도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적인 환경이 변화하면서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가간의 경제력과 정보력의 경쟁, 교육과 문화 산업의 경쟁 등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또한 세계는 개방되어 있

한만길, “통일교육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9, 50쪽

14) 한만길 외, 앞의 책, 201쪽

는 가운데 국가간의 경쟁과 협력의 관계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개방의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 사회를 개방적인 자세로 바라 볼 필요가 있으며, 통일 문제를 열려 있는 마음으로 우리 민족 스스로 풀어 나가는 자세로 대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이 시기에 북한만을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되지 못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복잡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이 시대에 고정된 틀로서 통일 문제를 대하는 것도 현명한 자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북한과 통일에 대한 논의는 개방적 자세로 임해야 하며, 이러한 개방적 자세로서 통일교육을 접근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 가야 할 때이다. 북한 사회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상을 우리 사회의 일부처럼, 우리 이웃처럼 이해하는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우리 사회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나아가 그들을 우리 동포로서 포용하고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교육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남북 화해 시대의 통일교육은 북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평화 공존의 자세, 그리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목표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¹⁵⁾ 우리 민주주의 체제의 장단점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의 장단점도 비판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상이 무엇인지 찾으려는 개방적이며 유연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세가 진정으로 상대방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려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 실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점에서 북한에 대한 교육에서 체제와 이념 중심에서 탈피하여 생활 문

15) 한만길 외,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9. 12쪽

화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종래의 통일교육은 공산주의 체제, 북한 체제의 현실과 한계를 중심으로 가르쳐 왔다. 이러한 체제와 이념 중심의 통일교육은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을 강조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 문화 중심으로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 의식주 생활, 전통 문화, 관습 등을 가르치면서 우리와 비교해서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남북 화해 시대의 안보 의식은 우리 민족의 번영과 평화 공존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 가능성에 대하여 경계하고 국가의 안전 보장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개방 사회가 전개되면서 국가간의 협력과 경쟁 또는 대결 관계는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서 안보의 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북한은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동반자이자 현실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은 북한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안보 의식을 보다 폭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우리 국토와 체제의 안정뿐만 아니라 남북한을 포함하는 우리 민족 모두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안보의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¹⁶⁾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남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세적이며 소극적인 안보의식에서 남북한 모두의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안보의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군사적인 안보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의 보호, 생명의 안전과 보존, 인권존중, 풍요로운 삶의 조건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안보의 개념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 사회를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사회적 현실을 정확히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을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과 국민

16) 한만길, '개방적 정치교육으로서 통일교육의 과제', 한국정치학회 학술회의 발표 자료, 「세계화와 민주화 시대의 정치와 교육」 1997년 8월 19일

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북한 관련 정보의 개방과 통일관련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필수적이다. 또한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나 사회 각 분야의 국민적인 토론의 장소에서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공개적이며 자유로운 토론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국민 누구나 합리적인 북한관과 건전한 통일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에 대한 이해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통일의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마. 통일의 주인으로서 개인의식의 고양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통일은 가능하고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개인적으로는 통일에 대하여 관심이나 흥미가 부족하고 개인적인 문제와는 별 관련이 없는 이해 관계와 무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통일은 당위적 차원에서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일상적인 삶과는 관련이 없거나 개인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문제로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당위성에 대하여 학생들은 선뜻 대답을 못하거나, 그냥 “한 민족이니까”라고 대답할 뿐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학생들의 부정적 통일관, 통일에 대한 무관심, 통일 기피증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통일의식 조사에서도 학생들은 통일교육에 대하여 관심이 높지 않으며, 통일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사들도 학생들이 통일교육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학교 교육은 통일교육만이 문제는 아니다. 최근 들어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기피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현상을 학교 붕괴 현상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과 정보가 학생들의 생활과 무관하다는 데 기인하기도

한다.¹⁷⁾ 즉,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더 이상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불만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의 내용은 대부분 구체적 삶과 동떨어져 있는 듯한 지식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생생한 활동을 통해 현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지식을 녹여내지 못한다면 학생들에게 그것은 죽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다.

통일의식 조사에서 통일교육에 관심이 없는 이유로서 학생들은 교육내용이 재미가 없거나 수업 방법이 흥미를 끌지 못하는 데 원인을 두고 있는 반면에 교사들은 사회와 국가 문제에 학생들의 관심이 없는데 원인을 찾고 있다. 특히, 통일교육에 관심이 없는 이유로서 고등학생은 교육내용에서 원인을 찾는데 비해서 초등학생은 수업 방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문제는 통일교육 자세의 문제만은 아니며 우리의 학교 교육이 공통적으로 감당해야 할 문제이다.

통일의 문제가 개인의 삶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학생들이 많다. 더욱이 통일이 되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것이고, 그것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난해의 한국교육개발원 설문 조사에서, 학생들이 통일세 징수에 대하여 38.6%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¹⁸⁾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북한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는 이유도 우리 사회 역시 경제적으로 곤란한 계층이 있고 학생들 가운데 결식 아동이나 빈곤 아동이 많은데 북한 주민들까지 도와주는 것은 무리라는 데 있다.

따라서 통일의 문제를 개인적 이익과 결부시켜 논의하는 자세도 필

17) 윤철경 외, 학교붕괴 실태 및 대책 연구(정책연구과제),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197쪽. 학생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지식은 내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27.6%이며,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72.3%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

18) 중학생의 경우 조사대상의 47.1%, 고등학생의 경우 40.5%, 대학생의 경우 28%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요하다. 우선 분단으로 인한 피해와 전쟁의 공포가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어떻게 침투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손실은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분단으로 인하여 사회적 손실로부터 시작하여 개인적 제약, 그리고 분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분단 상황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통일로 인한 이익을 고려하기 이전에 우선 분단으로 인하여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 조건이나 복지 수준에서 낙후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현실주의적 자세에서 볼 때 통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이득을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북한과의 철도 연결을 통한 대륙 진출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득이 발생한다거나, 북한의 지리, 관광지, 주민 생활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던가, 또는 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통일 문제를 지나치게 경제적인 이해 관계나 개인의 이익에 의하여 접근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 즉, 개인적인 이익의 관철이라는 경제적인 논리에 의하여 통일 문제가 다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¹⁹⁾ 그리고 통일이 번거로운 절차에 비용만 많이 든다면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고, 그냥 두 개의 이웃 국가로 공존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는 젊은이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한의 대결과 소모적인 경쟁으로 인한 피해는 해소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즉, 현실적으로 통일을 당장 실현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남북한의 분단체

19) 또 하나의 문화통일 소모임,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도서출판 또 하나의 모임, 1999, 45쪽

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평화적 관계를 증진시킴으로써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사회의 모든 개인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삶과 관련지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민주사회의 주인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되면서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 모두가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서 통일이라는 국가적인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도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통일 사업에 참여하는 자리를 허용하고 그들이 통일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가운데 통일 문제에 대한 개인 의식이 고양될 수 있을 것이다.

IV.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특성

1990년대 이후 국내적으로 사회 민주화에 따른 영향과 국제적으로 동구 사회주의 몰락으로 인하여 통일환경이 변화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학교 통일 교육은 학생들에게 북한과 민족 통일에 대한 좀더 객관적이며 포용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교 통일교육을 살펴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현행 통일교육의 실태를 설문조사를 기초로 하여 살펴보고,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정리한 다음,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남한의 통일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 현행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 통일교육의 방향 등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기초로 하여 살펴보았다.

가.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학생들 자신과 교원들에게 물어보았다. 학생들 자신에게 물어본 질문에서는 초·중·고등학생들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중·고 교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의 관심도는 학교급별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어서 학생들이 통일교육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학생과 교사들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IV-1> 초·중·고등학생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관심이 있다	비교적 관심이 있다	보통 이다	별로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전체	유의도
초등학생	148 24.7	192 32.1	192 32.1	48 8.0	18 3.0	598 100.0	$\chi^2=175.60388$ ($p<.05$)
중학생	49 8.6	161 28.2	194 34.0	126 22.1	41 7.2	571 100.0	
고등학생	20 4.4	97 21.4	191 42.2	108 23.8	37 8.2	453 100.0	
전체	217 13.4	450 27.7	577 35.6	282 17.4	96 5.9	1622 100.0	

먼저, 학생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보면, ‘통일관련 수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매우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13.7%, “비교적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27.7%,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5.6%,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17.4%,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5.9%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통일관련 수업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없다는 응답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통일 관련 수업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매우 관심이 있다’는 응답과 ‘비교적 관심이 있다’ 응답을 합친 것)이 초등학생인 경우 56.8%로 중학생인 경우 36.8%, 고등학생인 경우 25.8%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인 경우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통일 관련 수업에 비교적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통일 관련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정도를 물었다. 이 질문에 전체적으로 “매우 관심있다”는 응답이 7.7%, “비교적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31.4%인 한편,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23.5%,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0.7%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학생들이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관심이 없다고 응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원인 경우 44.1%, 중학교 교원인 경우 36.8%, 고등학교 교원인 경우 37.7%가 학생들이 통일교육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한편 초등학교 교원인 경우 27.9%, 중학교 교원인 경우 26.4%, 고등학교 교원인 경우 24.2%가 학생들이 통일교육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IV-2> 교원들이 인식하는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관심있 다	비교적 관심있 다	보통이 다	별로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전체	유의도
초등학교	14 11.9	38 32.2	33 28.0	32 27.1	1 0.8	118 100.0	$\chi^2=$ 10.71209 (p=.2168)
중학교	10 6.5	47 30.3	57 36.8	40 25.8	1 0.6	155 100.0	
고등학교	10 5.9	54 31.8	73 42.9	32 18.8	1 0.6	170 100.0	
전체	34 7.7	139 31.4	163 36.8	104 23.5	3 0.7	443 100.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지 않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통일교육에 관심이 없는 이유를 알아보았다. 먼저 학생들에게 물었으며 이어서 교원들에게 학생들의 무관심 이유를 물어보았다.

통일관련 수업에 관심이 없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교과서 등 교육내용이 재미없어서”라는 응답이 31.4%, “수업방법이 흥미를 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37.4%, “시험에 나지 않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14.3%, “국가·사회문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17.0%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통일관련 수업에 관심이 없는 이유로 교과서의 내용과 수업방법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인 경우 20.6%, 중학생인 경우 28.2%, 고등학생인 경우 46.8%가 “교과서 등의 교육 내용이 재미없어서”라고 응답한 반면, 초등학생인 경우 41.8%, 중학생인 경우 42.3%, 고등학생인 경우 26.7%가 “수업방법이 흥미를 끌지 못해서”라고 응답하였다. 다시 말해 통일관련수업에 관심이 없는 이유를 초·중학생은 수업방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고등학생은 교과서의 내용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통일관련 수업에 관심이 적은 이유(학생)

(단위: 명, %)

구분	교과서 등 교육내용이 재미없어서	수업방법이 흥미를 끌지 못해서	시험에 나지 않기 때문에	국가·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체	유의도
초등학생	73 20.6	148 41.8	55 15.5	78 22.0	354 100.0	$\chi^2=$ 62.85690 ($p<.05$)
중학생	110 28.2	165 42.3	57 14.6	58 14.9	390 100.0	
고등학생	154 46.8	88 26.7	41 12.5	46 14.0	329 100.0	
전체	337 31.4	401 37.4	153 14.3	182 17.0	1073 100.0	

한편, 교사들은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적은 이유를 다른 쪽에서 찾고 있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교과서 등 교육내용의 문제”라는 응답이 27.0%, “수업방법의 문제”라는 응답이 5.3%, “시험에 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8%, “학생들이 국가·사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63.0%로 나타났다.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많은 교사들이 통일관련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에 대한 이유를 학생들의 사회적 무관심을 지적했으며, 다음으로 교과서 등 교육내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비해 수업 방법이나 시험 여부에 대한 응답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IV-4> 통일교육에 학생들의 관심이 적은 이유(교원)

(단위: 명, %)

구분	교과서 등 교육의 내용문제	수업방법 의 문제	시험에 나지 않아서	학생들이 국가·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전체	유의도
초등학교	32 29.4	5 4.6	4 3.7	68 62.4	109 100.0	$\chi^2 =$ 19.02771 ($p < .05$)
중학교	46 32.9	3 2.1	2 1.4	89 63.6	140 100.0	
고등학교	30 19.9	13 8.6	13 8.6	95 62.9	151 100.0	
전체	108 27.0	21 5.3	19 4.8	252 63.0	400 100.0	

나. 현행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

현행 통일교육에 대해서 학생과 교사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통일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교원들만을 대상으로 현행 통일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현행 통일 교육이 부진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먼저, ‘통일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전체적으로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6.5%, “그렇다”는 응답이 19.1%인 반면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4.3%,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5.9%로 나타났다. 대체로 현행 통일교육이 학생들의 건전한 통일관 형

성에 별다른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항목을 합친 응답이 초등학생 46.8%, 중학생은 16.9%, 고등학생 8.5%, 대학생 10.1%, 교원 43.9%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 항목을 합친 응답은 초등학생 15.7%, 중학생 44.0%, 고등학생 60.0%, 대학생 66.4%, 교원 15.2%로 나타났다.

위의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통일교육이 가지는 효과에 대해 교원 및 초등학생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대학생을 비롯하여 고등학생, 중학생은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5> 현행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평가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않 다	전체	유의도
초등학생	94 15.7	186 31.1	224 37.5	60 10.0	34 5.7	598 100.0	$\chi^2=634.87170$ ($p<.05$)
중학생	26 4.5	71 12.4	224 39.1	137 23.9	115 20.1	573 100.0	
고등학생	5 1.1	34 7.4	144 31.5	164 35.9	110 24.1	457 100.0	
대학생	11 2.1	42 8.0	123 23.5	207 39.6	140 26.8	523 100.0	
교원	32 7.2	162 36.7	172 38.9	62 14.0	14 3.2	442 100.0	
전체	168 6.5	495 19.1	887 34.2	630 24.3	413 15.9	2593 100.0	

다음으로, 교원들에게 현행 학교 통일교육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학교 통일교육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질문에 전체적으

로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응답이 1.1%, “대체로 무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이 14.8%인 한편, “다소 문제점이 있다”는 응답이 39.8%,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는 응답이 44.3%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급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현행 통일교육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교원인 경우 23.9%가 “대체로 무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여, 중학교 교원과 고등학교 교원이 “체계적으로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와 “대체로 무난하게 운영되고 있다”를 합친 항목에 11.8%, 14.2%로 응답한 것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은 현행 통일교육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 공통적인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현행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

(단위: 명, %)

구분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대체로 무난하게 운영되고 있다	다소 문제점이 있다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전체	유의도
초등학교	0 0	28 23.9	43 36.8	46 39.3	117 100.0	$\chi^2 = 14.36936$ $(p < .05)$
중학교	1 0.7	17 11.1	62 40.5	73 47.7	153 100.0	
고등학교	4 2.4	20 11.8	70 41.2	76 44.7	170 100.0	
전체	5 1.1	65 14.8	175 39.8	195 44.3	440 100.0	

교원들은 현행 학교 통일 교육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전체적으로 “합

의된 방향이 없어서”(38.8%), “자료가 부족해서”(26.3%), “교과서에 관련내용이 부족해서”(13.6%), “통일 관련 지식을 가진 교사가 부족해서”(9.5%),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11.8%)라고 응답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합의된 방향 부족을 지적하였으며(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45.2%, 중학교 교원의 경우 37.3%, 초등학교 교원의 경우 31.6%), 이에 비해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자료의 부족을 지적하였다(초등학교 교원의 경우 35.0%, 중학교 교원의 경우 25.3%, 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21.1%).

<표 IV-7> 현행의 학교 통일교육이 부진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합의된 방향이 없어서	자료가 부족해서	교과서에 관련내용이 부족해서	통일관련 지식을 가진 교사가 부족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전체	유의도
초등학교	37 31.6	41 35.0	18 15.4	8 6.8	13 11.1	117 100.0	$\chi^2=10.89857$ $(p=.2075)$
중학교	56 37.3	38 25.3	22 14.7	15 10.0	19 12.7	150 100.0	
고등학교	75 45.2	35 21.1	19 11.4	18 10.8	19 11.4	166 100.0	
전체	168 38.8	114 26.3	59 13.6	41 9.5	51 11.8	433 100.0	

추가적으로 교원들에게 ‘통일교육 교사연수가 현장 통일교육에 도움을 주는가?’ 라는 질문을 하였다. 전체적으로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8.2%, “그렇다”는 응답이 35.6%로 나타난 반면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4.1%,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2%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통일교육 교사연수가 현장 통일교육에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통일

교육 연수에 대한 교원들의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표 IV-8> 통일교육 교사연수는 현장통일교육에 도움을 준다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 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유의도
초등학교	6 5.0	44 37.0	48 40.3	15 12.6	6 5.0	119 100.0	$\chi^2=7.86806$ (p=.4465)
중학교	15 9.6	48 30.8	61 39.1	27 17.3	5 3.2	156 100.0	
고등학교	15 9.0	65 39.2	63 38.0	20 12.0	3 1.8	166 100.0	
전체	36 8.2	157 35.6	172 39.0	62 14.1	14 3.2	441 100.0	

다. 통일교육의 방향

교사들은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통일교육에서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요소와 통일교육 강화방안을 물어보았다.

먼저, 통일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요소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전체적으로 “통일의 필요성 인식”(29.2%)과 “민족공동체 의식함양”(29.2%)을 들고 있었다. 그 동안 통일교육의 주된 내용이었던 “안보 의식 고취” 항목에 대한 지적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IV-9> 북한 및 통일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요소

(단위: 명, %)

구분	북한 주민 생활 모습 이해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통일의 필요성 인식	안보 의식 고취	통일 이후의 삶이해	전체	유의도
초등학교	12 10.1	38 31.9	26 21.8	35 29.4	7 5.9	1 0.8	119 100.0	$\chi^2=5.17552$ $(p=.8791)$
중학교	16 10.3	42 27.1	44 28.4	41 26.5	9 5.8	3 1.9	155 100.0	
고등학교	19 11.1	50 29.2	41 24.0	54 31.6	5 2.9	2 1.2	171 100.0	
전체	47 10.6	130 29.2	111 24.9	130 29.2	21 4.7	6 1.3	445 100.0	

또한 통일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IV-10> 통일교육 강화 방안

(단위: 명, %)

구분	관련교과 서에내용 을 반영	특별활동시 간활용	재량활동시 간활용	체험활동	전체	유의도
초등학교	61 52.1	5 4.3	16 13.7	35 29.9	117 100.0	$\chi^2=12.85244$ $(p<.05)$
중학교	66 43.1	10 6.5	35 22.9	42 27.5	153 100.0	
고등학교	91 54.5	12 7.2	16 9.6	48 28.7	167 100.0	
전체	218 49.9	27 6.2	67 15.3	125 28.6	437 100.0	

전체적으로 “관련 교과서에 내용을 반영”이라는 응답이 49.9%, “특별 활동(클럽활동, 단체수련활동 등) 시간 활용”이라는 응답이 6.2%, “재량 활동시간 활용”이라는 응답이 15.3%, “체험활동”이라는 응답이 28.6%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관련 교과서에 내용을 반영”과 “체험활동”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2. 학교 통일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위의 실태 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현행 통일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히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 통일교육이 효과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현행 통일 교육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통일 교육 목표의 문제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는 식의 지극히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통일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이지 못하고 현실성을 결여하게 되었다. 또, 그 내용이 정치적인 이념과 체제, 사상과 제도와 같은 것을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의 일상 생활과 유리되어 있는 단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학생들의 체험의 대상이나 실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지극히 추상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교육 현장의 학교 통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일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이제 통일 교육은 단위 학교에서 그 위상을 정립할 시기이다.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 교육은 통일 정책에 대한 이해나 우리의 노력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남북한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목표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그러한 목표의 시도를

통해 남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를 이해하고, 그 이해 정도를 통해 민족 동질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학교에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통일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학교 통일 교육에 대한 냉담한 입장이 학교 곳곳에서 퍼져 있다. 초등학생보다도 중·고등학생의 경우 통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 낮은 점은 눈여겨 보아야 사실이다. 이는 그 동안 학교 통일 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주체적 인식을 심화하는 데 한계성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통일 교육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관심으로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학교 통일 교육은 남북 통일의 당위에서부터 통일 교육의 실천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내용의 수정과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 동안 통일 교육은 안보 위주의 소극적 통일 교육이 중심이었다. 그러다 보니 교사와 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자료 구입이나 열람을 제한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은 정부에서 주어지는 통일 교육 자료에 대해 그 신빙성을 의심하게 되었고, 통일 교육 그 자체에 대한 무관심과 그릇된 편견까지 갖게 된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소극적 통일 교육은 교육과정 재구성 및 상세화 작업시 교육 주체(교사와 학생)의 자율성을 극히 제한하였다. 남북한간의 첨예한 대립과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의 난립, 그리고 국가 발전 수준의 미약함 등의 열악한 국내·외 조건 때문에 통일 논의에 있어서는 대체로 개방적 입장을 취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교사들은 정부에서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만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으며, 다양한 교육 방식을 택할 경우 예상치 않은 학생들의 반응을 매우 우려하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존의 통일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지도자로서의 역할보다 추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 즉, 교사 자신이 충분한 자료에 접하고 판단하여 스스로 체득한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아동을 가르치지 못하고 타율적으로 주어지는 것에 따라야 하다 보니 교육 내용에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통일 문제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 간접적인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나. 교육과정의 통일교육 반영 실태

학교 통일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과정과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제시와 더불어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야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이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통일 교육반영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속에서 학교 통일교육과 관련한 목표와 내용의 변화는 내용은 <표 IV-11>에 나타나 있다.

<표 IV-11>의 내용을 볼 때, 학교 통일교육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보여 왔다. 첫째, 학교 통일교육은 점차적으로 냉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통일 안보교육, 통일교육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6차 교육과정에서는 종래의 반공교육이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일방적으로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이념 교육 부분이 대폭 축소되었으나, 그것을 대체할 만한 북한이해, 통일인식 내용은 확충되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중 면에서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학교 통일교육은 도덕·윤리 등의 특정 교과에서 범교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교육과정의 변천 속에서 학교 통일교육이 북한 및 통일교육에 관한 내용이 전면적으로 국어, 도덕, 윤리, 사회, 국사, 지리 등에서 통합적으로 실시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말한다.

<표 IV-11> 교육과정 총론 상의 학교 통일교육 관련 내용

시기 구분	개정과정 및 이념상 특징 중 에서 학교 통일교육관련 내용	구성 방침·목표 및 체제·편제상의 특징 중 에서 학교 통일관련 내용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 (1945-1946) 및 교육 요목기 (1946-1954)	·교수 용어의 한국어 사용 ·조선의 이익에 반하는 교과 목 교수 일체 금함.	·수신과 폐지로 도덕 내용을 공민과로 흡수 ·새로운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공민과 등장
제1차 교육과정 (1954-1963)	·생활중심교육 강조	·반공교육·도의교육 강조 ·공민과목 내의 도의교육 실시 및 반공· 반일교육내용 포함 ·중학교 도의 교과서 개발
제2차 교육과정 (1963-1973)	·민족 자주성 강조 ·교과활동 외에 반공·도덕 생활 별도 설치	·1970년부터 대학에 국민윤리 교과 설치 ·교과활동 외에 반공·도덕 생활 주당 2시간 운영, 고등학교 국민윤리 4단위 실시 ·중학교 도의, 중학도덕으로 사용(66년까지) ·중학교 도덕→「민주생활」과 「승공통일의 길」로 분책 편찬.(78년까지)
제3차 교육과정 (1973-1981)	·학문중심교육 강조 ·국민교육현장의 이념 및 한 국 전통과 주체성 강조	·사회과에서 도덕과가 분리됨. ·도덕과 및 국민윤리과 교과로 편성됨. ·평화적 통일 지향 목표 시도됨.
제4차 교육과정 (1981-1987)	·교과중심, 경험중심, 학문중 심,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통한 전인교육 강조 ·국민정신교육 강조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 ·평화통일 신념의 함양 ·통일교육과 이념교육의 강조
제5차 교육과정 (1987-1992)	·민주화의 실천시기 ·문화의 주체성이 확립된 민 주사회, 정의사회, 복지사회, 문화사회 전망	·대학 국민윤리교과 교양필수에서 제외 ·북한에 대한 맹목적 적개심 교육 탈피 ·통일안보교육 강조
제6차 교육과정 (1992-1997)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 철한 민주 시민의 육성 ·21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 덕적인 한국인의 육성	·통일교육의 범교과화 시도 ·유치원 : 북한에 관심을 가지기 ·초등 도덕과 주당 2시간→1시간으로 축소 ·안보교육은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변화됨. ·고등학교 국민윤리→윤리로 변경
제7차 교육과정 (1997-)	·민주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 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 람	·총론에 통일교육에 대한 언급없음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 강조 ·전통문화 이해, 세계시민으로의 역할 강조

* 자료: 한만길 외,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9.

한편 6차와 7차 교육과정의 총론상에 반영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내

용을 비교하면 <표IV-12>과 같다.

<표 IV-12> 6차와 7차 교육과정 총론상 통일교육 관련 내용 비교

통일관련 내용	교육과정 총론에서 나타나는 학교 통일교육 관련 내용의 비교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교육 과정을 통하여 추구하는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으로 한다 ○ 자주적인 사람: 개성이 있고 자율적인 사람 주체적 자아 의식은 자주적 태도를 형성하는 기초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그가 속해 있는 집단, 넓게는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삶의 실존적 의미를 인식하게 하며, 타인의 의사는 물론 다양한 가치와 특성을 존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인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 시민을 육성한다. ○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표 IV-12>에서 보듯이 교육과정 총론에서 통일 관련 내용이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각 교과목의 목표가 없다.²⁰⁾

6차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자주적인 사람’이라는 항목을 통해 평화 통일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으로서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이라고 간략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에서 평화 통일에 대

20) 한만길 외, 『학교 통일교육 내용의 체계화 방안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7), 55쪽.

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지침’에서 범교과 교육의 하나로 통일교육이 제시되어 있다.²¹⁾

이상의 6,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볼 때 교육과정 상에서 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이 제고되어야 한다.

첫째, 교과 통합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의 위상이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전반적으로 민족적 포용력을 가름하는 기본교육(basic education)이라고 할 수 있다.²²⁾ 이러한 의미에서 부수적으로 다루어지는 통일교육은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목표는 전반적인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시간 활동, 학교행사, 잠재적 교육과정 등의 모든 학교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그 목표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통일 실현이라는 교육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즉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환상적이지 않고 현실감 있는 통일교육의 지향점이 교육과정 목표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7차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의 통일 관련 내용은 객관적이며 사실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최근의 신뢰성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시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참신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과서에 등장하는 용어를 민족통합적인 관점에서 정리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²³⁾

21)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Ⅰ)』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23쪽. 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소비자 교육 등 17개 범교과 학습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교육과정은 통일교육을 포함한 이 내용들이 교과와 특별활동에 연계하여 교육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22) 추병완,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통일정보신문사, 『학교통일교육의 내실화 방안』 (1999. 3. 23), 54-55쪽.

23) 한만길 외, 『학교 통일교육 내용의 체계화 방안 연구』 (1997), 121쪽.

다. 교과별 통일교육 관련 내용

(1) 도덕·윤리와 통일교육 내용

6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도덕과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5차 교육과정에서 ‘국가생활’과 ‘통일·안보생활’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이 ‘국가·민족생활’이라는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되었다.²⁴⁾ 둘째, 수업 시수가 주당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되었다. 그에 따라 통일교육 관련 내용이 양적으로 축소되었다. 셋째, 통일교육의 내용이 감정적인 접근을 벗어나 실생활 중심으로 전환되었지만, 아직도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이 나타나 있다.

전반적으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민족공동체의 형성, 남북한 체제의 현실 및 비교, 통일의 필요성과 의미, 남북한의 통일노력과 문제점, 통일 여건의 변화, 통일 논의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통일조국의 미래상과 그 조건, 통일국가에 대한 대비 등을 보완하여 통일환경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초등학교 도덕과 통일교육 내용의 체계는 ‘통일을 위한 노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순차적으로 민족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이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편성되어 있다. 저학년의 경우는 통일의 인식(통일의 길)과 북한의 학생 이해(북한에 사는 친구들)로 편성되어 있으며, 3·4학년에서는 한겨레나 한 나라로의 소망을 갖게 하면서 나라를 지킨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통일에 대한 소망을 다룬 내용을, 5·6학년의 경우는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방법과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6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도덕과의 통일 관련 내용의 특징은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통일교육의 방향에서 반공과 관련된 내용을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통일문제에서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탐구식 접근

24) 위의 책, 87쪽.

방법과 민족공동체의식의 형성을 위한 노력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남북한을 객관적인 비교를 하려는 시도도 나타났다.

둘째, 민족 분단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통일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통일교육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통일교육 내용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나 이념적 분야보다도 실생활 중심의 교육 내용이 부각되어 있다. 그에 따라 통일 관련 내용이 양적·질적으로 축소되었다.

셋째, 통일교육의 체계성과 계열성을 명확히 하여, 저학년에서 통일에 대한 염원과 상상력을 기르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유롭고 개방적인 논의를 통해 통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민족공동체의 번영에 기여하려는 자세를 갖도록 하고 있다.²⁵⁾

전반적으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민족공동체의 형성, 남북한 체제의 현실 및 비교, 통일의 필요성과 의미, 남북한의 통일노력과 문제점, 통일 여건의 변화, 통일 논의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통일조국의 미래상과 그 조건, 통일국가에 대한 대비 등을 보완하며 통일환경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도덕과에서 국가·민족 생활 영역은 통일교육 내용을 가장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국가·민족 생활영역이 학교 통일교육을 가능할 정도로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2학년에서는 북한의 언어나 문화 그리고 사회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을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6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도덕과의 IV단원은 통일교육 내용이 의미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단위이라고 할 수 있다.

6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윤리과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의 특징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통일교육과 공동체적 시민교육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이념 틀을 마련하였다. 둘째, 남북간의 이념적 대결 상태에 놓여 있는 한국의 여건에서 통일에 대비하고,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넓

25) 교육부 (1993), 67~68쪽.

은 안목과 미래 지향적인 의식의 형성을 강조하였다.²⁶⁾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윤리과 통일교육의 관련내용은 이외에도 각 단원의 소단원에 걸맞는 내용을 지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일교육은 그 관련 단원인 V단원인 통일의 과제와 전망 이외의 단원에서 관련을 지워 수업하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2) 국어과 통일교육 내용

초등학교 국어과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은 대체로 학년별로 1단원씩 반영되어 있다. 교과서 별로 보면 읽기 교과서에서는 통일관련 내용을 글의 소재로 다루고 있으나, 말하기·듣기나 쓰기 교과서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통일에 대한 내용을 읽기 교과서에서 다루기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3학년 2학기의 ‘9. 하나가 되어’는 통일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글의 종류에서도 생활문, 기행문, 동화, 설명문으로 대체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상력만을 통해 북한을 인식하게 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북한의 실상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중학교 국어과는 3학년 1학기에 ‘남북한 언어 차이’의 단원을 통해 남북한 언어 사용의 이질화 문제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잡으려는 의도로 통일교육 관련 내용이 전개되어 있다. 이외에도 3학년 2학기에 ‘오라 이강변에’ 라는 시를 통해 수업 시간에 통일문제와 관련지어 지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중학교 국어과는 통일 관련 내용이 제한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고양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언어나 소설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더욱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에서는 국어 하권의 ‘2. 국어와 생활’ 단원 ‘(3) 북한의 말과 글’이라는 소단원에 통일 관련 내용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북한과 통일

26) 교육부, 『고등학교 윤리과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고시 제1992-19호, 63~65쪽.

에 대해 간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고등학교 국어과의 경우에는 통일교육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어과에서는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거나 혹은 통일을 가정하고, 남북한 언어(문화)의 이질화 현상과 그 바람직한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과 통일교육 내용

초등학교 사회과의 통일관련 내용은 지리 및 정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4학년에서는 개마고원, 백두산, 금강산의 위치, 지형, 기후 등 자연환경과 주요 산업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5학년에서는 통일이 실현되면 고속철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금강산, 백두산 관광을 기대할 수 있다는 미래 지향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6학년에서는 6·25 전쟁의 원인, 경과, 피해 등을 토대로 하여 자주 국방의 필요성,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방법, 남북 협력의 중요성 및 통일 후의 사회 발전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²⁷⁾

6차 교육과정에서 사회과는 5차 교육과정부터 일반사회, 지리, 세계사, 국사를 망라하여 통합교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각각의 영역이 통일교육과 관련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통일교육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경우는 국사과의 하권에서의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단원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 사회과의 대단원은 없기 때문에, 통일관련 내용은 적은 편이다. 중학교의 경우 Ⅲ. 현대 경제와 시민 생활, 3.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 생활 단원에서 남북 교류 현황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리과의 경우는 6차 교육과정을 통해 Ⅳ. 북부 지방의 생활이 별도의 대단원으로 수록되어 있다. 교과서의 분량도 북부지방이 8쪽(5차 교

27) 한만길 외, 앞의 책, 105쪽.

육과정)에서 24쪽으로 확대되었으며, 과거에 국판이던 교과서의 크기가 4×6배판으로 확대된 것을 고려하면 이전 보다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과, 지리과, 국사과에서는 비교적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소화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사회과, 국사과, 지리과의 통일 관련 내용이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고등학교 사회과의 통일교육에서는 이념교육이나 정신교육과는 달리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6차 교육과정에서 사회과는 『공통사회(상)』의 V. 개인과 국가, 3. 국제화와 한국정치의 과제 일부에서 통일과 관련된 의미있는 탐구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 내용은 탐구 학습과제로 독일 통일과 우리의 통일문제를 비교하여 우리 나라 통일 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스스로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또 남북한 통일방안의 장단점을 탐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분임 토의를 통해서 통일 현장을 작성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탐구 과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통일 문제에 대해 탐구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교과서 내용과는 다르다.

각 단원에서 가르쳐야 할 지식을 통일 과제와 관련하여 지도할 수 있는 경우는 사회문화와 공통사회(상), 경제 그리고 국사과에서 시도할 수 있다. 『사회문화』의 III. 공동체 단원에서 민족 공동체 의식의 필요성을 언급하거나, 『공통사회(상)』의 VI. 미래 사회의 탐구, 2. 미래 사회의 전망과 과제 단원을 통해 남북한 통일 전망을 다룰 수 있다. 그리고 『경제』에서 국영 상점망과 장마당의 비교를 통해 통제 경제와 시장 경제의 성격을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사』에서 신라의 통일과 고려의 통일을 통해 민족 통일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VII. 통일을 위한 노력에서는 통일한국의 미래와 통일을 위한 과제를 찾아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의 통일 정책에 대한 학습을 통해 스스로 통일문제를 알게 하여 통일 대비 차원에서 바람직한 태도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다.

라. 통일 교육 내용 및 방법의 문제

학교 통일 교육의 방법은 주로 교사 중심의 강의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피교육자의 관심이나 발달 수준에 대해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인 차원의 홍보 내용과 방법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적용한 면이 많았다. 또한 통일 교육의 다양한 방법 및 기법에 대한 연구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즉, 주제나 목표에 적합한 다양한 방법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기존의 통일 교육은 통일 교육의 방향과 목표 설정에만 너무 치중해 왔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매우 의미있고 기본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외에도 통일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이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수-학습 방법과 기법 및 자료의 개발 등 통일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했다. 또한 학교 통일 교육의 방법론의 취약함은 이를 담당하는 교사 연수(직전 교육, 재직 후 교육)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통일 교육은 정치학 위주의 연구물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물론 1990년대 이후 이런 경향은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다 보니 통일 교육 관련 자료들이 다양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에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학교 통일 교육 내용의 경우 남북한의 이질적인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이 주로 강조되다보니 민족 공동체로서의 동질적인 측면이 무시되고 하나라는 인식의 형성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일에 관련된 학교 행사가 대부분 반공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통일 교육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고, 이에 따라 교사의 경우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한편, 통일 문제나 통일 정책과 관련된 일반 자료들은 대체적으로 많은 편이다. 그러나 학교 교육 현장, 특히 초·중등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

도하기에 적합한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자료는 많되,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할 만한 자료가 없다.”라는 많은 교사들의 불만이 이를 잘 드러내 준다. 이는 통일 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학년별 수준에 맞춰 내용과 방법을 잘 통합시킨 자료들이 거의 없다는 불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교 통일 교육이 그 외의 다른 교육 매체와의 연계적 노력이 부족하였다. 한 예로, 1990년대 전반기에 우리 언론에서는 독일 통일 이후의 어려움을 통일 비용과 관련시켜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통일에 무관심하거나 기피하도록 만든 원인이 되었다. 학교 통일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론, 가정, 종교 등 다양한 사회 교육 매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기존의 학교 통일 교육은 다른 통일 교육 매체와 연계적인 대한 고려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학교 통일 교육이 연중 교사가 가장 바쁜 시기인 학년말에 주로 다루도록 되어 있어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다 보니 자연히 깊이 있는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 통일 교육을 이끌어 가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분단과 전쟁을 겪어 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통일 교육에 대해 절실한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대부분의 교사들이 북한에 대한 상식이 너무나 부족하며, 이를 보충할 통일 교육 관련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매우 적은 편이다. 특히 교과외 성격이 약한 초등 교사의 경우 이런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마. 과외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1) 학교행사

현재 통일교육에 대한 학교 행사 프로그램은 통일 백일장이나 통일웅변대회 및 이야기하기, 통일표어짓기, 통일 포스터 그리기 대회가 주

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학교행사를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적극적인 의미의 학생 자치를 강화하여 학급회이나 학생회의 때 통일문제에 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대화와 토론이 학급과 교내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통일교육의 영역을 확장하여 사회화합과 공동체, 평화에 관한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사회적 조화와 갈등, 인간 상호간의 사랑과 증오, 국가간의 전쟁과 평화, 환경보호와 개발 등의 문제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행사가 통일교육의 목적에 적합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통일관련 학생 과외 활동을 담당할 교사들을 위한 현장 체험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보급과 함께 담당교사들에 대한 연수 활동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전반적으로 학교 행사는 학생 수준에서 현실적이며 실질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를 이웃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적용해야 한다.

(2) 재량활동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급별로 재량활동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여기에 통일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교과학습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량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량활동 시간은 범교과학습의 형태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제 탐구활동에서도 통일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북한 및 통일 관련 주제를 선정한다거나 통일과 관련된 시사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토의하는 형태의 수업을 전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수업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

여 주제를 선정하고 학생 스스로 학습하고 탐구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자율적 교육 활동으로서 현장 학습 중심의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장학습 활동으로서 역사유적지, 전쟁사적지, 통일 관련 사적지 등을 방문하는 활동을 전개할 있다. 예컨대 판문점, 통일전망대, 땅굴견학, 전쟁기념과, 자매 군부대, 참전기념비, 북한관 등을 견학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의 하위 영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각 영역을 몇 개 영역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에서 재량활동 시간에 통일교육 관련 수업을 배정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권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재량활동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자료 및 시청각 자료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재량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을 예시하면 <표IV-13>, <표IV-14>와 같다.

<표 IV-13> 남북한 생활문화를 소재로 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예시

주	영역	남북한 생활문화 탐색활동 과제	교수자료 및 방법
1-8주	기본생활 문화	남북한의 여가생활	VTR, 강의
		남북한의 교육제도	OHP, 강의
		남북한의 의생활	VTR, 토론, 강의
		남북한의 식생활	VTR, 토론, 강의
		남북한의 주생활	VTR, 토론, 강의
		남북한의 대중교통	VTR, 토론, 강의
		남북한의 언어생활	토론, 강의
		남북한의 종교생활	토론, 강의
		남북한의 관광	VTR, 토론
		남북한의 체육활동	VTR, 토론
남북한의 사회복지	OHP, 강의, 토론		

주	영역	남북한 생활문화 탐색활동 과제	교수자료 및 방법
9-12주	전통생활 문화	남북한의 문화예술	VTR, 강의
		남북한의 관혼상제	강의, 토론
		남북한의 명절	강의, 토론
		남북한의 민속놀이	역할놀이
13-18주	경제생활 문화	남북한의 직장생활	VTR, 강의
		남북한의 화폐제도	강의, 토론
		남북한의 금융제도	강의, 토론
		남북한의 유통제도	강의, 토론
		남북한의 에너지 활용	강의, 토론
		남북한의 의료보건	VTR, 강의, 토론
		남북한의 정보통신, 체신	강의, 토론
19-20주	통일정책	남북한 주민의 가치의식	강의, 토론
		남북한의 언론생활	강의, 토론, 신문자료
		남북한의 통일이 되면	토론
		남북한 통일방안	강의, OHP, 토론

* 자료: 조성배, “남북한 생활문화 탐색활동을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경기도 교육청·민주시민교육연구회,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통일대비교육 방안의 모색』 (1998. 11. 26)을 재구성한 것임.

<표 IV-14>민속놀이를 소재로 한 통일대비 능력 신장 프로그램

주	주제	활동내용	지도요소	준비물
1-2주	연간운영계획발표 연간활동주제발표	연간운영계획발표 조별활동계획협의	북한사회의 특징과 현실	활동일지
3-4주	북한의 민속놀이의 특성	북한민속놀이 변화	북한주민의 생활상	읽기자료 VCR 테이프
4-5주	북한의 민속놀이 분류	겨루기, 경기놀이, 가 무놀이, 아동놀이	북한 청소년의 생 활 및 가치관	읽기자료 VCR 테이프
6-7주	나라사랑의 날 행사	나라사랑 나의 주장 탈북자초청강연 전시회관람		
8-9주	민속놀이에 대한 북산사회의 관점	민속놀이와 체제유지 북한민속놀이의 변질	민족분단의 문제점 인식	읽기자료 VCR 테이프
10-11주	북한의 명절	사회주의 명절 특색 명절 이름과 목적	통일의 필요한 이 유인식	읽기자료

주	주제	활동내용	지도요소	준비물
12-13주	민속놀이 연구)	종합발표	민족의 역사와 전통	읽기자료 VCR 테이프 프리젠테이션 OHP
14-15주	민속놀이의 실제	개인놀이	남북한 문화적 차이와 동질성	읽기자료
16-17주	민속놀이의 실제	편놀이	통일의 과정시 생거날 혼란과 갈등양상	읽기자료
18-19주	소감 및 총결산	소감 및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짐	다양성의 존중과 사회통합	읽기자료

* 자료 : 인천 부광고등학교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보고서 (1998) 참조.

(3) 클럽활동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문제를 학생들의 일상적인 관심사로 끌어들이므로써 일상 생활에서 체험과 실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생들의 활동 공간인 클럽활동 시간에 학교 통일교육의 내용을 다루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대표적으로는 현재 통일 관련 시사반, 통일반 등과 같은 클럽활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능동적인 클럽활동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향토조사반에서의 통일 전망대나 땅굴 견학을 가능하게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거나, 예술계통의 미술반, 음악반 등을 통해 통일관련 전시회나 음악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영화 감상반에서도 북한영화에 대한 감상을 통해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통일 관련 학생 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학생 중심의 통일 가요제, 통일 축제, 통일 사이버 문예대회, 통일 캠프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생생활기록부에 학생활동이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제 학교 통일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

해 학생들의 평가에 주요한 척도로서 의미를 두어야 한다. 통일 관련 내용이 대학수학능력 시험이나 대학입시 논술시험에 출제하는 것은 물론 학교생활기록부에 통일교육 관련 활동이 성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학생회 활동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 탈북자 가족 돕기 등을 전개하고자 할 경우 학교에서 지원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활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 관련 활동에 대해 성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 봉사활동으로 통일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진학이나 진로에 영향을 주는 점수화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클럽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15> 체험학습 프로그램(초등학교 용)

답사 지역: 임진각 - 도라전망대 - 제3땅굴 - 자유의 다리 - 통일대비교육 체험학습장(1박) - 통일공원 - 귀가	
첫째날	둘째날
학교 출발	기상, 세면, 체조
	아침식사 준비 및 식사하기
	북한영화 관람
	북한 체험(놀이)
	통일체험 소감문 쓰기
도라전망대 도착 및 관람	점심식사 준비 및 식사
점심식사	집정리 및 청소
도라전망대 출발	
제3땅굴 도착 및 관람	퇴영식
	학습장 출발
제3땅굴 출발 (임진각 경우-자유의 다리 관람)	오두산 전망대 출발, 귀가
체험학습장 도착 입영식 텐트 설치	
저녁식사 분비 및 식사	
북한영화 감상하기	
북한생활 체험하기 : 언어	
정리 및 세면	
점호 및 취침	

* 자료: 경기도 파주교육청(1998), “통일대비 체험학습 프로그램” 참조.

<표 IV-16> 체험학습 프로그램(중·고등학교 용)

오두산전망대 - 임진각 - 도라전망대 - 제3땅굴 - 통일대비교육 체험학습장(1박) - 3.8선 표지비 - 김신조 루트(2시간) - 자운서원 - 통일대비교육 체험학습장(1박) - 영국군전적비 - 통일공원 - 귀가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학교출발	기상, 체조, 세면	
	아침식사	
	자유시간(전시실관람 등)	통일체험 수련활동 소감문
	북한의 놀이문화 체험	퇴영식 및 퇴영
영국군 전적비		
오두산통일전망대	3.8선 표지비, 점심	통일공원, 점심
임진각, 점심	김신조 침투로 답사	귀가
도라전망대		
제3땅굴		
통일체험학습장 도착, 입영식	자운 서원	
저녁식사		
북한영화 감상하기	특강	
북한언어체험활동	통일축제(갬프파이어, 통일촌극, 촛불의식 등)	
취 침		

* 자료: 경기도 파주교육청(1998), “통일대비 체험학습 프로그램” 참조.

<표 IV-17> 청소년 통일의식 하계 캠프

구 분	내 용	비 고
1 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식 ○ 일정 안내 및 자기소개 ○ 공동체 훈련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만드는 사회” ○ “왕따” 비디오 시청 ○ 싱어롱 “손에 손잡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회 담당 - 조별실시
2 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과정(에어로켓) ○ 제2과정(통일교육 비디오 - 꽃파는 소녀) ○ 제3과정(Role Play 등) ○ 제4과정(수영) ○ 제5과정(통일교육 초빙강사와 함께) ○ 장기자랑 및 레크레이션(Camp Fire 및 촛불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별준비 귀순자
3 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롤링 페이퍼 ○ 박물관 및 과학시설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감문 작성 화폐 박물관

* 자료: 한국자유총연맹(1999), 청소년 기초시민의식 하계 캠프 프로그램 참조.

3. 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가. 교육 주체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학교 통일 교육에 대한 교육 주체인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좀 더 보장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교육 활동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든지, 사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면, 교사와 학생들이 자유롭고 다양한 교육을 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육 주체의 통일 관련 자료 열람 제한을 좀더 완화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을 좀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통일 교육 방법의 새로운 수용

학교 통일 교육 주체의 사이버 통일 교육, 주문형 비디오의 활용 및 토의 수업의 활성화와 같은 통일 교육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더욱 요청된다. 통일 교육이 최근의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때 사이버 통일 교육이 매우 유용할 것이며, 학생들에게 언어만이 아닌 다양한 지능을 자극할 때 효과적인 통일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주문형 비디오 활용은 통일 교육에 있어서 매우 유익할 것이며, 그리고 토의 수업은 단순하게 받아들인 정보를 토대로 자신의 지식과 관점으로 형성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교육 방법이 된다.

그러나 통일 교육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법은 우리의 학교 현실과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교사가 적응하고 커다란 거부 반응 없이 의미있는 지도 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 조화 원리에 충실한 통일 교육

통일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안보와 화해’, ‘일반성과 특수성’, ‘목적론적 접근과 의무론적 접근’, 그리고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가 필요하다. 두 가지 측면 중 어느 하나만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통일 교육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게 된다. 한 예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청소년들에게 당위적이고 의무론적인 차원에서만 주장된다면, 합리성과 과학성을 중시하는 그들을 설득시키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이 되지 않고 분단되어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부담하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부담하게 될 분단 비용 및 통일 효과를 통일 비용과 함께 비교해 볼 수 있게 제시한다면, 통일의 당위성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 통일 교육의 포괄적 접근

통일 교육은 좁은 의미의 반공 교육이나 안보 교육이 아니라, 남북한이 하나의 구심점으로 추구할 수 있고 추구할 만한 가치를 찾고 만들어 가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이해 및 통일 교육이 공동체 교육, 가치 교육, 평화학, 넓은 의미의 안보 교육, 다문화 교육, 배려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간주의 교육 등과 연계하여 좀더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 네트워크화 및 통일 교육 센터 운영

통일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연구의 중복이나 낭비를 막고, 각자의 아이디어나 연구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 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자료를 공유하고 지도 방법을 연수할 수 있는 통일 교육을 위한 교사 센터를 통일교육원에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바. 생활 관련 내용 접근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된 친근한 소재를 중심으로 학교 통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즘의 학생들의 가치 지향은 상당히 현실적이며 사실적이다. 자신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에는 흥미를 갖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통일 교육에 대한 접근도 무엇보다 학생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을 시켜야 한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은 같은 또래의 북한 인민 학생의 학교 생활, 무엇을 배우는지, 무슨 활동을 하는 지를 알아 통일 교육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예로, 생활 문화적 접근에 의한 통일 교육 자료로는 북한 학생들의 교우 관계의 특징이나 소년단 활동, 꼬마 활동 등 현재 북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 통일 교육 방법론에 대한 관심 제고

지금까지의 학교 통일 교육에 관한 논의가 주로 ‘목표와 내용’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면, 앞으로의 논의는 ‘방법’이란 측면에서 좀 더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타 교육 기관이나 방송 기관의 시설(원격 영상 연수 장치)을 활용하고, 구체적인 학교급 및 학년별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아.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통일 교육 내용 강화

제7차 교육과정은 통일 교육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2000년부터 적용될 7차 교육과정은 분명하게 국민기본 공통교과 10개 과목²⁸⁾을 중심으로 한 교과활동을 바탕으로 한 재량 시

28) 10개 국민공통 기본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 국어(영어)이다. 이 과목들은 초등 1학년(국어, 수학) 또는 3학년(이외의 과목)부터

간이나 특별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 통일 교육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도덕, 일반사회·국사·지리를 망라한 사회과 그리고 국어 등에서 반영되어 있다.

첫째, 도덕·윤리과에서의 통일 교육은 그 동안 통일 정책이나 대북 안보관에 바탕을 둔 북한 이해에 강조점을 두었다. 이러한 내용 구성은 제7차 교육과정을 통해 보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남북한 서로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내용 구성은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이며, 그 이해 정도를 통해 학생들이 통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은 통일 교육 시수와 관련 내용에 있어서 제6차 교육과정과 <표IV-18>, <표IV-19>에서와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18> 제6차, 제7차 도덕과 통일 교육 연간 시수 비교

구분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1	2	3	1	2	3
바른생활 도덕과목 시수	6차 교육과정	60	68	34	34	34	34	68	68	68	34	34	34
	7차 교육과정	60	68	34	34	34	34	68	68	34	34	(심화과정)	
통일교육 내용의 시수	6차 교육과정	10	15	8	8	8	8	12	12	12	0	0	20
	7차 교육과정	10	15	8	8	8	8	0	12	0	17		

고등학교 1학년까지 실시된다.

<표 IV-19> 제6차, 제7차 도덕·윤리과 통일 교육 내용 비교

학교급	학년	통일교육 관련 내용 비교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바른 생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애국가에 대한 바른 자세 가지기 ·나라를 위해 애쓴 분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기 바르게 달기 ·애국가 바르게 부르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나라에 긍지를 가지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기르기 ·해외 동포들의 생활에 관심 가지기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통일에 대한 염원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궁화 사랑하기 ·우리 나라의 자랑거리 알기 ·통일에 대한 관심 가지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민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규범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단극복의 의지를 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라 사랑하기 ·분단 현실과 통일 필요성 알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의 민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생활태도를 가다듬기 ·국가 발전에 공헌하려는 자세 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족 문화 유산 애호 ·국가 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민족 생활에 필요한 여러 규범들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평화 통일과 국제 우호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발전에의 협력 ·평화 통일의 당위성과 방법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족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 가지기 ·다가올 통일에 대비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민족 통일의 의지 ·해외동포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학교급	학년	통일교육 관련 내용 비교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중학교	1	·국가와 민족의 의미 파악 ·국가와 민족을 사랑해야 하는 까닭 ·국가, 민족의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	(없음)
	2	·민족 분단의 현실과 통일 과제 ·통일의 필요성 ·북한의 정치, 경제, 언어, 문화현실 ·남북한의 통일정책 ·민족통일의 당면과제	·민족의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 발전 ·올바른 애국 애족의 자세 ·남북 통일과 통일 실현의 지
	3	·민족공동체 번영과 통일국가의 실현방안 민족 공동체의 위상을 높이며,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길	(없음)
고등학교	전학년	·통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한국 인상 ·통일 과업의 달성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려는 굳은 의지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 ·남북한 통일 정책과 통일의 과제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

위에서처럼 제7차 교육과정의 도덕과 경우에는 6차 교육과정보다 내용이 30%정도 축소되어 운영된다. 이로 인하여 도덕과는 이전의 내용의 범위와 계열성 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통일 교육의 내용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통일 교육의 내용의 축소로 인하여 안보 교육의 내용이 이전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안보 교육으로 의미있는 변화로 정리되기도 전에 대폭 삭제될 가능성도 있다. 그에 따라 통일 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즉, 통일 교육 관련 내용이 양적으로 축소된 것을 극복하기 위해 질적인 교육적 효과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통일 교육의 생활 문화 중심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제7차 교육과정에서 엿볼 수 있다. 중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북한의 문화나 사

회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집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V-20> 도덕·윤리와 통일 교육 관련 내용의 생활 문화 중심으로 전환 방안

구분	교육과정	구체적 내용의 예
중 학 교 2 학 년	·민족의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	·분단 이후에 발견되거나 부각된 남북한의 문화재나 유적 소개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 발전	·통일 이후의 독일의 발전을 소개한다.
	·올바른 애국 애족의 자세	·분열된 국가를 통합하려던 신라나 고려의 노력을 부각하게 한다.
	·남북 통일과 통일 실현 의지	·남북 대화의 성과를 찾아 부각시킨다. (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한 기본 합의서, 금강산 관광, 남북한의 경제적 협력, 체육 교류)
고 등 학 교 1 학 년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	·분단 직전의 민족 통일을 위해 노력한 분들을 중심으로 분단의 과정을 설명한다(김구, 김규식).
	·남북한 통일 정책과 통일의 과제	·학생들이 통일 정책에 대해 관심을 둘 수 있는 토론 형식이나 대화 형식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민족 공동체의 변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듯이 민족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통일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내용을 구성한다.

둘째,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사회과는 통일 교육과 관련성을 두고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초등 학교의 사회과는 북한의 인민 학생의 사회 생활이나 주민 생활 상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6차의 경우, 4학년에서는 개마 고원, 백두산, 금강산의 위치, 지형, 기후 등 자연 환경과 주요 산업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학년에서는 통일이 실현되면 고속철도, 고속 도로를 이용하여 금강산, 백두산 관광을 기대할 수 있다는 미래 지향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6학년에서는 6·25 전쟁의 원인, 경과, 피해 등을 토대로 하여 자주 국방의 필요성, 북한 위협에 대응 방법, 남북 협력의 중요성 및 통일 후의 사회 발전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현실감이 부족하다. 따라서 사회과는 보다 많은 내용을 통해 남북한 초등 학생의 사회 생활을 비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중학교 사회과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반영된 통일 교육 관련 내용의 부분을 유지하면서 현황의 남북한 정치, 경제, 사회 비교를 객관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사회과는 제5차 교육과정부터 일반사회, 지리, 세계사, 국사를 망라하여 통합 교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각각 영역이 통일 교육과 관련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통일 교육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경우에 미약한 면이 있다. 그렇지만 지리과의 경우는 제6차 교육과정을 통해 ‘IV.북부 지방의 생활’이 별도의 대단원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일면에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의 내용에서 통일과 북한 이해에 적극적인 내용 보강이 요구된다.

③ 고등 학교 사회과는 민주화 이후에 나타난 올바른 북한 이해의 인식을 강화하는 내용 보강이 요구된다. 이전보다 제6차의 경우도 통일 교육 관련 내용이나 북한 내용이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회과 교육은 이념 교육이나 정신 교육과는 달리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통일 교육의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 스스로 통일 문제를 알게 하여 통일 대비 차원에서 바람직한 태도를 확립하도록 하는 데 주효할 것이다.

④ 사회과에서의 통일 교육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리,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 보강이 요구된다. 현재 북한의 각 도나 직할시에 대한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북한을 수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한 민족으로 북한 주민을 이해하는 것은 북한이 분단 이후 이루어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리,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사회 교과서에서 북한의 현대사를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없다. 팔목하게 중등 지리과에서 북한의 지리에 관련된 내용이 보강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접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남북한의 현대사, 사회·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서술되는 통합적 역사관, 사회관을 갖도록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표 IV-21> 제7차 교육과정 사회과 내용 체계와 통일 교육 내용 반영 방안

학년	대영역	내용 체계	통일교육 반영 방안
3	인간과 공간	고장의 중심지와 주민 생활 모습	·북한 주민의 생활 모습
	인간과 시간	고장의 문화적 전통	·북한의 전통 생활 풍습
	인간과 사회	고장의 발전을 위한 노력	·남북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향토 사랑에 관한 일상 생활상 소개
4	인간과 공간	우리 지역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	·북한의 자연환경
	인간과 시간	옛도읍지 문화재의 가치	·개성과 평양의 소개 ·북한의 문화재
	인간과 사회	취미와 여가 생활	·북한 학생의 취미와 여가 생활
5	인간과 공간	자연 환경과 주민 생활과 관계	·북한의 자연환경과 주민 생활상
	인간과 시간	조상들의 공동체 의식	·남북한의 민족 동질성 확인
	인간과 사회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	·북한의 경제 상황과 경제 생활

학년	대영역	내용 체계	통일교육 반영 방안
6	인간과 공간	우리 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들	·한국 전쟁때 도움을 준 나라의 소개와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와 평화애호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킴
	인간과 시간	국가의 성립과 발전	·북한 정권의 수립과 이후 변화를 소개
	인간과 사회	민주 시민의 권리와 준법 정신 평화 통일과 민족의 미래	·시민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통일의 역군이 됨을 강조함.
7	인간과 공간	북부 지방의 생활	·북한의 행정 구역과 생활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함.
	인간과 시간	아시아 사회의 발전과 변화	·남북한 사회의 변화 비교
	인간과 사회	지역과 사회 탐구	·남북한의 사회상 비교
8	인간과 공간	현대 세계의 전개	·냉전과 남북한 갈등의 폐해를 일깨워줌
	인간과 시간	(국사) 삼국의 성립과 발전 통일 신라와 발해 고려의 성립과 발전	·백제와 고구려의 자주 정신을 통해 자주 국방의 의미를 배운다. ·삼국 통일 과정을 통해 신라의 통일과 오늘날의 민족 통일의 의미를 파악한다. ·후삼국을 통일하는 고려의 통일을 통해 오늘날의 민족 통일의 의미 파악
	인간과 사회	현대 사회와 시민	·남한의 시민과 북한의 주민의 정치 상황 비교

학년	대영역	내용 체계	통일교육 반영 방안
9	인간과 공간	인구 성장과 도시의 발달 지구촌 사회와 한국	·북한의 도시 변화와 특징 파악 ·분단 이후 남북한 변화와 그에 대한 비교
	인간과 시간	(국사) 대한 민국의 발전	·북한 사회의 변화
	인간과 사회	시장 경제의 이해	·북한 경제의 진단과 전망
10	인간과 공간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 생활 공간과 지역 구조의 변화	·국토와 통일에 대한 명확한 인식 ·통일 국토의 합리적 이용전망
	인간과 시간	사회 변동과 미래 사회 (국사) 한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객관적인 전망과 확신 유도 ·북한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관 점 형성
	인간과 사회	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전	·일에 대한 확신을 강화함

셋째, 고등 학교 2-3학년 일반 선택 및 심화 선택 과목에서의 통일 관련 내용의 강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수준별 교육과정에 알맞은 통일 교육의 프로그램이나 전체 교과를 망라한 범교과 통일 교육의 교과서 개발이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교과서의 내용은 <표 IV-21>과 같이 교과 내용의 심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이러한 방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기 적절하게 교육부의 교육과정 심의 위원회나 일반선택 및 심화 선택 교과서 집필 위원회를 통일 교육 관련자와 논의를 강화하는 협의체를 두어 학교 통일 교육의 반영 방안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일반 선택과 심화 선택 과목의 통일 교육 내용이나 북한의 이해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중요하다. 이는 민족 통합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청소년기의 교과목 편성에 걸

맞게 시도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③ 한편 지역 교육청을 중심으로 통일 교육의 현장 교육이나 체험 학습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북한관(이후 통일관)활용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민족 동질성 회복을 강구하게 하는 교재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그동안 현장 교육은 반공관이나 안보관으로 강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구태를 벗어나 적극적인 평화 교육의 일환으로 통일 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넷째, 초·중등 학교 과외 활동을 통한 통일 교육 방안을 들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 교육은 통일 정책에 대한 이해나 우리의 노력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남북한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목표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그러한 목표의 시도를 통해 남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를 이해하고, 그 이해 정도를 통해 민족 동질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각급 학교에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통일 관련 학생 과외 활동을 담당할 교사들을 위한 현장 체험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와 각종 자료의 보급이나 연수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7차 교육과정은 상당한 학교 교육에 변화를 준다. 그 이유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과 범교과 적용과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을 할 수 있다.

통일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통일 응변 대회 및 이야기하기, 통일 표어 짓기, 통일 포스터 그리기 대회가 주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동안의 변화에 대한 인식 속에서 학교 통일교육은 학교의 환경에 각 교과에 알맞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통일 교육은 전반적으로 민족적 포용력을 가름하는 기본 교육(basic education)이다. 따라서 학교 통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반적인 교육과정은 보강이 요구된다. 학교 통일 교육은 각 교과 활동 및 범교과 활동, 특별 활동, 재량 시간 활동, 학교행사, 잠재적 교육과정 등의 모든 학교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학교 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범 학교 운영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학교 통일 교육은 건전한 주체적인 학생 중심의 통일 교육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겪고 있다. 전반적으로 학교 통일 교육 현장에서의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학교 통일 교육의 명확한 지침이나 계획, 통일 교육의 목표와 내용, 지도 방법, 평가 그리고 통일 교육의 지원·관리 체제 등이 일관된 패러다임에 의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통일 교육은 그때 그때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가는 임기 응변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② 학교 통일 교육은 교과 통합적, 학생 활동 통합적, 가치 통합적인 차원으로서의 지원이 이루어지 않고 있다. 그리고 통일 교육의 정치적 이념적 일방적인 논리를 강조하는 한정적인 일면을 보여 준다. 보다 세분된 학교 통일 교육 내용에 대한 시범 학교 운영이 요구된다.

③ 통일 교육의 내용을 다루는 특정 교과목들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대부분 교과서의 마지막 단원에 집중되어 있어 학년이 거의 끝나 갈 무렵이나 다루어지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학습 평가가 종료되는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어 시험에 다루어지는 것에만 민감해져 있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더구나 국영수 위주의 주지 교과만이 파행적으로 중시되는 현재의 교육 풍토에서 도덕과나 사회과가 학생들에게 단순한 암기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통일 교육의 성과가 미진한 원인이 된다.

④ 학교 통일 교육의 정의와 목표가 반영되는 일선 학교의 교수 학습 활동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⑤ 학교 통일 교육 담당 교사들에 대한 민족 공동체 현장 체험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들은 통일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교육함에 있어서는 난색을 표하는 경향이 있다. 실질적으로 통일 교육과 관련된 자율적인 연수 활동에 대한 과감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는 자율 연수는 뚜렷하

고 명료한 통일 교육의 목표, 내용, 지도 방법이 공유되지 못한 채 구태 의연한 사실 전달이나 개념 설명 방식으로 교육에 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통일 교육 담당 교사들의 자질 함양을 위한 각종 자료의 보급이나 연수 활동의 부족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는 바, 통일 교육의 지원 및 관리 체제가 너무나도 허술하여 모든 것을 교사에게만 책임 지우는 풍토에서 벗어나야 한다.

⑥ 교사들의 경우 통일 교육에 대한 뚜렷한 소신과 명료한 지도 방법을 지니지 못한 채, 구태 의연한 사실 전달이나 개념 설명 방식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또한 통일 교육 담당 교사들의 자질 함양을 위한 각종 자료의 보급이나 연수 활동의 부족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는 바, 통일 교육의 지원 및 관리 체제가 너무나도 허술하여 모든 것을 교사에게만 책임지게 하는 풍토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자. 재량 활동의 적극적 활용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해 교과 시수의 부족을 보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하에서는 현행과는 달리 중등 학교에 재량 활동 시간을 설정하고 있다. 중학교(7-9학년)에서는 4단위(주당 4시간)가, 고등학교(10학년)에서는 6단위(주당 6시간)가 확보되어 있다. 그리고 재량 활동을 활용해 통일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급별 활용할 수 있는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하루빨리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차. 통일 교육 관련 교과 시수의 확대와 입시 반영

제8차 교육과정 개정시에는 통일부 차원에서 교육부에 통일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초, 중등 학교 도덕과 시수를 최소한 주당 2시간이상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교육과정 개정시마다 도덕 교과 시간이 줄고 있다. 교육과정 구성시 산업 사회의 논리가 크게 반영되면서 도구 중심의 과목이 점점 중시되고 목적 과목이자 국책 과

목인 도덕은 철저히 외면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덕 교과를 통한 통일 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덕 교과 시수를 초, 중, 고 공히 주당 2시간 정도는 최소한 확보해야 한다고 보여진다.

우리 나라에서는 평가가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에 있다.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내용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통일 교육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대수능이나 고입, 검정 시험 등에서 일정 비율로 반드시 출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출제 위원으로 윤리(도덕) 과목 전공자, 그 중에서도 특히 통일 교육을 전공하는 전문가가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로 가치 및 사회 탐구 영역의 출제 위원을 일반 사회 전공자가 들어가서 출제하기 때문에 통일교육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카. 학부모 통일교육의 활성화

통일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에 대한 학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2000년도에 들어와 통일교육원이나 한국자유총연맹 등에 의뢰하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을 부분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통일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 운영 위원들로서 통일교육을 특별히 받지 않아도 될 인테리 계층이 많았다. 이들은 대체로 고학력과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안정된 계층으로서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각종 사회 교육 기관을 통해 통일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다. 이에 반해, 통일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학부모들은 교육 대상에서 생략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다.

타. 적시적(適時的)이고 사실적인 자료의 제공

학교 통일 교육 자료는 적시성(適時性)과 사실성에 근거해야 한다.

앞에서 거론한 것처럼, 학생들에게 보다 최근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작업이 요구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으나 그 자료가 70년대나 80년대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못한다. 또한 2차 자료 위주여서 그 자료의 신뢰성과 사실성 여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 교육 자료는 적시성과 사실성에 근거한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적시적인 통일 자료가 필요한 이유는 이번 남북 정상 회담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혼선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과 우리의 남북 연합 이라는 통일 방안 내용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놓고 많은 교사들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지 막막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는 통일부나 통일 연구원 및 통일교육원 등에서 신속하게 해설 자료를 만들어 일선 학교 현장이나 언론을 보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적시성을 잃게 되면 국민들은 오히려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기 쉽다.

또한 통일 교육에 대한 많은 자료를 교사들은 언론이나 TV의 통일 교육 프로그램에서 얻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교사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자세에서만 가능하다. 그러한 노력으로 통일 교육을 활성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여러 가지 현실을 반영하여 통일 교육에 대한 자료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V. 남한 사회 통일교육의 형태와 특성

1990년대 이후 통일환경과 남북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 통일교육은 다양한 기관 및 단체로 확대되어 왔고, 교육내용이나 방법 또한 다양한 양태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확연히 드러나는 측면은 공공교육기관의 경우는 아직도 강의 위주의 통일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민간사회단체의 통일교육은 가상 및 현실체험학습, 수련활동, 지역행사와의 연계 등 다양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 장에서는 공공 및 민간 교육기관의 교육계획과 기획·운영자 및 사회교육기관 강사와의 면담을 기초로 남한 사회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남한 사회 통일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하겠다.

1. 교원 연수기관의 통일교육

통일교육 실태와 관련하여 연수원별로 보면, 강원도 교원연수원이 통일 관련 과목을 가장 많이 설치하고 있는 반면, 제주 탐라교육원과 한국교원대 종합교원연수원의 연수과정에는 통일관련 과목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각 연수원별로 수집된 자료에 기초하여 전체 연수과정 중에서 통일 관련 과목이 설치된 과정을 보면, 교원대 종합교원연수원의 경우는 교장자격연수에 국가정책 반영과목 연수 중 “햇볕정책과 통일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좌가 설치되어 있다.²⁹⁾ 서울교육연수원은 19개 과정 중 7개 과정에 통일관련 과목이 설치되어 있다. 이외에 부산은 109개 과정 중 7개, 대구는 32개 과정 중 9개, 인천은 32개 과정 중 9개, 광주 34개 과정 중 12개, 대전은 47개 과정 중 17개, 경기도는 50개 과정 중 6개, 강원은 31개 과정 중 21개, 충북은 25개 과정 중 9개, 충남은 68개 과정

29) <http://cne.knue.ac.kr:8080/>

중 4개, 전북은 42개 과정 중 13개, 전남은 20개 과정 중 9개, 경북은 32개 과정 중 10개, 경남은 39개 과정 중 13개 과정에 통일 관련 과목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직무위주의 연수와 타 분야 교양과목 과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³⁰⁾

연수내용은 “통일/대비교육”이 가장 많으며, 이외에 “국제정세와 남북한 관계”와 “남북한통일정책”이 그 다음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북한실상”과 같은 주제는 독자적으로 다루어지기보다는 위의 주제내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연수방법은 강의식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시청각이나 토론 내지 참여식을 가미하는 경우도 있다. 재택수업의 형태로서 이루어지는 곳도 2개 정도 있다. 또한 시간배당은 2시간 정도가 압도적이었고, 5개 정도의 연수원이 2-3시간을 배당하고 있다.

교육과정별 통일교육 실태를 서울시교원연수원과 인천시교육연수원, 울곡교원연수원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면, 서울시교원연수원의 통일 관련 교육 과목은 주로 교양분야에 “통일대비교육”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새로운 세계질서와 통일”, “북한의 체제와 이념”, “현장연수” (북한자료센터 견학), “북한의 역사교육 현황”, “북한의 중등교육과정”, “국제정세와 남북한 관계” 등으로 개설되어 있다.

반면 서울시교육연수원은 12월에 남북관계 및 통일환경변화에 따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현장에서의 올바른 통일교육을 위해 전문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의 경우에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통일교육 관련 강좌가 “통일대비교육”, “북한실상”, “북한언어실태” 등을 2시간 정도로 개설되어 있다. ³¹⁾

본 연수원의 강사는 사계전문가, 특히 대학교수나 통일부 관계자, 북

30) 교원연수원의 통일 관련 과목 설치 현황 및 교육방법, 내용, 시간배당에 대해서는 한만길외,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9) 참조. 이러한 결과는 2000년 9월 현재 조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

31)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2000년 교원연수계획 (2000)

한이탈주민 등의 강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본 연수원은 통일부 관계자로부터 사이버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우선 통일의 필요성 등과 같은 통일관련 주제에 따라 통일문제에 대해 식견을 지니고 있는 통일부 관계자가 원고를 작성한 후 e-mail로 연수원에 발송하고, 이를 연수생들이 집에서 읽어 본 후 소견서를 A4용지 1매 정도로 작성한 후 다시 강사에게 전달한다. 강사는 이를 평가하여 연수원에 성적을 통보하고, 이를 연수원에서 연수생들의 성적에 반영하는 형태이다.

울곡교원연수원의 경우 자격연수 7개 과정 중 5개 과정에 통일 관련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³²⁾ 일반연수 13개 과정에는 통일관련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직무연수에는 30개 과정 중 1개 과정에 통일 관련 과목이 설치되어 있다. 강의 시간은 보통 2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슬라이더, 마이크 시설의 보충이 필요하며, 강의 인원은 보통 1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러한 교육여건에서 토론식 수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또한 교원연수 과정에는 통일 교육에 대한 목표가 없고, 강사의 선정에도 기준이 모호하다. 따라서 통일교육 담당 강사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강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2. 강의와 토론 중심의 통일교육

가. 자유총연맹의 통일준비 교원연수

통일환경과 안보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와 민족통일의 도모라는 목표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은 '통일준비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³³⁾ 통일준비 교원연수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교육현장의 교사들에

32) 울곡교원연수원, 2000년 교원연수계획 ; <http://soback.kornet.net/>

33) 이외에도 자유총연맹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은 크게 교육홍보요원연수(전문교원연수 프로그램 포함 5개 연수 과정), 일반인 및 고교생 민주시민교양강좌(학부모

게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 관련 최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통일준비 교원연수는 자유총연맹내 자유센터에서 이루어지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서울지역 초·중등 교사 90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10일간 진행되며, 교육방법은 주로 강의와 토론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루어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V-1> 자유총연맹의 통일준비 교원연수 프로그램

일 차	주 제	강 사
1일차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	
	우리 역사의 분단과 통일경험	조갑제
	민족분단과 주변국 역학관계	신복룡
	분단과 반목의 사회·경제적 손실	진덕규
	한반도 통일 -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	최한수
2일차	남북대화의 전개과정과 전망	송영대
	남북한 통일정책과 국민의식	정상모
	1주제 토의 : 나는 과연 통일을 바라고 있으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분임장 (6개 분임)
	1주제 토의결과 발표 및 종합 토론	
3일차	분단국의 통일사례와 한반도 적용	정용석
	남북한 문화의 차이에 대한 다양한 이해	윤덕희
	한반도 냉전구도의 역학 관계와 전망	장명순
	한국사회 내부의 문제	여영무

통일교육강좌 포함 3개 과정), 통일대비민주시민교육, 청소년기초시민의식 하계 캠프 등이 있다.

일 차	주 제	강 사
4일차	북에서 만나 사람들과 헤어진 사람들(I)	강영식
	북한 주민들의 하루와 사계절	김길선
	북에서 만나 사람들과 헤어진 사람들(II)	조동영
	영상을 통해본 북한의 이모저모	김원일
5일차	2주제토의 : 북한정부와 주민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자세	분임장
	2주제 토의결과 발표 및 종합토론	
	청소년들의 통일외식	이장원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한만길
6일차	북한출신 교사와 대화	최정순
	남북한 통일교육의 차이	윤건영
	북한 바로알기 설명회	정부기관
7일차	북한교사 체험 활동	
	공동체 문화놀이: 건강한 선생님 건강한 교실	전문강사
8일차	통일교육 방법의 실제와 내용	신정현
	통일교육 교수안 작성	교육센터 관계자
9일차	3주제토의 : 우리 청소년을 위한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생각해보자	분임장
	3주제 토의결과 발표 및 토론	
	통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미정
	진정한 통일의 길	김덕
10일차	종합평가/분단현장 체험	

* 자료: 한국자유총연맹, 통일준비 교원연수 및 교육안내 (2000).

나. 아태평화재단의 아태청년 아카데미

청년아카데미는 미래 한국 사회의 주역인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한국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 및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확고한 신념을 고취하는 동시에, 이들과 더불어 21세기 한국이 지향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 하에 1997년 1월 설립되었다. 청년아카데미의 교육 과정은 국제 정세, 남북 관계 및 통일 정책, 민주주의, 21세기 국가 전략, 시사 및 교양 등 총 10개 강좌(1일 2개 강좌, 오전 강의 10:00~11:30, 오후 강의 1:00~2:30)로 구성되었으며, 1999년 9월 현재 10기까지 72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아태청년아카데미의 제12기 교육 프로그램은 국제정세, 남북관계, 통일정책 및 교양 등 총 10개 강좌로 구성되며, 강의시간은 1일 2강좌(오전 강좌 10:00~11:30, 오후 강좌 13:00~14:30)로, 교육기간은 2000년 8월 21일(월)~8월 25일(금)으로 계획되어 있다.

<표 V-2> 아태청년아카데미의 제12기 교육프로그램

8.21(월) (오전)	새로운국제질서와 한국의 국가전략	오기평 (아태재단 이사장)	8.23(수) (오후)	햇볕정책과 정상회담	문정인 (연세대 교수)
8.21(월) (오후)	세계화와 민족 주의	김동성 (중앙대 교수)	8.24(목) (오전)	외자유치와 한국경제	김완순 (고려대 교수)
8.22(화) (오전)	영화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상	유지나 (영화 평론가)	8.24(목) (오후)	분단 50년의 역사와 통일	강만길 (고려대교수/ 민화협상임 의장)
8.22(화) (오후)	매스미디어와 한국정치	정동영 (국회의원)	8.25(금) (오전)	앞으로의 정치 과제와 정치인 의 자세	김민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8.23(수) (오전)	아태평화재단의 3 단계 통일방안	권상수 (아태재단 교육실장)	8.25(금) (오후)	우리가 가야할 길	한화갑 (국회의원)

* 자료: 아태평화재단, 제12기 아태평화아카데미 계획서 (2000)

3. 강의와 체험학습 형태의 통일교육

가. 경실련 통일협회의 민족화해아카데미

경실련 통일협회의 민족화해 아카데미는 기존의 그릇된 대북관이나 통일관을 교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분단의 배경과 과정에 관한 진보적인 시각소개, 다른 시각에서 북한이해하기, 향후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등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와 실천적인 시민통일 운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강좌를 구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단현장 체험 및 북한영화 관람 등 입체적인 교육기재를 활용하고 있으며, 수강이후에도 계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소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표 V-3> 경실련 통일협회의 제9기 민족화해아카데미

총론	강의	주제	강사
분단 사회의 인식	1강	한반도 통일의 정치경제학	리영희
	2강	해방공간과 분단배경의 이해	강정구
	3강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의 세계전략과 세계질서	이재봉
	4강	새로운 세기. 인류의 평화와 한반도	강만길
	5강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대남정책	조민
	6강	북한의 산업구조와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강정모
북한에 대한 바른 이해	북한영화	북한영화관람/토론	북한자료센터
	7강	북한의 민족문화와 사회주의문화	윤덕희
	기행	백령도 기행/토론	장인석
	8강	통일환경조성과 우리언론 북한의 언론과 사회의사구조의 이해	정일용 신준영
9강	동포돕기의 통일학	박경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하여	10강	냉전구조해체에 대한 법률적 구조	이장희
	11강	남북한 군축과 평화체제 확립방안	이철기
	12강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방안	한만길
	13강	현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양영식
	14강	21세기 한반도 평화와 시민사회	한완상

* 자료: 경실련통일협회, 제 9기 민족화해아카데미 안내 (2000).

매 강좌는 당연히 전체프로그램 목적에 근거하여 편성이 되며 기타 프로그램, 예를 들어 북한영화관람이나 분단현장체험 같은 경우는 강의에서 얻지 못하는 입체적인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통일의 내용을 이론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민족성 및 동질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 교육복지원의 통일준비 여성지도자 교육

교육복지원의 통일준비 여성지도자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통일의 준비와 통합 후의 사회를 준비하는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참여자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강사와 참여자간의 상호작용 촉진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특별히 여성을 위한 통일교육이 없었는데 그에 초점을 맞춰 개발함으로써 여성지도자를 교육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다름의 인정과 돌봄이라는 관점으로 통일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성이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주제와 내용이 단계적이고 다양한 교육방법 활용과 76시간이란 장기교육을 통해 ‘통일’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조직적인 프로그램이라는 데 그 특성이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 교육대상은 여성 지도자 30명이며, 교육횟수는 총 13회(1박2일 숙박교육, 현장견학 1회 포함, 매주 1회씩 13주)이다. 교육시간은 총 76 시간(1박2일 숙박교육 22시간, 11회 정기강좌 4시간씩, 1일 현장견학 10시간)으로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5시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강사 및 진행자 사전회의를 함으로써 교육대상, 교육목적 및 범위, 수준, 내용, 방법, 진행 등에 관하여 사전에 이해하고 조율하여 중복과 산만성을 피하고 있다.

<표 V-4> 여성이 열어 가는 평화통일-함께 나누고 더불어 사는 남과 북

횟수	내용, 시간, 방법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강식, 과정안내 (30분) - 만남의 시간 (120분): 개인소개 및 인간관계훈련 - ‘왜 통일을 바라는가’ (100분): 브레인스토밍 토의, 전문가 평론 - ‘내가 생각하는 북한’ (60분): 소집단 분야별 토의, 종합발표,진행자 마무리 - ‘여성의 시각으로 본 통일의 과제’(150분): 여성학자 강의, 질의 응답, 전체토의 - ‘지도력실습’ (150분) : 지도력훈련 실연실습 - 비디오 보기 - ‘통일 다큐’ (150분): 비디오 본후 토론하기 - ‘통일준비 여성지도자의 역할 찾아보기’ (60분) * 과제:2회교육시, ‘북이탈주민과의 대화’에서 질문할 항목 분야별로 준비해오기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회때의 토론 및 역할찾기등의 결과를 벽에 붙여놓거나 개인별로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 -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150분): 분야별 3인초청 질의응답 ,대화식강의 마무리 - 휴식 및 친교(30분) - 북한사회의 이해 (60분): 대화식 강의, 질의응답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각 ‘북한사회의 실상’ (90분): 비디오 본후 북이탈주민의 설명, 질의응답 - 휴식 및 친교(30분) - 남북한 여성의 지위(120분): 남한여성학자, 북이탈주민 2인초청, 대화식강의, 질의응답, 소집단 토론및 종합발표, 전문가 마무리
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분단기행(8시간): 견학지(임진각, 백령도, 휴전선, 판문점 등중 요구수렴: 참가신청서 받을시) 점심식사 (북한음식 맛보기 : 북이탈주민이 운영하는 식당) * 과제: 기행문 써오기
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선례의 교환 (120분): 비디오, 강의, 질의응답 - 휴식 및 친교 (30분) - 통독전후의 여성활동(90분): 강의, 질의응답
6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정부 대북 정책(60분) : 강의, 질의응답 - 남북대화과 기본합의서 해설(90분): 강의, 질의응답 - 휴식 및 친교 (30분) - 남한의 민간통일운동(60분) : 강의, 질의응답

횟수	내용, 시간, 방법
7회	- 남북경제와 교류협력, 통일비용(120분): 강의, 비디오보기, 질의응답 - 휴식 및 친교 (30분) - 남북화해와 문화통합(90분): 강의, 질의응답
8회	- 국내외 통일환경(120분) : 강의, 질의응답 - 휴식 및 친교 (30분) - 통일을 위한 시민운동 (90분) : 강의, 질의응답
9회	- 탈북자의 실태와 과제(90분): 강의, 질의응답 - 탈북자의 사회통합-다큐 비디오 본후 토론하기, 진행자 마무리(120분) - 휴식 및 친교 (30분)
10회	- 평화통일과 민주시민의 역할(120분): 소집단 토의(50), 강의(50) 질의응답(20) - 휴식 및 친교(30분) - 묻고 싶은 통일문제와 북한문제(90분) : 질의와 전문가 응답 * 과제: 북한관련 서적을 읽고 독후감 써오기(관련서적 제시)
11회	- 시청각 ‘통일 그후’ (120분): 비디오 본후 토론하기, 진행자 마무리 - 휴식 및 친교 (30분) - 비디오 보기 ‘문화교류 사례’ (90분): 비디오 상영, 토의
12회	- 여성의 남북교류 활성화 (90분): 강의, 질의응답 - 휴식 및 친교(30분) - 통일전후 남북한 사회통합 (120분): 대화식 강의(70), 토의 및 질의응답(50) * 과제: ‘통일단상’ 쓰기, 건의문작성
13회	- 통일전후 여성지도자의 할 일 (120분): 토의 및 발표(롤플레이), 종합토의 - 교육평가, 수료식(100분): 설문작성, 평가회의(50), 과제인 기행문 발표, 독후감 발표(20), 수료식(30)

* 자료: 교육복지원, 통일준비 여성지도자 교육 프로그램 (2000).

4. 가상 체험 형태의 통일교육

가. 중앙대학교 남북통합교실

남북통합교실은 통일 후 가장 심각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남북한 주민의 정서적 통합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하에, ①북한 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②남한주민의 북한실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③북한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는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정착 및 적응교육과 북한사회에 대한 간접체험을 통하여 남한주민의 북한 실상에 대한 인식 제고에 목적을 두며, 장기적으로는 통일 후 남북한 주민들의 정서적 통합 위한 적응프로그램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다.

남북통합교실의 특징은 남북한 출신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점, 강의 방식이 아닌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북한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점, 북한 가계부 쓰기, 사회생활 체험, 더불어 살기 등 가상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 통일부에서 시행하는 북한이탈주민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남북통합교실이 개발한 북한 체험과정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남북한 체제비교, 남북한 경제비교, 남북한 정치비교, 남북한 사회비교, 북한가계부 쓰기, 북한 사회생활 체험, 남북한 주민이 더불어 사는 사회 체험 등이 그것이다.

<표 V-5> 제 1기 남북통합교실 프로그램

횟수	주 제	강의자(남한출신, 북한출신)
1주	남북의 이질화 및 체제 비교	이상만, 조명철
2주	남북의 사회 및 법률제도	송정숙, 김남준
3주	남북의 정치제도	이조원, 허문영
4주	남북의 경제생활	전홍택, 김수행
5주	남북의 결혼/가정생활	이금순, 여금주
6주	'남북통합교실MT' 진행자:이장호/김남준	
7주	남북의 주민의식	이장호, 한상호
8주	남북의 교육제도의 차이	이재우, 자영철

* 자료: 중앙대학교 체제적응센터 통합교실 소식지(1997.5.3).

특히 남북통합교실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남북의 경제생활 체험과정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남북한 가정의 상황을 알리는 테마가 세

가지 제시되고, 이 상황에 기초하여 가계부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가계부 작성을 위해 북한의 암시장 가격 동향, 노동(취직문제), 저축, 대출, 주택 사용료, 생필품 공급, 기타 제품의 공급 및 일반 판매에 대한 자료가 주어진다.³⁴⁾

나.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평화교육 교사연수

어깨동무 평화교육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생각하고,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새로운 사람과 친구가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나만큼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들의 일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일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어깨동무 평화교육은 일상의 평화에서 시작하여 남북의 평화, 지구촌의 평화, 생태의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프로그램은 2000년 8월 16일(수)~21일(월) (오전 9:00-오후 3:00) 동안 남북어린이어깨동무 강의실에서 초등학교 교사 3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특이 이 교육은 명칭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통일'보다는 '평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체계통합보다는 사회문화적 통합의 차원에서 서로의 삶을 이해하려는 문화이해지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표 V-6>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평화교육 교사 연수 프로그램

날 짜	차시	시 간	강 의 내 용	강 사
8/16 (수)	6	9: 00-9: 30	인사말씀, 교육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김영수, 최혜경
		9: 30-10:50	21세기 한국 사회와 평화문화	
		10:50-11:10	휴식	이기범 정유성
		11:10-12:40	일상의 평화	
		12:40-3: 00	식사 및 모듈별 모임	

34) 남한주민이 북한 가정의 구성원의 입장에서 가계부를 작성하는 가상체험과정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대학교 남북통합교실, 경제생활체험과정 (2000) 참조.

날 짜	차시	시 간	강 의 내 용	강 사
8/17 (목)	6	9:00-10:20	평등과 평화	김귀옥
		10:20-10:40	휴식	
		10:40-12:00	남북한의 심리적 화합 - 남북한간 문화이해지	미정
		12:00-12:10	휴식	
		12:10-1: 00	프로그램 실습 I	이주영
		1: 00-3: 00	식사 및 모둠별 모임	
8/18 (금)	6	9: 00-10:20	남북관계의 정치·경제학적 이해	김영수
		10:20-10:40	휴식	
		10:40-12:00	반공 이데올로기의 폭력성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슬라이드 쇼)	권혁범
		12:00-12:10	휴식	
		12:10-1: 00	프로그램 실습 II	최기룡
		1: 00-3: 00	식사 및 모둠별 모임	
8/19 (토)	6	9: 00-11:00	북한 주민의 삶 이해 - 북한 가계부 쓰기	김성민의 탈북자 5인
		11:00-11:20	휴식	
		11:20-1: 00	북한의 삶과 사람- 영상학습 및 토론	이우영
8/21 (월)	6	9: 00-10:20	생태의 평화	홍성태
		10:20-10:40	휴식	미정
		10:40-12:00	문명과 평화	
		12:00-1: 00	총평 및 종강식	김영수

* 자료: <http://www.okedongmu.or.kr/>

5. 수련활동 형태의 통일교육

가. 남북나눔운동의 통일학교

남북나눔운동의 통일학교는 통일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강의와 현장 학습(통일관련단체 자원봉사), 통일마당 예술제(스킷드라마) 등 다양한 통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V-7> 남북나눔 운동의 6기 통일 학교 프로 그램

구 분	17일(목)	18일(금)	19일(토)
6:00~6:30			기상 및 세면
6:30~8:30			/ 다니엘 기도 / 조별 나눔 / 자원봉사 계획
8:30~9:30			아침식사
9:30~13:00			하나원 방문 가실분들은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방문하셨으면 합니다-단, 당일 자유북한인을 직접 만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할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13:00~14:00			집으로
14:00~16:00		Orientation/ 찬양/ 만남의 시간(조편성 개회예배, 통일 O.X 퀴즈)	
16:00~18:00		강의2: 백종국 교수	
18:00~19:00		저녁식사	
19:00~19:30		북한 노래 배우기	
19:30~21:00	강의1 : 이만열교수	강의3: 김명세전도 사	
21:00~21:30	다니엘 기도		
21:30~22:00	집으로	통일마당 예술제	
22:00~23:30			
23:30~24:30		조별 마무리	

* 자료: 제 6기 통일학교 프로그램안내 (2000).

남북나눔운동에서는 통일교육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교육생들을 중심으로 '통일마당'이라는 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통일마당에서는 통일에 관하여 균형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여 매주 월요일 저녁에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북한작가들이 쓴 소설책을 읽거나 관련 비디오를 보면서 남북간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해 중점을 둔 토론을 하고 있다. 또한 월 1회 정도는 국내의 저명한 통일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를 초청하여 생생한 정보를 듣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

통일학교의 특징은 심도 깊은 주제에 대한 토론과 다양한 시청각 교재를 통한 교육, 그리고 직접 참가하는 역할극들을 매우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의 2000년 청소년 지역화합한마당

본 프로그램의 주제는 “갈등을 넘어, 화해와 통일로!”로서 20개 지역에서 모집된 지역화합 국토순례단이 8.15를 맞아 서울에 집결,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강원도 철원 분단지역 탐방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지역화합 축제한마당을 진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망국적인 지역갈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희망찬 21세기를 열어갈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고 갈등을 넘어 화해와 협력의 21세기를 열어 가는 다짐의 장을 마련하는데 또한 프로그램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0년 8월 10일~12일에 서울대공원 청소년 수련장에서 500명(청소년, 지도자)이 참가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첫째 날에 개막식과 강연회, 지역화합 한마당이 이루어지며, 둘째 날에는 분단사적지 탐방, 통일백일장, 화합과 통일한마당, 셋째 날에는 새벽 등산과 국립현대미술관, 도산공원 탐방활동과 끝으로 폐막식이 이루어지게 된다.

<표 V-8> 홍민통의 2000 청소년 지역화합 한마당 프로그램

8월 10일 (목)	14:00 ~ 15:00 : 등록 15:00 ~ 16:00 : 조별구성 16:00 ~ 17:00 : 조별활동 17:00 ~ 18:00 : 개막식 18:00 ~ 19:00 : 석 식 19:30 ~ 20:30 : 강연회(갈등을 넘어, 화해와 통일로!) 20:30 ~ 22:00 : 지역화합 이야기마당 22:00 : 취침
8월 11일 (금)	05:00 : 기상 05:30 ~ 06:30 : 아침식사 07:00 ~ 09:00 : 이동(서울 → 철원 고석정) 09:30 ~ 12:00 : 분단사적지탐방활동 12:00 ~ 14:00 : 중식·통일백일장 14:30 ~ 17:00 : 분단사적지탐방활동 17:00 ~ 19:00 : 이동(철원 → 서울) 19:00 ~ 20:00 : 석 식 20:00 ~ 21:00 : 조별활동 21:00 ~ 23:00 : 화합과 대동 한마당 ("우리가 허물었어요. 지역 갈등의 벽을")
8월 12일 (토)	05:00 : 기상 05:30 ~ 07:30 : 새벽등산(청계산) 07:30 ~ 08:30 : 아침식사 08:30 ~ 09:30 : 주변정리 09:30 ~ 11:00 : 국립현대미술관 탐방활동 11:00 ~ 12:00 : 이동(대공원 → 도산공원) 12:00 ~ 13:00 : 도산공원 탐방활동 13:00 ~ 13:30 : 중식 13:30 : 폐막식

* 자료: 홍민통, 2000 청소년 지역화합 한마당 프로그램 (2000).

6. 지역 축제 형태의 통일교육

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섯 통일문화한마당

남북의 평화와 화합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

이 한곳에 힘을 모아 통일세상을 열어가는 주체로 담당하게 나서기 위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의 공동으로 여섯 통일문화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표 V-9> 여성문화통일문화 놀이마당

행 사	주요 내용
북한여성과 만나고 싶다! 북한여성을 알고 싶다!	북한여성과 만나고 싶다(통일염원표현 마당) - 사랑의 통일미팅 - 한번 생각해 봐요 북한여성을 알고 싶다(통일염원갤러리)
통일, 이제 시작이다! (통일염원 길놀이)	풍물패 터울림의 통일염원 길놀이판
분단의 한을 넘어! (통일염원 열림굿)	서정숙의 남북 여성이 하나되는 상징으로 긴 천을 이용한 춤판
통일도 식후경(북한음식시연회)	북한음식 중 토속적인 맛을 지닌 감자, 강냉이를 주재료로 하여 우리 일상식단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조리법 강의(감자만두튀김, 풋강냉이 밀지집_)
영화로 보는 북한 여성	영화 “도시처녀 시집와요”

* 자료: 여성단체협의회, 통일문화 한마당 프로그램 및 자료집 (2000).

이 행사는 한국여성들에게 통일시대 여성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고 북한 여성의 삶과 문화를 간접 체험함으로써 여성들이 통일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³⁵⁾

“통일세상의 절반, 여성!” 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 행사는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토론마당과 북한여성문화체험 마당으로 구성되었다.

흥사단에서 열리는 1부 토론마당은 “북한여성의 삶과 통일시대 남북한 여성의 역할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임순희는 “남북한 여성의 삶의 모습 비교”라는 제목으로 생생한 체험담을 발표한다. 또 김영

35) 여성 통일문화 한마당 첫째마당, 둘째마당 자료 (2000).

란은 “남북한 화합을 위한 여성의 역할”이라는 발제 강연을 하였다. 이어 탈북자 김길선, 오길남, 송영선 등 3명이 북한 생활을 들려주고 참석자의 질의 응답 등 토론을 진행하였다.

마로니 공원에서 열린 2부 놀이마당은 여성통일맞이 길놀이, 열림굿, 북한향토음식 시연회, 북한영화 맛보기, 여성통일갤러리, 여성통일염원 표현의 장 등이 행사가 이루어졌다.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 특화사업: 범서울시민 걷기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는 「6·15 남북공동선언」 지지 실천 다짐을 위한 범서울시민걷기대회를 8월 20일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하였다.

서울 25개 협의회의 공동 참여로 오전 6시 20분부터 8시 40분까지 개최되는 이번 걷기대회는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실천결의를 다지고 범국민적 역량결집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본 행사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V-10> 범서울시민 걷기 대회 프로그램

구분	세부내용	비고
식전행사 (06:20~06:50)	국방부 의장대 시범 및 취타대 연주	평화의 광장
본행사 (07:00~08:20)	개막식(07:00-70:30)-국민의례 -6·15남북공동선언지지·실천결의문 제안 및 채택 -만세삼창 -통일의 노래 합창 걷기행사(07:00-08:20)	평화의 광장 올림픽공원 순환 도로
식후행사 (08:20~08:40)	참여시민을 위한 경품추첨 및 시상	평화의 광장

7. 사회 통일교육의 특성과 문제점

가. 강의 중심 교육

규정된 시간과 가공된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통일교육과는 달리 사회 통일교육은 주제선정이나 교육방법 등에서 융통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대상자인 사회인들은 한편으로는 성인으로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아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어느 정도의 경험적·이론적 지식이 성숙된 수강자들간의 다양한 논의를 토대로 통일교육이 실시될 수 있으므로 통일의식이나 정부정책, 현안문제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회통일교육의 대상자들에게는 개방적이고 자율성이 존중되는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수강자와 교육자 사이의 쌍방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수강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책임을 지고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현안문제나 정부정책 등에 대해 스스로의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상대방의 판단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함양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단체의 사회통일교육과, 일부 민간단체의 통일교육은 이러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기보다는 교수요원 중심의 강의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수강자의 요구나 관심을 고려하기보다는 교수요원의 일방적 내용 주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시간 배당도 대부분 1-2시간 정도이므로 다루어야 할 내용에 비해 시간이 부족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통일관련 연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나 시청각 자료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제공된다 해도 변화되고 있는 실정에 적절하지 못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여건은 강의식 위주의 교육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사회통일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교육환경과 직무중심의 교육과

정을 고려해 보면, 강의식 위주의 교육방법이 도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강의식 교육방법이 모든 면에서 그릇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이미 강의식 교육에 식상함을 느끼고 있으며, 가능한 눈으로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원하고 있다.

나. 안보와 화해협력의 시각 갈등

현재 공공 및 민간 사회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통일교육은 기존의 반공적 시각과 안보적 시각, 그리고 평화에 기초한 화해와 협력의 시각이 혼재되어 나타나거나 갈등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실제 사회 통일교육의 현장에서는 북한사회를 소개하면서 주민들을 동포이자 이웃으로 부각시키지만, 북한의 도발이나 최근 일어났던 서해 교전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안보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인식상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혼란은 수강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교수요원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2시간 배당의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교수요원에 따라 북한이 우리의 반쪽임에 주안점을 두는 경우와 철저한 안보 의식에 중점을 두는 강의가 서로 독립적·배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과거 반공교육이나 안보교육에서는 적과 동지가 선명하였고, 그럼으로써 비교적 가치기준이 명백했다. 그러나 통일교육에서 북한은 안보의 대상으로서 적이자 같이 살아야할 형제이자 동포로서 나타난다. 계층구조로 볼 때 북한사회에서 어느 계층이 동포이고 어느 계층이 안보의 대상인지, 6·25와 대북 지원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등의 갈등적 요소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단체에서 설정되고 있는 강의주제와 교수요목들은 남북한 화해협력을 위한 방향과 일치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다.

다. 전문성

실태조사를 통해 볼 때, 주로 전문성에 치중하는 사회통일교육은 민간단체로서는 아태평화재단의 아태청년 아카데미, 자유총연맹의 통일준비 교원연수, 경실련 통일협회의 민족화해아카데미, 남북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 교사연수 등이 포함된다.

아태청년아카데미의 경우 국제정세, 남북관계, 통일정책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저명인사를 통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유총연맹의 통일준비 교원연수와 남북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 교사연수에서는 교사라는 특정 수강자를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통일문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기초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체험을 통한 북한 이해, 그리고 북한 출신 교사와의 대담을 통해 북한의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교수안을 작성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당장의 통일보다는 평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통합의 차원에서 문화이해지, 북한가계 부쓰기 등과 같은 가상체험 학습 형태의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공공단체의 통일교육에서 전문성에 중점으로 두는 단체로는 공무원 및 교원연수원의 통일 관련 교육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 교육기관이 주로 직무중심의 교육을 중시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교육에서는 전문성을 추구하지만, 통일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특화된 전문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예컨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강좌설정이 정부시책과목에 따라 일률적으로 설치되어 이루어짐으로써 그 수준이 소양 내지 교양과목에 머물게 된다는 점, 교육방법 또한 강의식 위주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수강자의 전문성에 부합되지 않는 통일교육에 초빙된 강사의 비전문성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단체에서의 통일교육은 기관 특성상 전문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에서는 수강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해당 분야에 대응하는 북한 및 통일관련 지식을 습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즉 교원연수원의 경우 각 교과별로 준비되는 통일교육 특화 프로그램에 구

성되지 못함으로써 교사의 담당교과에 도움이 크게 되지 못하고 있고, 공무원의 경우에도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심화되지 못하고 있다.

라. 대중성

사회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볼 때, 대부분의 공공 및 민간단체의 통일교육에서 일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형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교육 시기는 특정 성인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 내용은 일반 국민들이 습득해야 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예컨대 남북나눔운동의 통일학교나 중앙대학교 남북통합교실의 경우 참신한 교육프로그램을 지니고 있지만 직장이나 가사일에 종사하는 성인들의 경우는 참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단체에 참가하는 학습자들 대부분은 대학에 재직하는 교수요원이나 학생, 연구단체 연구원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일반 직장인이나 주부들이 참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대도시 중심,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경우 이러한 통일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반면 대중성을 지향하는 단체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지역축제와 결합된 통일교육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여성단체 협의회가 개최했던 여성 통일문화한마당이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역협의회 협의회별 특화사업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통일교육은 전전세대, 전후세대, 386세대, 청소년 등이 모두 참가하여 진지하게 통일문제에 대해 생각하면서도 능동적으로 참가하여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앉아서 듣는 형태가 아닌 체험하면서 즐길 수도 있는 것이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특성이다. 특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협의회별 특화사업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의 통일교육에서 벗어나 통일교육의 광역

화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이벤트성 행사가 되기 쉽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 단체별 특성화 및 유기적 연계

1990년대 이후 사회 통일교육이 다변화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일부 민간단체의 사회 통일교육은 단체별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대상별로 특화시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단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민간단체의 통일교육은 백화점식 통일교육, 즉 어떤 특화된 대상이나 교육 방법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특성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청소년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대상에 따라 교육내용이나 방법에 차별성이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선정된 주제나 교육 방법은 새로운 것이라면 그대로 적용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통일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나아가 통일 및 사회통합 과정에서 가정과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여성, 특히 주부대상의 통일교육은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 및 민간단체의 경우 상호간의 교육프로그램 교류나 정보 공유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이다. 대부분 각 단체들은 독자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있다.

바. 정부와 민간의 협력

우리 나라는 통일교육을 시작한 이래 90년대에는 통일논의와 교육의 개방화, 민주화,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통일논의와 관련된 자유로운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통일교육의 개방화, 민주화,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의 내용 마련 등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정부 주도적 통일교육 정책의 전통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한편에서 국민들은 통일교육과 논의의 자율기능과 창조적 적응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부가 나서서 통일논의를 중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민간단체 할 것 없이 문제만 발생하면 정부의 입을 쳐다보는 정부 의존적 행태가 잔존하고 있다. 사회 통일교육의 실천적 장소인 교육기관과 단체는 정부가 자신들을 관리나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불신을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제 정부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공공 및 민간단체간의 신뢰에 기초한 유기적 협조와 분담된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VI. 공무원 통일교육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공무원 통일 교육은 우리 나라의 사회통일교육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별히 통일교육원과 공무원교육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공무원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는 작업을 시도하겠다.

1. 통일교육원의 공무원 통일교육

가. 통일교육원의 운영실태

통일교육원은 통일요원(행정·교육분야)과 민간통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양성에 주력하는 통일부 산하 전문 통일교육기관이다.

통일요원(행정·교육분야) 교육의 목표는 급변하는 통일환경·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일이전과 통일과정에서 통일업무를 기획·주도해 나갈 분야별 통일요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데 있다. 행정요원은 관리직 공무원(4~5급)을 중심으로 업무기능 분야별로 차출하여 연수반을 편성하고 있다.

통일교육원은 통일대비요원과정을 2000년도부터 통일요원과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기간은 1999년 2~3주간에서 2주로 조정하였다.

1999년도 교육 추진실적('99.11.3 현재)은 행정관리요원(4~5급) : 170명, 행정실무요원(6~7급) : 723명, 통일교육요원 : 346명 통일요원교육 이수자 재교육: 172명 등 총 1,41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2000년도에는 행정관리요원(4~5급) : 600명, 학교교육요원(도덕·윤리담당중등교사, 교육전문직) : 350명, 이탈주민보호담당관 : 150명, 통일요원 이수자 재교육 : 600명 등 총 1,700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한편, 민간통일교육의 목표는 일선 통일교육현장의 사회지도층 인사를 민간통일교육 전문가로 양성하여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에 대한 범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과 지방화시대의 지역사회 통일교육 활성화에 두고 있다. 통일교육원은 통일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계각층의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면서 통일교육의 실효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통일교육원은 특별과정 교육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 학생회 간부 등 통일 여론주도 계층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남북교류 확대 및 대북협력사업 활성화 등 통일교육 수요 확대에 부응하고 있다. 1999년 추진실적은 지방자치단체장반(3일): 80명, 대학재학생반(3일): 581명, 자원교육반(1일): 1,535명, 남북교류협력반(1일): 3,464명 등 총 5,660명('99.10.31 현재)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2000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반(3일): 100명, 대학재학생반(3일): 800명, 자원교육반(1~2일): 1,000명, 방북예정자반(1일): 4,500명, 대북협력사업자반(1일): 300명 등 총 6,700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나. 통일교육원 교육내용과 운영계획

(1) 교육목표

<표 VI-1> 통일교육원 교육목표

-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 통일환경과 북한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건전한 안보관 확립
- 평화와 화해·협력의 대북포용정책 추진에 대한 당위성 인식 및 실천의지 형성

(2) 추진방향

<표 VI-2> 통일교육원의 교육 추진방향

- 통일문제 관련 여론 선도층 및 각계 지도층 인사에 대한 교육 강화
 - 통일교육전문위원, 평통자문위원, 사회교육기관장·강사, 교장·교감·교사·교육전문직, 대학교수, 공직자 등
- 남북 화해·협력시대의 교류협력활성화에 대비한 방북자 교육 확대
 - 북한방문 경제인·종교인, 경수로사업 추진인력 등 교류 협력인사, 금강산 관광 등에 따른 방북 관광객
- 통일요원의 체계적 양성
 - 통일 이전·과정에서 통일관련업무를 담당해 나갈 통일요원(행정·교육 분야)의 체계적 양성
- 국민들의 바람직한 통일관 확산과 건전한 안보의식 함양
 - 사회단체간부, 언론기관종사자, 대학생 등
-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교과과정 편성과 다양한 교육기법 활용
 - 대상·과정별 특성에 적합한 교과과정 편성
 - 세미나, 대담토론,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분단현장 견학 등 참여식 수업 확대
 - 통일·북한 전문가 및 정책실무자 등을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 개진
 - 최근의 북한자료를 집중 활용하여 실증적 교육 강화

(3) 교육내용

<표 VI-3> 통일교육원 교육내용

구 분	교 과 내 용
통일의 당위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의 의미와 성격 ○ 분단의 배경과 폐해 ○ 평화통일의 필요성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체제의 특징: 정치·경제·사회·문화 ○ 북한의 변화 가능성 ○ 북한의 대남전략·대외정책
평화통일환경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질서의 변화 ○ 통일환경의 변화가 주는 함의 ○ 평화정착을 위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대북 정책과 남북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포용정책과 국가안보 ○ 남북기본합의서 ○ 남북관계의 현황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국 통일의 교훈 ○ 통일사회의 미래상 ○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 ○ 민주복지사회의 구현
체험·참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문점, 땅굴 등 분단현장 시찰 ○ 주제별 토의·과제 연구, 대담토론 등

(4) 교육운영계획

<표 VI-4> 통일교육원 교육운영계획

과 정·반 명	대 상	학급 인원	학급 수	계획 인원	합숙 여부	기간	
통일교육전문과정	통일교육전문위원반	통일교육전문위원(연찬)	50	5	250	합숙	3일
		통일교육전문위원(신규위원)	50	2	100	합숙	5일
	평통자문위원반	민주평통자문위원(신규위원)	50	7	350	비합숙	1일
		민주평통자문위원(홍보위원)	50	3	150	합숙	3일
	사회교육반	사회교육기관 강사	45	4	180	합숙	3일
		사회교육기관장	45	1	45	비합숙	3일
		민방위교육강사	45	2	90	합숙	3일
	학교교육반	학교교사	90	13	1,170	(비)합숙	3일
		교장·교감, 교육전문직	45	6	270	비합숙	3일
		대학교수	45	4	180	합숙	3일
	공직자반	관리직공무원(2-4급)	40	2	80	비합숙	3일
		읍·면·동장	45	6	270	비합숙	3일
		정훈장교	45	3	135	합숙	3일
		이탈주민보호담당관	45	4	180	합숙	3일
	통일직무반	통일부공무원	25	2	50	비합숙	5일
	소 계			64	3,500		
남북교류협력과정	방북예정자반	북한방문예정자	40-50	92	4,560	비합숙	1일
	관광도우미반	금강산관광도우미(신규)	10	4	40	비합숙	1일
		금강산관광도우미(연찬)	25-35	12	400	비합숙	1일
	소 계			108	5,000		
통일요원과정	행정요원반	4-5급공무원	45	8	360	비합숙	2주
	교육요원반	중등교사, 교육전문직	90	4	360	(비)합숙	2주
	통일요원교육이수자반	'98년이전통일요원교육이수자(행정)	100	2	200	합숙	3일
		'98년이전통일요원교육이수자(교육)	100	1	100	합숙	3일
	소 계			15	1,020		
합 계			209	10,900			

과정·반명	대상	학급 인원	학급 수	계획 인원	합숙 여부	기간	
특별과정	정부관련기관 간부반	정부관련기관간부	45	1	45	비합숙	3일
	사회단체 간부반	노동조합간부	45	4	180	합숙	3일
		종교단체간부	45	1	45	비합숙	2일
		여성단체간부	45	3	135	비합숙	2일
	통일단체 간부반	통일관련단체간부	50	4	200	합숙	2일
	대학생반	북한학수강생, 학생회간부	90	4	360	합숙	3일
	방송국 PD·작가반	방송국 PD·작가	45	1	45	합숙	2일
	자원교육반	자원(自願)교육자	90-100	4	370	비합숙	1-2일
소 계			22	1,380			
합 계			209	10,900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과정은 공무원·교사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하고 있다.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공직자) 통일교육과정은 통일교육전문과정의 공직자반(관리직 공무원 2-4급, 읍·면·동장, 정훈장교, 이탈주민보호담당관 각 3일) 및 통일직무반(통일부 공무원 5일), 통일요원과정의 행정요원반(4-5급 공무원 2주) 및 통일요원교육이수자반('98년 이전 통일요원교육이수자 3일), 그리고 특별과정의 정부관련기관간부반(3일) 등으로 세분화하여 교육대상의 수준에 맞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통일요원과정의 경우, 기존의 교육과정과 함께 통일요원교육 이수자반을 통해서 3일간의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점은 교육이수자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육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일교육은 통일요원과정의 통일행정요원반으로, 2000년도에는 정부 각 부처, 특별·광역시, 도의 4-5급 공무원 360명을 대상으로 2주간의 교육일정으로 8기로 나

누어 교육하고 있다. 통일행정요원반은 그 교육대상의 구성과 교육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 및 체제전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전문요원들을 교육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다. 통일행정요원 교육과 교과과정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은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김영삼정부는 북한을 ‘고장난 비행기’에 비유하면서 북한의 조기붕괴시에 대비한 남북통합 작업의 일환으로 공무원과 교사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1997년도 통일대비 행정요원반의 교육목표는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통합 및 체제전환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범정부적 통일준비태세를 확립”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통일대비 행정요원반의 주요교육 내용은 (1) 통일업무 기초: 통일대비계획 최근 북한의 동향과 대남 전략 분석, 남북한 통일시나리오,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 정책 추진방향 등 통일대비 전문교육의 기초적 입문. (2) 북한실상 이해: 정치, 경제 등 체제의 현황과 특성,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의식구조, 북한체제의 변화유형 분석과 위기관리 등 통합 및 체제전환에 필요한 북한실상 이해. (3) 통합 및 체제전환업무 이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남북한의 주요 통합 및 체제전환과정에서의 정책과제 등이며, 교육기간은 4주간이다.

김대중정부가 출범한 1998년도부터 1999년까지는 통일대비 행정요원반이란 명칭을 통일행정관리요원반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간을 3주로 줄였다. 그리고 교육의 목표를 1998년도에는 “현실적 과제인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업무 및 체제전환교육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전문요원을 양성함으로써 정부차원의 통합대비능력을 제고, 통일준비태세를 확립”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는 “현실적 과제인 (통일)” 부분이 빠지고 곧바로 “통일에 대비.....” 하는 교육이라고 하여 통일교육

의 목표를 일부 수정하였다. 이는 김대중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의 조기붕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제하에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한 것에 맞추어 교육목표를 ‘당면한 현실적 과제인 통일’에서 ‘미래의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교육’으로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통일행정요원의 교육목표를 “통일환경·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일이전·과정에서의 남북한 화해·협력 및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문행정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김대중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남북 당국간에 신뢰가 조성되자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의 목표를 화해·협력과 민족공동체 형성에 두고 남북한간의 공존·공영에 필요한 통일교육으로 교육목표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2000년도 통일행정요원의 통일교육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통일문제 이해: 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환경변화와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 정부의 대북 정책, 남북한관계의 변천과정과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교류협력 현황과 과제, 금강산관광사업의 의의 및 추진현황, 대북경수로사업 추진현황,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개방사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등 통일문제의 기초적 이해. (2) 북한실상 이해: 북한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문화·예술, 북한주민생활과 가치관, 북한TV 시청 및 노동신문 윤독 등 북한실상 이해. (3) 분야별 과제 이해: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 남북한 주요과제 이해 등이며 교육기간은 2주로 또 다시 줄어들었다.

<표 VI-5> 통일행정요원 교과과정 및 교과목

분 야	교 과 목	시간
통일문제 이 해	통일 어떻게 볼 것인가	1
	행정공무원의 임무와 역할	1
	통일환경변화와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	1.5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사례	1.5
	남북한관계의 변천과정과 남북기본합의서	1.5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한 현안문제	1.5
	남북교류협력 현황과 과제	1
	금강산관광사업의 의의와 추진현황	1
	대북경수로사업 추진현황	1
	세미나(1)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1.5
종합토의(1) - 통일환경과 대북 정책	2	
북한심층 이 해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1
	북한의 정치체제와 통치이념	1.5
	북한의 대외정책과 외교실태	1.5
	북한 TV 시청 및 노동신문 윤독	1.5
	북한의 군사문제	1.5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2
	북한주민생활과 가치관	2
	북한문화·예술의 특징	1.5
	북한의 영화	1
	세미나(2) - 북한의 변화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2
탈북주민과의 대화	1.5	
분 야 별 주요과제 이 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 및 과제	1.5
	통일국가의 미래상	1
	독일통일이후 경제 통합사례	1.5
	남북한 행정체제 비교	1.5
	남북경제공동체 건설방향	2
	세미나(3) -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2
	남북한 문화비교와 접근방향	1.5
	종합토의(2) - 교육전반	1.5
기 타	특 강 - 통일비전과 선비정신	2
	행정시간(입교, 설문, 수료식 등)	3
	분임 토의 및 연구발표	4.5
	현장체험학습(관문점, 오두산)	6.5
	체육활동(북한산 등반)	4
	레크레이션	1

<표 VI-6> 교육교사·행정공무원반 교과과정 비교표

2000년 교육교사반(2주)			2000년 행정공무원반(2주)			1999년 통일대비교육요원반(3주)		
분야	교과목	시간	분야	교과목	시간	분야	교과목	시간
통일 문제 이해	통일 어떻게 볼 것인가	1	통일 문제 이해	통일 어떻게 볼 것인가	1	입문	과정안내	1
	통일환경변화와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	1.5		행정공무원의 임무와 역할	1		통일대비방향과 과제-통일교육요원의 임무와 역할	1.5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사례	1.5		통일환경변화와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	1.5	통일 업무 기초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관계 현안문제	1.5
	남북한관계의 변천과정	1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사례	1.5		북한체제 이해	1.5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한 현안문제	1.5		남북한관계의 변천과정과 남북기본합의서	1.5		통일환경변화와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	1.5
	남북교류협력 현황과 과제	1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한 현안문제	1.5		남북관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2
	종합토의	1.5		남북교류협력 현황과 과제	1		사회주의체제 전환사례	2.5
				금강산관광사업의 의의와 추진현황	1		세미나(1) - 학교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등	3
		대북경수로사업 추진현황	1	종합토의(1) - 통일환경 및 통일정책	2.5			
		세미나(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1.5	북한사회구조와 체제적 특성	1.5			
		종합토의(1)- 통일환경과대북정책	2	체험자가 본 북한	1.5			

2000년 교육요원반(2주)			2000년 행정공무원반(2주)			1999년 통일대비교육요원반(3주)		
분야	교과목	시간	분야	교과목	시간	분야	교과목	시간
북 한 심 층 이 해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1	북 한 심 층 이 해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1	북 한 심 층 이 해	북한의 정치와 주체사상	1.5
	북한정치체제의 특성과 주체사상	1.5		북한의 정치체제와 통치이념	1.5		북한경제의 특성과 전개과정	2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2		북한의 대외정책과 외교실태	1.5		북한주민의 직장·가정생활	1.5
	북한 TV시청, 노동신문 윤독	1.5		북한 TV 시청, 노동신문 윤독	1.5		북한의 인권실태	1
	북한의 군사	1		북한의 군사	1.5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의식구조	2
	북한청소년의 일상생활과 학교생활	1.5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2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현황	1
	북한 주민생활과 가치관	1.5		북한 주민생활과 가치관	2		시 청 각	2
	북한의 교육실태	1.5		북한 문화· 예술의 특징	1.5		탈북주민과의 대답	6.5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 및 과제	1		북한의 영화	1		북한영화 시청 및 토론	7.5
	탈북주민과의 대화	1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실태와 과제	1.5		종합토의(2) - 북한실태	3
	방북체험자가 본 북한	1		탈북주민과의 대화	1.5			
	북한 문화· 예술의 특징	1		방북체험자가 본 북한	1.5			
	북한 영화보기	1		세미나(2) - 북한의 변화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2			
세미나-북한체제 변화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2							

2000년 교육요원반(2주)			2000년 행정공무원반(2주)			1999년 통일대비교육요원반(3주)		
분 야	교 과 목	시 간	분 야	교 과 목	시 간	분 야	교 과 목	시 간
통일 준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제체제 비교	1.5	분 야 별 주 요 과 제 이 해	통일국가의 미래상	1	통 합 및 체 제 전 환	통일전후 독일정치교육의 현황과 교훈	2
	남북한 역사인식의 비교	1.5		독일통일이후 경제 통합사례	1.5		국가통합이론	2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통일국가의 미래상	1		남북한 행정체제 비교	1.5		남북한 경제통합 방향	1.5
	남북한 교육의 비교와 동질화문제	1.5		남북경제공동체 건설방향	2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통일국가의 미래상	1.5
	독일통일의 부문별 과정과 문제점	2		세미나(3)- 남북사회문화 공동체형성방안	2		시장경제원리와 경제체제비교	1.5
	남북경제공동체 건설과제와 추진방향	1.5		남북한 문화비교와 접근방향	1.5		남북한 사회갈등해소와 동질성 회복방안	1.5
	세미나 - 학교통일교육의 과제	3		종합토의(2) - 교육전반	1.5		통일후 동독주민의 체제전환 경험사례	1.5
	세미나 - 남북한사회문화 이질화와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방안	2					북한의 전통문화 변질상태와 문화통합방안	2
	세미나 - 통일독일교육의 교훈	2.5					탈북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1.5
							남북역사인식 비교와 통일이후 역사 재정립방안	1.5
							북한교육의 이념과 원리	1.5
							남북한 교육통합방안	1.5
				남북한 언어이질화실태와 극복방안	1.5			
				세미나(2) - 북한체제변화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2.5			
				체제전환교육의 기본방향	1.5			

2000년 교육요원반(2주)			2000년 행정공무원반(2주)			1999년 통일대비교육요원반(3주)		
분야	교과목	시간	분야	교과목	시간	분야	교과목	시간
기 타	특강 - 정보화시대의 통일교육	2	기 타	특강 - 통일비전과 선비정신	2	특 강	정보화시대의 교육	1.5
	행정시간 (입교, 설문, 수료식 등)	3		행정시간 (입교, 설문, 수료식 등)	3		통일비전과 선비공인	2
	분임 토의 및 연구발표	5.5		분임 토의 및 연구발표	4.5		원장과의 대화	1
	현장체험학습 (판문점, 오두산)	5		현장체험학습 (판문점, 오두산)	5.5	기 타	행정시간 (입교, 설문, 수료, 나의각오,평가 등)	3.5
	체육활동 (북한산 등반)	3		체육활동 (북한산 등반)	4		분의 토의	6
	레크레이션	1		레크레이션	1		분임 과제 연구발표	2.5
	평가	1.5					현장교육 : 집경지역견학	5
							체육활동 (북한산 등반)	3
							자율학습 및 친교시간	2
	계	65		계	65.5		계	99.5

2. 각급 공무원 교육원의 통일교육

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자치행정연수부

창조적 지식기반 구축으로 ‘21세기를 선도할 지방행정인 양성’과 ‘수요자중심의 열린 교육’으로 교육훈련의 경쟁력 강화를 교육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자치행정연수부의 통일교육은 장기교육(고급

간부과정, 중견간부양성과정, 여성간부양성과정) 중 고급간부과정과 선택전문교육과정(54과정) 중의 하나인 통일직무요원과정에서 통일교육 관련 교과를 중점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방 4급을 대상으로 43주간(2000.2.23~12.15) 교육하고 있는 ‘고급간부과정’에서는 통일·안보 과목으로 최근의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안전보장(3시간), 비상대비(3시간),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3시간), 남북한 교류실태와 전망(3시간), 통일시대를 위한 지방의 대응(3시간), 북한의 실상과 체험소개(6시간) 및 안보현장 견학(판문점·통일전망대 등 24시간) 등 총 45시간의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 6급을 대상으로 6개월(2000.5.17~11.16) 동안 교육하고 있는 중견간부양성과정에서는 국제정세변화와 우리의 통일정책 3시간을 설치하고 있으나, 지방 6급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간부양성과정에서는 통일관련 과목을 한 과목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자치행정연수부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지방 6-7급을 대상으로 한 선택전문교육과정(54과정) 중의 하나인 ‘통일직무요원과정’이다. 1주일간 실시되는 통일직무요원과정의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VI-7> 통일직무요원과정

교육구분	선택전문			교육평점	5 점		
교육 목표	○북한 실상의 정확한 이해를 통한 통일준비 역량 제고 ○자유민주주의 의식함양과 통일대비 전문인력 배양						
교육 특징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등 실상을 심층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북한정세 급변시 지방행정관련 대비사항 중점 교육						
교육 기간	2000. 10. 9~10. 13(1주)						
교육 인원	80명						
교육 대상	지방 6·7급						
교과 편성	구분	계	소양분야	직 무 분 야			행정 및 기타
				소 계	직무공통	직무전문	
	시간	34	4	28	-	28	2
비율	100%	12%	82%	-	82%	6%	
교육 내용 (교과목)	< 직무분야 > ○한반도 정세변화와 우리의 통일정책 방향 (3H) ○남북한 갈등해소와 동질성 회복방안 (3H) ○대북경협사업 추진현황과 전망 (2H) ○북한사회 체험자와의 대화 (3H) ○행정자치부의 통일관련 주요업무 (2H) ○탈북주민 수용대책 (2H) ○지방재정 과제와 대책 (2H) ○지방세정 과제와 대책 (2H) ○지적 및 토지제도 과제와 대책 (2H) ○안보현장 학습 (7H) < 소양분야 > ○21C의 바람직한 공직자세(2H) ○친절봉사 행정서비스 제고 방안(2H)						
교육 운영 부서	자치행정연수부 교육총괄과 운영담당	연락처	(031) 250-5266~7	교육경비	유상		

* 출처: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자치행정연수부, 『2000 교육훈련계획』(2000), p. 152.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자치행정연수부의 기본교육과정에서는 지방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신임관리자과정’에서 통일안보관련 2과목(한국의 국방 및 안보정책 2시간, 탈북자와의 대화 2시간)을 교육하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교육과정에는 통일교육관련 과목을 거의 설치하지 않고 있다.

나. 중앙, 특별·광역시·도 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는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에 대한 기본교육 44주 교육을 실시하는 ‘고위정책과정’에서 6주간의 안보·통일교과를 운영하고 있다. 교과목 편성상으로는 행정·정책 37과목 74시간, 경제·과학 45과목 90시간, 사회·문화 35과목 70시간, 안보·통일 25과목 50시간, 참여식 교육 17과목 1,254시간 등으로 안보·통일과목이 상당히 많이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국방 및 안보환경 2과목 4시간(한국의 국방 및 안보정책, 최근의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전보장), 남북교류 및 통일환경 2과목 4시간(국민의 정부 통일정책, 남북한 교류실태와 향후전망), 북한의 실정 3과목 6시간(북한의 정치 및 경제, 북한 핵의 실체와 경수로 지원사업, 최근의 북한 실상), 국제관계 4과목 8시간(미국·중국·러시아·일본의 정세분석과 전망 각 2시간) 등 13과목 22시간만이 안보·통일관련 과목이다. 나머지 과목은 특강 1과목 2시간(21세기 고위공직자의 자세와 역할), 문화·예술 8과목 16시간(북한문화유적답사기를 제외한 7개 과목은 안보·통일과 무관한 문화·예술과목), 기타 5과목 10시간(외국인이 본 한국인, 직장인의 건강관리 I, II, 극한의 도전) 등으로 안보·통일교육과 무관한 교과목을 안보·통일분야에 변칙적으로 편성해 놓고 있다.

행정·기술고등고시 합격자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신임관리자과정’(26주 교육)의 경우 국정원 및 통일전망대 방문(1과목 7시간, 전체 교육시간의 1%)으로 통일교육을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7급승진자과정’의 경우 보안·통일·안보 및 비상대비 관련 교육 4시간을 국가정보원 또

는 통일교육원 방문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특별·광역시·도 공무원교육원의 경우는 예외 없이 통일교육관련 교과목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소양교육에 2시간을 배정하여 연 평균 8-30시간의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경우 정신소양 교육 3과목 6시간 중에서 통일관련 1과목 2시간을 교육하고 있다. 제4기 자치행정전문과정(2000.8.28~9.8)의 경우 남북협력 과제와 향후전망(강사 안두순 서울시립대 교수)이란 과목을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제2기 회계실무과정(2000.8.28~9.1)의 경우는 통일시대의 바람직한 남북한 관계(강사 양재성 통일교육원 교수)란 과목을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교육내용의 변경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공무원 통일교육의 문제점

그 동안 공무원 통일교육이 북한정세변화 이해와 통일준비역량 제고, 그리고 안보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통일의지를 함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부응하는 통일교육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의 공무원 통일교육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첫째, 통일교육보다는 안보교육에 치중하면서 현장견학 중심의 통일교육을 실시해 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 동안의 공무원 통일교육은 북한의 남침 위협 강조, 그리고 땅굴, 전쟁기념관, 판문점 등 냉전시대 유물들을 견학하는 등 반공 위주의 안보교육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통일·안보교육을 담당했던 강사들 또한 대부분이 냉전시대적 사고를 가진 보수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었다. 따라서 지난 시기 통일교

육은 미래지향적인 순수한 통일교육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고위정책과정 중심의 통일교육이 이뤄졌으며 교육내용이 부실하고 교육시간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고급간부과정과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고위정책과정 등의 장기 교육과정에서는 비교적 많은 시간의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 하위 공무원 교육과정에서는 구색 맞추기 정도로 한두 과목의 통일·안보 관련 교과목을 정신소양 교과목으로 설치하거나 아예 통일관련 교과목이 빠진 교육과정도 많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심지어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고위정책과정의 경우 안보·통일 교과목 분야에 문화·예술 등 통일교육과 관련이 없는 교과목을 설치한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통일교육 관련 교재 및 시청각 자료의 개발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올바른 통일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통일교육 관련 표준 교재와 비디오 등 시청각 교재를 개발·활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재개발 및 다양한 교육자료 활용을 등한시켰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넷째, 공무원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과내용을 살펴볼 때, ‘한반도 주변정세’, ‘최근 북한정세’, ‘안보의식 강화’, ‘통일대비’ 등으로 주로 북한·통일문제에 관한 일반적 사항만을 다루고 있을 뿐, 공무원이 남북한 화해·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행정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부족하다.

공무원이 남북 교류·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통일문제에 관한 기본적 지식의 습득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정세, 안보에 대한 내용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행정체제에 대한 정보, 대북교류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진단 및 이의 해결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 경험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

원들에게는 북한의 경제무역관련단체, 중계무역회사, 종합상사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외국인 투자법률에 관한 교육이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 통일교육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과 차이가 없이 소양교육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을 뿐, 전문적 내용이 없어 화해·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행정수요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의 마지막 문제는 교육이 너무 주입식 위주의 강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행정요원 양성과정의 계획표에 따르면 강의, 분임토의, 세미나, 발제강의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밖에 교육 중에 탈북주민과의 대화 및 토론의 시간이 있으며, 시청각 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시간이 주입식 강의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세미나와 발제강의도 강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타 중앙공무원의 고위정책과정,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자치행정연수부의 통일직무요원과정에서도 거의 강의중심의 교육이 되고 있다.

나. 통일교육의 개선방향

(1) 공무원 통일교육의 확대 및 강화

남북정상회담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만을 허용하면서 정부간의 모든 접촉을 기피하여 왔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민간차원의 교류사업을 조율하는 소수의 공무원 또는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통일대비행정요원 등 일부 공무원들에게만 통일교육이 필요했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민간차원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수많은 행정수요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북한 및 통일문제에 정통한 많은 정부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모든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도 교육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통일문제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문제만은 아니다. 오히려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될수록 이에 따른 행정수요를 충족할 북한문제 전문 행정인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통일교육의 강화가 시급하다.

(2)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맞는 통일교육

남과 북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남북간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남북화해·협력시대의 개막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통일교육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북한체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한 가운데 남북화해·협력시대 분야별 실상을 이해하는 미래 지향적인 통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의 개편과 강사진의 교체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3) 실용적인 통일교육으로 개편

그 동안의 통일교육이 안보교육과 남북한 체제통합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남북교류·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 및 각종 사회·문화·체육 등의 교류협력과 관련한 교과목이 증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공무원 교육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무원 통일교육 지침서’를 마련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통합 대비전문요원들에 대한 교육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한다. 한 차원 높은 재교육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자료지원을 통해서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원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시작한 1997

년에는 교육기간이 4주였으나 1999년 2-3주로, 2000년 현재는 2주로 줄었다. 북한의 조기붕괴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교육기간이 단축된 것 같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교육기간을 원래대로 4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각급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에서 통일관련 교과목을 필수화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남북관계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통일교육원의 위상과 역할 강화

공무원 통일교육을 가장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통일교육원이다. 그러나 통일교육원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각급 교육원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되 교육요원들을 정기적으로 통일교육원에 위탁하여 재교육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 산하의 통일교육원이 통일관련 각 분야의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통일교육의 중심센터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통일 및 북한에 관한 연구와 교육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00년 현재 9명의 교수가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인원으로 통일교육원의 기본 임무인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한 국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 그리고 통일문제 및 국민정신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일교육관련 전문인력의 확충이 요망된다.

(5) 각급 공무원 교육원의 통일교육 전문인력 확보

각급 공무원교육원이 통일교육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통일교육원, 국가정보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초빙강사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앙공무원교육원 조차도 통

일교육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외부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대학 및 대학원에 북한학과가 설치되고 통일·북한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여 통일교육 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VII. 독일의 통일교육 운영체계

현재 한국에서 ‘통일교육’이란 “남북한 통일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합리적 선택과 비판을 위한 분석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숙달시키며, 통일국가를 성취하려는 당위성과 통일과정에 대한 민주적인 가치, 그리고 통일문제에 관련된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의식을 형성하고자 하는 교육”³⁶⁾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통일교육이란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에 필요한 지식, 태도, 가치관, 행위규범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배양하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분단을 경험하였던 독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통일 이후에도 분단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통일교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1945년 이후 독일 현대사의 정치학 또는 사회학 용어 중에서 ‘통일교육’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현재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독일(서독)에서는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통일교육과 비슷한 목표와 내용을 가진 교육이 행해졌으며, 현재까지 행해지고 있다. 물론 독일의 ‘정치교육’이 한국의 ‘통일교육’의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통일문제 또는 민족문제와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었던 것이 아니라,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써 익혀야 할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독일의 통일교육, 즉 민족분단에 관한 문제와 통일문제를 다루는 교육은 정치교육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통일교육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교육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본 장에서는 통일 전후 독일 민족의 화해 협력과 통일 위한 노력을 살펴

36) 한만길,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9), p.16.

보도록 하겠다.

1. 독일의 정치교육

가. 서독의 정치교육

독일인들에게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고 불리우는 對국민 교육은 바이마르공화국(Weimar Republik:1918-1933)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다. 세계 1차대전의 패배와 함께 시작된 바이마르 공화국의 뜻 있는 지도자들은 민주정치체제의 도입과 함께 국민의 의식변화를 위한 민주적인 국민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하였고, 이를 위한 실천기반을 마련하려 하였다. 바이마르공화국 지도자들이 1918년 ‘제국향토봉사센터(Reichszentrale für Heimatdienst)’라는 초당적인 정치교육기구를 설립하였던 것도 패전으로 인해 흐트러진 독일국민의 단합을 강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국민의 식을 고취시키고자 했던 노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치의 집권과 함께 바이마르 공화국은 실패로 끝났으며, 독일의 실질적인 정치교육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시작되었다. 나치정권을 패망시킨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전승국, 특히 미국은 전후 유럽에서의 독일의 위치를 중시하여 독일을 자유세계의 한 국가로 인정하는 한편 독일의 민주화에도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미국은 독일이 민주적인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구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독일 국민을 상대로 민주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미국은 독일과 같이 비민주적 정치문화의 전통이 지속되어온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정치제도나 정부형태의 도입뿐만 아니라, 국민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이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학제 및 학과 과목의 개편, 새로운 수업방법의 도입,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재정립 등이며, 특히 국민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독일의 민주화를 위해 새로운 국민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미국인들만의 생각이 아니었다. 독일 지식인들 사이에도 전쟁의 패배가 독일로서는 절망을 의미하는 ‘無의 시간(Die Stunde Null)’만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 특히 독일 국민의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³⁷⁾ 이들은 바이마르공화국의 예를 들면서 독일에서의 민주주의 확립은 단순히 정치제도의 도입으로는 불가능하며 먼저 국민의 의식개혁을 하여야 하며, 이는 지속적인 對국민 민주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미국과 뜻있는 독일인의 개혁정신은 서방연합국 점령주에서 점차 받아들여졌으며, 특히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 서독)’ 정부수립과 함께 정치교육으로 점차 그 뿌리를 내리게 된다. 물론 정부수립 직후에는 전쟁의 패배와 전후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인한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정치교육의 목표와 방법, 내용 등에 대한 서독 지식인간의 의견차이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점차 서독의 정치교육은 뿌리를 내리고, 그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서독정부는 정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에 설립하였던 ‘제국향토봉사센터’를 1952년 ‘연방향토봉사센터(Bundeszentrale für Heimatdienst)’라고 개칭하여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정치교육을 과감히 전개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또한 1955년 연방정부와 주 정부 합동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교육을 위해 연방과 주정부가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결의하였다.

서독의 정치교육이 결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1963년 연방향토봉사센터를 ‘연방정치교육센터(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으로 개칭하고 범국민적 민주교육에 박차를 가한 이후였다. 내무부 산하의 조직이지만 초당적인 이 기관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민주

37) 대표적인 학자는 야스퍼스(Karl Jaspers)로서, 그는 1949년 라디오 회견에서 1945년은 독일 역사의 종말이 아닌 독일 국가사회주의(나치즘)의 종말이라고 강조하면서 서독인들은 이를 정치의식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K. Jaspers, *Freiheit und Wiedervereinigung*, Freiburg 1950.

시민의 양성과 민주적인 정치문화를 창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와 함께 기민당(CDU), 사민당(SPD), 자민당(FDP) 등 서독의 각 정당들도 정치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여서, 당 자체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물론 각 정당 소속의 재단 등을 통해서도 정치교육사업을 추진하였다.³⁸⁾

서독 정치교육의 목표는 주마다 조금씩 달랐으나³⁹⁾ 기본방향은 비슷하다. 그것은 한마디로 인간의 자기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실현이다. 즉 국민에게 사회적·정치적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또 그들의 의무와 권리를 지각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독의 정치교육의 목표는 국민에게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게 하는 한편, 기존의 가치체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사회적 의식을 가지고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참가·비판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있다. 나아가 서독의 정치교육은 국제사회에서 지녀야 할 의식과 태도가 무엇인가를 인식시켜 국가의 안전질서를 유지하며 국제평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⁴⁰⁾

서독 정치교육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개인이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써 필요한 자질과 교양을 함양하는 것에 중심을 두었으나 시대적·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다. 서독정부수립 직후인 1950년대 정

38) Gerhard Langguth, "Politische Stiftung und politische Bildung in Deutschland",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34, 1993, p.38-42.

39) 예컨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 Westfalen) 주교육부의 정치교육 기본방향은 전통적인 사상과 가치체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헤센(Hessen)주 정치교육의 목표는 "젊은 사람을 도덕적인 인격자로 길러 국민과 인류에게 경의, 박애, 존중과 관용, 정당과 정직을 통하여 자주적이고 책임있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그가 직업적인 유능함과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길러내는데" 있다. 신세호 외, 『독일 교육통합과 과생문제점 분석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3), p.69-70.

40) 김택환 외, 『국민정치교육의 효과적 추진방향과 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고원대학교, 1987, p.57.

치교육의 중심 내용은 무엇보다도 나치즘의 청산과 아울러 민주주의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 정치교육이 강조한 몇 가지 내용을 보면, ①민주주의 이념과 제도에 대한 교육, ②반군사화, 반나치교육, ③ 편협한 애국주의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유럽적 사고의 강조, ④ 특히 국가경제발전에 따른 개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강조 등이었다.⁴¹⁾

1950년대 서독 정치교육의 내용 중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분단된 독일과 통일에 관한 것이었다. 서독은 정치교육에서 동독 공산정권의 정통성을 부인하면서 자유선거에 의해서 성립된 서독정부만이 全獨逸의 단독 대표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제적 감시에 의한 자유선거에 의해서 독일이 재통일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서방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의 결속을 더욱 강조하였다. 특히 1945년 이후 보여준 소련의 팽창주의 정책, 이로 인한 동독을 비롯한 동구 제국의 공산화, 한국전쟁의 발발 등은 서독정부와 국민이 강력한 반공정책을 추진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정치교육의 내용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회 다방면에서 갈등이 표출되었다. 서독은 경제건설에 국민의 총력을 집결시킨 결과 1950년대 이후 소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1960년에 들어와서 이에 따른 소득 격차의 확대로 사회갈등은 증폭되고 국민들은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1960년대 중반 이후 서독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소위 ‘68운동’이라고 불리우는 학생들의 개혁운동, 극우파인 국가민주당(NPD)의 득세, 극좌파인 독일공산당의 창당 등으로 인해 사회는 혼란스러웠다. 이에 정치교육도 이러한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할 필요가 있었다. 1960년대 서독 정치교육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⁴²⁾

41) 오일환, “통일을 전후한 독일의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29집 2호, 1995, p.531.

42) 김택환, “독일의 민주화와 민주시민교육”, 전득주 외, 『현대민주시민교육론』, (서울:평민사, 1992), p.187.

- ① 민주주의 국가질서와 사회 발전의 변화에 대한 문제
- ② 민주주의 기능과 역할
- ③ 자유·법치민주주의의 적대자들의 목적과 활동에 대한 논쟁
- ④ 소수민족, 소수인종에 대한 선입관과 배타적인 태도의 극복과 관용에 대한 인식
- ⑤ 독일역사에 대한 비판적 입장
- ⑥ 국제정세, 다른 국가 및 민족의 생활양식과 정치에 대한 이해
- ⑦ 유럽의 통합, 국제협력과 정치적·군사적 평화협정의 필요성과 국제문제들에 대한 이해
- ⑧ 국가와 사회 그리고 제3세계에 대한 관계와 문제
- ⑨ 사회·경제적 갈등과 이의 해소 방안

1970년 이후, 특히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서독 정치교육의 주요 내용은 독일의 분단 및 통일에 관한 문제였다. 서독은 동독을 국제법상의 합법정부로 인정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통일논의는 자제했다. 대신 서독은 동독과의 관계에서 갈등·대립을 완화시키는 방안과 평화적 공존에 요구되는 여러 조건을 모색하고 국제적 안정과 평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서독은 민족의 통일을 영원히 포기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서독은 동독과의 관계를 ‘외국’인 아닌 ‘특수한 관계’로 규정하면서 궁극적으로 독일의 통일을 달성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교육시켰다.

1980년대 서독 정치교육의 중심내용은 다시 한번 변화하였다. 국민들의 정치적 염증현상 증대, 정치적 참여의식의 감소 등으로 인해 국민의 정치참여, 사회참여 문제가 정치교육에서 강화되었다. 또한 국제적 상황이 다변화됨에 따라 국제정세의 변화 내용과 그 배경 등이 정치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등장했다.

1989년 이후 나타난 공산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1990년 통일은 독일의 정치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다. 통일 이전 서독의 정치교육의 방향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꾸준히 이해시키고 건전한 민주시민문화,

즉 비판적이며 참여적인 정치문화를 육성하는 데 두었던 반면 통일 후 정치교육의 주요 방향은 분담 및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동서독 주민간의 갈등해소 및 구동독지역에서의 체제 개혁에 관한 이해증진에 역점을 두었다.

나. 동독의 정치교육

서독 정치교육의 목적이 국민에게 사회적·정치적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또 그들의 의무와 권리를 지각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데 있었던 반면, 동독의 정치교육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행해졌던 정치교육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동독의 정치교육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하여, 국민에게 동독의 지배적인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수단으로써 이용되었다.

동독 정치교육의 주요 내용은 국민에게 자본주의와 대결해서 사회주의가 승리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위해 노동자계급이 수행하여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강조하는 동시에, ‘소련의 지도적 역할’과 ‘사회주의적 국가공동체’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독일 민족문제와 관련해서 동독정부가 주권국가임을 강조하는 한편, 전체 독일 민족의 존속과 장래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주도하에 재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독에서의 정치교육이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민간단체에서 실시되었던 것에 반해, 동독의 정치교육은 공산당인 사회주의통일당과 정부의 통제와 조정 하에서만 실시되었다. 정치교육에 대한 계획과 정책은 사회주의통일당 이외에는 다른 기관이나 조직이 담당할 수 없었다.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은 사회주의통일당의 정치지도 이념으로 중앙당의 통일적인 조정과 지휘를 받았던 것이다.

동독정부의 교육지침에 따라 실시된 정치교육의 내용을 주제별로 구

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⁴³⁾

- ① 마르크스-레닌주의
- ② 독일민주공화국의 사회주의 헌법
- ③ 사회주의적 사회질서와 국가질서
- ④ 국가적 지도의 구성과 체계
- ⑤ 독일민주공화국의 대외정책 원칙 및 국제질서
- ⑥ 사회주의헌법 실현시 젊은이의 임무
- ⑦ 사회주의적 경제원칙
- ⑧ 사회주의에 있어서의 시민과 공동체,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2. 통일관련 정치교육의 주요 내용

가. 통일 전 서독의 통일교육

1949년 독일에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동독) 양 국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독일 민족의식이 유지될 수 있고 상황이 호전되면 민족의 통일도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 서독은 정부수립부터 이러한 국민적 의식을 반영하여 기본법의 제정에서 이미 서독은 국민국가로서의 출발이 아니라 독일의 부분 국가로서 출발하였음을 명백히 하였던 것이다.

서독의 이러한 입장은 ‘기본법’을 제정한 배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서독은 국가체계의 기본을 확인하는 ‘헌법(Verfassung)’을 대신하여 통일까지의 잠정적인 기본법(Grundgesetz)을 제정하여, 분단을 독일이 처한 상황에서 ‘임시적인 것(Provisorium)’, 즉 과도기적인 것으로 전망하였다.

기본법의 전문은

43) 김택환, “독일의 민주화와 민주시민교육”, 전득주 외, 『현대민주시민교육론』, (서울: 평민사, 1992), pp.181-189.

「신과 인류 앞에서 국가의 책임을 의식하고 그의 국민적, 국가적 통일을 유지하기 위한 의지에 고무되어…법제정 권력으로 독일 민족은 과도기에 있어서의 국가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라고 명시함으로써 서독이 과도기적 체제임을 밝히면서, 통일에 대한 독일 민족의 열망을 강력하게 표시하였다. 또한 기본법 146조에는 다시 전체 독일 민족이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게 될 때까지만 기본법은 그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독일문제에 대한 서독의 이러한 태도는 초대 총리인 아테나우어(Konrad Adenauer)가 추진한 ‘힘의 정책(Politik der Stärke)’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아테나우어는 독일의 통일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는 길만이 소련으로 하여금 동독을 포기하게 만들고 결국 통일을 가능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⁴⁴⁾ 또한 서독이 전체 독일을 대표한다는 유일대표권을 주장하면서 동독을 국가로서 승인하지 않았으며, 동독의 국제적 승인을 막기 위해 동독을 국가로서 인정하는 국가와는 교류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ktrin)’을 천명하기도 하였다.

분단 직후 서독이 독일의 통일을 주장하면서 강력한 서독을 강조하고 있을 때 동독 역시 ‘한 국가 한 민족(Ein Staat - Eine Nation)’ 정책을 추구하였다. 즉 동독은 과도기적 체제로서 독일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다만 서독이 통일을 서독의 주도로 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에 비해, 동독은 독일의 통일이 동독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렇듯 통일에 관한 상반된 양독 정부의 기본 입장은 교육에 있어서

44) Günter Plub / Werner Röder (hrsg), *Einheit der Nation, Diskussionen und Konzeptionen zur Deutschlandpolitik der großen Parteien seit 1945*, Stuttgart 1978, p.88.

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서독은 정치교육에서 서독정부만이 독일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동독정부는 소련에 의해 세워진 괴뢰정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통일은 서독 주도로 달성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동독정부도 서독정부는 미국 제국주의의 사주를 받는 괴뢰정부라고 비난하면서 통일독일은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밖에 교육과정에서 자신을 옹호하고 상대방을 비판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⁴⁵⁾

- ① 동독은 서독의 체제가 비사회적이며 비인간적이고,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착취당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반하여 서독은 동독의 체제가 억압적이고 일당 독재체제로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하였다.
- ② 동독은 독일이 분단된 이유와 책임이 서독에 있으며, 서독이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책임을 전가시켰다. 서독 역시 그 책임을 동독에 전가시켰다.
- ③ 동독은 서독을 미제국주의의 가장 밀접한 동맹국이며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의 군사기지라고 비방하였으며, 서독은 동독을 소련의 위성국가로서 소련의 군사기지라고 비난하였다.
- ④ 동서독은 서로 상대방 체제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국의 체제가 원칙적으로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 ⑤ 동서독은 서로 자국의 헌법이 가장 이상적이고 민주적인 체제라고 주장했다.
- ⑥ 동서독은 서로 상대방 정권에는 국민과 정치 사이에 간격이 있어 심한 분열상태에 처해 있다고 비난했다.
- ⑦ 동서독은 자국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지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로 상대방 국가가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보았다.
- ⑧ 동서독은 각기 자국만이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5) 김택환, 앞의 책, p.190.

독일문제에 대한 동·서독정부의 대립적 관계는 1960년 이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다. 1963년 사회민주당(SPD: 이후 사민당) 소속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는 서베를린 시장으로서 작은 문제에서부터 동서독이 접근해야 한다는 이른바 ‘작은 발걸음의 정책(Politik der kleinen Schritte)’을 내세우며 조심스러운 대동독 접근을 시도하였다.⁴⁶⁾ 특히 브란트는 1963년 12월 동독정부와 ‘통과협정(Passierschein Abkommen)’을 체결함으로써,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쌓여진 이후 최초로 서베를린 시민이 동베를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브란트의 정책과 때를 같이 하여 서독정부도 동구권과 외교정상화와 통상을 위한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할슈타인 원칙도 점차로 철회되기에 이르렀다.

서독 통일정책의 획기적 변화는 1969년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나타났다. 1969년 서독 수상에 취임한 사민당의 브란트는 취임연설에서 동독을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다음 해에 그는 「분할된 독일에서의 민족의 상황」이라는 연두교서에서 「독일 민족은 하나이나, 독일 땅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1민족 2국가론’을 제기하였다.⁴⁷⁾ 이후 브란트는 꾸준히 대동독 접근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마침내 동·서독 양국 정부는 1972년 서로를 국제법적으로 승인하는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을 체결하였다.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후 서독은 국가통일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으면서 동독을 내부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서독은 구체적 통일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대신, 몇 가지 원칙만을 강조하였다. 그것은 i) 독일에 두 개의 독일국가를 인정하지만 두 국가는 민족 내부의 특수한 관계이며,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민족동질성의 보존해야 한다는 것, ii) 평화질서 속에서 유럽의 공통된 가치에 기초한 공존질

46) Rudolf Hrbik, *Die SPD-Deutschland und Europa, Die Haltung der SPD zum Verhältnis von Deutschland-Politik und West-Integration*, Bonn 1982, p.116.

47) 엄밀하게 말하면 서독은 ‘1민족 2국가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동독이 50년대 말부터 제기한 ‘1민족 2국가론’을 수용한 것이다. 동독이 계속적으로 독일통일을 거부하고 국제정세도 통일에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독정부는 동독과의 교류·협력을 위해서 동독이 요구하는 ‘1민족 2국가론’을 묵시적으로나마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서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 결국 서독은 대동독 정책에서 통일 자체보다는 교류를 통한 동서독 주민간의 민족동질성의 보존, 그리고 동독지역에서 서방적 가치의 실현 등을 강조한 것이다.

동·서독관계가 정상화되자 서독의 정치교육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다. 동서독 관계 정상화 이후 서독의 정치교육에서 통일을 강조한 내용은 감소하였으며, 상대방을 비난하고 자기체제만을 옹호하는 내용도 점차 줄어들었다. 또한 서독은 정치교육에서 동서독 이데올로기적 갈등대립을 완화시키는 방안과 평화적 공존에 요구되는 여러 조건들을 모색하는 한편, 서구민주국가의 일원으로써 그리고 구 주공동체의 지도적 국가로써 서독이 국제적 안정과 서구통합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서독의 통일교육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의 정책변화에 대하여 국민의 자유선택과 비판을 허용하여 모든 의견을 수렴, 조정함으로써 창의성 있는 젊은 세대들을 이해시키려고 했으며, 아울러 정부가 주도하는 대동독정책에 대한 지지와 국민총화, 그리고 국론통일을 이끌어 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1972년 이후 서독 정치교육의 중점은 동독실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이에 대한 비판 능력의 제고였다. 서독은 동·서독간의 관계를 기본조약을 통하여 정립한 후부터는 동독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교육시켰다. 동독이 동구 사회주의국가들 중 소련 다음가는 공업국가임을 알려주는 한편, 사회주의체제국가에서는 동독의 생활수준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려 주고, 서독과 동독과의 생활수준과 경제역량을 비교하였다. 물론 동독사회의 경직성과 폐쇄성도 객관적으로 교육시켰다. 서독은 상호 적대시하고 비방하는 정치교육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의 비교를 통해서 어느 체제가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며, 경제·사회적으로 더 우월한 것인지를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특히 서독정부는 동독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연방차원의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연방내독성 산하에 聯邦全獨연구소(Bundesanstalt für gesamtdeutsche Aufgaben)를 설치하고 동독의 실

상 및 독일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하게 하였다.

동서독 기본조약 이후 동독은 하나의 국가로 인정되었고, 통일교육에서 통일에 대한 직접적인 주제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서독은 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서독은 동독을 국제법상으로 승인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내독간의 특수관계’로 동·서독 관계를 정립하여, 추후 다가올 독일통일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독은 동서독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또한 국제정세가 변화되면 독일국민이 민족자결원칙에 따라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고 교류·협력을 강화하면서 동독의 민주화를 다방면으로 유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

정치교육에서 독일문제와 통일을 강조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70년대 후반이었다. 독일이 평화롭고 자유롭게 재통일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젊은이들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는 목적 아래 1978년 11월 23일 서독 각州的 문화장관들은 15개항의 독일문제 교육지침을 합의·발표하였다. 발표된 교육지침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⁸⁾

첫째, 독일분단은 히틀러의 나치즘 때문에 초래되었다는 점. 히틀러 국가사회주의의 패망과 더불어 연합군의 점령으로 인해 독일의 분단은 시작되었지만, 민족통일을 위한 독일민족의 노력은 정당하다는 점. 나치즘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억압하고 타민족을 강점하는 팽창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서독의 독일정책은 독일민족의 우월성을 토대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 속에서 민족통일을 추진한다는 점.

둘째, 정치교육은 서독의 동방정책과 아울러 독일통일의 핵심적 명제를 기본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 예컨대 서독의 통일방안은 i) 통일을 위한 외부적 환경을 조성하고, ii) 유럽평화가 유지되는 외적 조건하에서 양독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iii) 독일민족 하여금 체제비교를 통하여 통일독일의 체제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것이었다.

48) 박형중, “한국과 서독의 분단·통일 관련 교육의 비교정치학: 대내정치적 배경과 통일론의 차이를 중심으로”, 2000년도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문, p.11.

셋째, 동독인들도 독일민족으로 공통의 역사, 언어, 문화 등을 통해 서독인들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

넷째, 서독 정치체제에서는 자유, 인권, 정의의 개념에 입각한 법치국가적 질서가 보장되고 민주적 정치문화의 기반 위에서 정치사회 세력간의 정치적 갈등이 성공적으로 관리되었던 반면, 동독정치체제에서는 동독의 지배층이 권력을 독점하여 사회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서독의 경제제도는 동독의 계획경제체제와는 달리 고도의 생산력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자유경쟁의 폐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측면의 체제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동독지역에 있는 독일인들의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서독인들의 인도주의적 의무라는 점.

여섯째, 동독의 지배체제, 이데올로기, 사회·경제적 상황 등 동독 독일인의 생활양식을 객관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점.

결국 교육지침의 주요 내용은 독일민족의 개념이었다. 서독 각주의 문화장관들은 독일민족의 개념에 기초해서 독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결의했던 것이다. 문화장관들은 독일민족이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고 결의하였던 것이다.

나. 통일 전 동독의 통일교육

1945년 동독지역이 소련의 점령 하에 들어가자 소련은 독일의 소련 점령지역에서 ‘반파시즘·사회주의 개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민교육을 시작하였다. 이후 1949년 동독공산당인 ‘사회주의통일당’은 독일민주공화국(DDR)을 수립하는 동시에 소련 교육제도의 조직과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였으며, 교육방향과 방법도 역시 소련 교육학의 기본틀을 그대로 본받았다.

동독은 국가가 추구하는 정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사회주의건설에 혁명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산주의 교육에

주력하였다. 사회주의통일당이 주장한 다음과 같은 교육의 목표를 보더라도 동독의 정치교육은 사회주의의 완성을 위한 도구로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의 목표는 독일 인민의 인민주의적, 민주주의적 전통, 특히 노동계급의 혁명적 과업을 밝힐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혁명적인 전통을 완성하는데 있다.」⁴⁹⁾

분단 직후 동독은 독일문제와 관계해서 두 가지 점, 즉 ① 동독이 독일의 유일한 합법적인 국가라는 점과 ② 따라서 동독만이 외국에 대하여 독일을 대표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동독은 독일의 통일은 사회주의 기반위에서, 즉 동독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통일을 강조하는 동독의 태도는 이후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였다. 동독은 50년대 후반부터 독일에는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두 개국이 존재하고, 이들 두 개국의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이른바 ‘1민족 2국가론’을 주장하였다. 더구나 1972년 서독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후 동독은 정치교육에서 ‘독일민족’의 개념조차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동독정부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사회발전단계를 거쳐 동독에는 ‘사회주의적 민족’이, 서독에는 ‘자본주의적 민족’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소위 ‘2민족 2국가론’을 정치교육에서 강조하였다. 즉, 동독은 ‘사회주의적 독일민족’이고 서독은 ‘자본주의적 독일민족’이라고 구별하면서, 이 두 민족은 완전히 이질적인 민족으로서, 독일에는 두 국가와 두 민족이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또한 동독은 사회주의 민족으로서 동독인민의 민족자결을 강조하고,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강한 유대감과 결속을 다짐하는 반면 서독은 하나의 ‘외국’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동독은 정치교육에서 통일을 거부하고 분단 고착화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한편 동독은 독일의 통일을 공식적으로 부정하였지만 정치교육에서 서독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두 개의 독일국가가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49) 이민호, 『독일, 독일민족, 독일사 - 분단독일의 역사의식』, (서울: 느티나무, 1990), p.31.

협력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표명하였다. 그리고 동·서독은 서로 자주적인 관계로 두 국가간에는 국제법적인 관계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독에 의한 독일의 국제법적 승인을 요구하였다. 또한 동독의 승인만이 유럽안보와 긴장완화를 보장하는 핵심문제라고 강조하였다. 즉 동독 정부는 자국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합법적인 국가임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동독은 겉으로는 평화공존과 동서독 교류를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서독이 세계의 선진국가로 발전하는 것을 위협으로 느끼고, 동서독의 교류를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서독에 대한 비판의 강도도 줄이지 않았다. 동독은 서독을 유럽에서 미제국주의의 가장 큰 동맹국이며, 가장 중요한 군사기지라고 비난하면서, 역사적 변증법에 따라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는 몰락할 것이고, 결국 독일에는 사회주의의 우월성만이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동독은 표면적으로 서독과는 민족도 다르다는 논리와 함께 통일을 거부하였지만, 내면적으로 독일이 사회주의 주도, 즉 동독 주도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 통일 후 독일정부의 통일교육

통일 후 독일의 통일교육은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동독이 붕괴되고 구 동독지역이 서독에 편입되는 이른바 ‘흡수통일’ 방식으로 통일됨에 따라 통일교육은 서독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방향을 수정하여 동독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긴급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통일교육의 가장 우선적 대상은 학생 및 청소년이었다. 동독에서는 통일 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계급의식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인간화교육에 전력해 왔었다. 따라서 통일 후 최우선의 과제는 동독교육의 잔재를 청산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아실현 그리고 자유를 존중하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통일 이

후 구 동독지역은 통일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새로운 통일국가의 교육이념 정립, 학제 및 교과과정의 변경이나 교원의 재임용 등 교육체계의 재정립, 교육여건의 개선 등 새로운 변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만 했다. 그것은 곧 기존의 교육체제, 이념, 교육방법 및 내용을 완전히 포기하고 서독의 교육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다.

독일의 통일 이후 구 동독의 학교교육 분야에서 취해진 조치 중의 하나는 교련 과목의 철폐와 기존 ‘공민과’ 및 ‘역사과’ 교과과정의 중지였다. 이것은 결국, 청소년들에게 주입하였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교육의 종단을 의미하였다. 공민과 대신에 들어선 ‘사회과’는 민주주의적인 이해를 북돋우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능력을 배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새 교과목을 위한 교과과정에서는, 교육목표를 학생들의 사회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 시민답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두었다.

주민들에 대한 통일교육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통일과 함께 동서독 주민들간에는 정신적·문화적 갈등이 노출되고, 이질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후유증을 겪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변화된 상황에서 내적 통합(innere Einheit)을 위한 정치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고 교육내용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독일통일로 말미암아 동독의 통일 후속과업 집행과정에서 통일 후유증이 발생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동·서독인들간의 갈등을 의미하는 ‘마음의 장벽’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곧 정치교육이었다. 구동·서독시민이 관용성을 갖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마음의 거리감’을 좁히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교육의 목표이자 주요 내용이었다.

동독지역 주민에 대한 정치교육의 주요 내용 중 다른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경제체제를 이해하는 교육이다. 즉 구 동독지역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동의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야 했다. 따라서 구 동독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치교육은 민주정치의 과정과 기능을 이해시키고 개인과 국가, 사회와의 관계를 비롯해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극우파의 과격정치에 대한 비판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정치교육은 새 질서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구 동독지역 주민들에게 통일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수립되고 법치국가와 자유로운 인간의 실현이 가능하게 되며 경제번영을 가져와 사회안정이 도모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행되었다.

통일 후 독일의 정치교육은 구 동독 주민에게 한정되었던 것은 아니다. 통일비용 조달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통일로 인해 사회안정이 상실될 것으로 우려하는 구 서독 주민을 상대로 통일은 장기적으로 경제부흥은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전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구 서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은 구 동독지역의 경제개발 및 체제통합은 구 서독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3. 통일교육(정치교육)의 담당기관

독일의 통일교육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상호협조와 기타 사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차원에서는 연방내무부 산하의 연방정치교육센터가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 州에는 주정치교육센터(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및 각급 학교가 주 정부의 교육지침에 따르고 있다. 이밖에 각 정당, 시민대학(Volkshochschule), 교회 및 노동조합 등이 통일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주요 정당은 자체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정당재단 또는 ‘정당에 가까운 재단’⁵⁰⁾을 통해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주요재단은 사민당(SPD)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Friedrich Ebert Stiftung), 기민당(CDU)의 콘라트아데 나우어재단(Konrad Adenauer

50) ‘정당에 가까운 재단’이란 이념적으로는 특정 정당에 접근해 있어 정당의 이념을 지지하고 있으나, 조직의 운영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독일 재단을 말한다.

Stiftung), 기사당(CSU)의 한스 자이델 재단(Hans Seidel Stiftung), 자민당(FDP)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riedrich Naumann Stiftung) 그리고 녹색당(Die Grünen)에 가까운 레겐보겐 재단(Stiftungsverband Regenbogen) 등이다. 이들 각 재단은 이념적으로는 특정 정당에 접근해 있으나 사업, 특히 교육사업의 운영목표와 내용은 각 정당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정당에 가까운 정당’들이다 이들 재단들의 사업의 공통적인 성격은 교육사업의 목표를 시민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또한 독일 통일교육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역할도 중요한데, 노동조합의 교육목적은 노동자의 정치와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있다. 특히 통일 후 구동독주민들의 실망감, 정치체제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주도의 통일교육은 독일인의 사회적 일체성을 확보해주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독일 정치문화의 민주화와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밖에 독일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 주목할 곳은 공무원 교육기관인 ‘연방공무원교육원(Bundesakademie für öffentliche Verwaltung)’이다. 연방공무원교육원은 독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양, 전문지식 등을 교육하는 곳이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기관은 정치교육 또는 통일교육을 전담하는 곳은 아니다. 그러나 이 기관에서는 통일 전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통일 후에는 구 동독지역 공직자를 대상으로 통일독일의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 및 소양교육을 광범위하게 교육시키고 있다.

정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중 연방정치교육센터와 聯邦全獨연구소, 연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가. 연방정치교육센터

연방정치교육센터는 독일민족에게 민주주의 기본가치를 심어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관이다. 서독정부는 건국 후 1952년 불행한 과거를 극복하고 참다운 민주국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국민교육 기관 창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신인 '제국향토봉사센터'를 개칭하여 "연방향토봉사센터를 설립하였고, 1963년에는 다시 연방정치교육센터로 개칭하였다. 독일의 본(Bonn)시에 본부를 두고 있고, 연방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 산하인 이 기관은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초당적이며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독립기관으로서 창립 후 지금까지 독일국민의 정치의식 향상과 독일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해 왔다.

연방정치교육센터 설치법 제2조에 의하면, 이 기관은 "정치교육을 통하여 독일국민의 정치문제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정치의식을 확고하게 하며, 정치문제에 대한 자발적 공동참여를 높이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에게 특정한 정치이념과 정치적 행동을 주입,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일깨우고 민주의식을 고양하여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센터 정치교육업무의 보다 세부적인 목표는 이 기관의 「주요업무지침」 제2조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국민에게 정치적 문제의식, 정치적 판단력과 자발적 판단을 환기·강화시키기 위해서 정치과정에 대해 가능한 한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주는 것이다. 둘째, 모든 시민이 국가와 사회 안에서 자신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셋째, 시민들이 기본법에 명시된 사회적 법치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긍정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넷째, 민주적 규율의 의미를 인식시키고 민주주의 절차를 익히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다섯째, 정치적 행동에 대한 자발성과 적극성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지침의 제3조는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①민주주의 국가질서 및 사회발전과 변화에 대한 이해의 촉진, ②의회법치국가적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 특히 정치, 경제,

문화적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의 기능과 가능성의 서술과 설명, ㉔자유·법치민주주의의 방해요소(특히 극우파와 극좌파)의 목적과 활동에 대한 논의, ㉕선입관과 배타적 태도의 극복(특히 소수민족, 그리고 종족에 대한) 및 상호관용에 대한 인식, ㉖독일역사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교육, 특히 독일연방공화국과 나치 시대 및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비교, ㉗국제정치관계 및 다른 국가와 민족의 생활양식과 정치관심에 대한 이해, ㉘유럽통합, 국제협력 및 정치·경제·군사적 평화안정의 필요성과 문제성에 대한 이해의 촉진 등이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이러한 목표 및 업무내용을 가지고 자매기관인 16개(통일 전 11개) “州정치교육센터”와 긴밀한 연락관계를 맺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州정치교육센터는 독일의 16개 주에서 州 차원에서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각 주 내무부 산하기관이지만 연방정치교육센터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센터의 교육대상자들은 포괄적으로 국가의 모든 시민과 사회단체이지만, 특히 교사 등 교육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과 사회·정치단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차적인 대상자이다. 이들에 대한 교육방법은 단순한 주입식교육이 아닌 토론식, 현장교육, 교육연수 등으로 참가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함으로써 민주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센터가 정치교육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정치교육에 대한 각종 간행물을 발간하여 개인, 각급 학교, 도서관, 각 사회단체, 기타 정치교육 실시단체에 무상배포, ②정치교육업무를 주도하는 개인, 사회단체, 정당, 주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 ③정치교육업무에 종사하는 개인 및 매스컴 제작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 ④방송, TV시설을 통한 시민교육, ⑤정치교육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단체에 대한 평가의뢰 및 심의, ⑥정치교육에 대한 국제지원 및 자문 역할 연방정치교육센터의 활동방향은 집행부에 의해 결정되는데, 집행부는 독일연방의회(Bundestag)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소속 의원 3인으로 구성된다. 집행위원은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직무상의 의장은 내무부장관이다. 내무부장관은 집행위원 중 일인을 총무담당 이사로 지명하는데, 사실상 집행부의 결정은 총무담당 이사에 의해 실행된다. 집행부를 뒷받침하는 기구로는 5인으로 구성된 고문단이 있다. 이 고문단은 각계의 전문가들로 내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이밖에 연방정치교육의 활동은 22인의 연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감독관에 의하여 감독되어진다. 감독관 위원들은 소속 정당들의 제청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위촉하는데, 이는 정치교육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원칙에 따르는 것이며, 이와 같은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부에 의한 철저한 감시도 뒤따른다. 집행부는 예산, 활동보고서 등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주요 활동을 감독관에 제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조직은 언론담당국, 간행물담당국, 성인정치교육담당국, 학교정치교육담당국, 통일국 등 5개의 사업국 이외에 총무국 그리고 ‘동서연구부(Ost-West Kolleg)’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 중 통일국은 동서독 통일 이후 발생하는 여러 문제, 특히 독일의 내적통합, 즉 구 동서독 주민의 의식과 생활개선을 위해 주로 구 동독을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다. ‘동서연구부’는 통일 전 ‘東歐연구부’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지만 통일 후 개정된 연방정치교육센터법에 따라 명칭이 바뀌었다. ‘동서연구부’는 통일 전 주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및 공산주의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상을 다루었지만, 통일 후 동유럽국가의 변혁과정과 그 역사적 배경, 그리고 유럽 전체 통합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연방정치교육센터는 통일 전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통일교육을 담당하였다. 다시 말해서 연방정치교육센터는 독일 국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 증진이라는 목적 하에 통일교육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동·서독이 통일됨에 따라 독일의 정치교육은 동독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신연방주, 즉 구 동독 지역에서 정치교육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그리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혁과정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새

로운 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야만 했던 것이다.

따라서 통일과 더불어 연방정치교육센터는 그 기본 방향과 활동내용을 재검토하고 부분적으로 수정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독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를 인식시키는 것이다.

둘째, 동독주민들에게 의회민주주의의 제반제도에 대한 인식과 민주 시민의식을 점차적으로 확산시키며, 서독의 각종 제도가 동독주민들에게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동독주민들에게 시장경제체제의 기능과 운영체계, 의회중심 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 지방자치체제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을 교육시키는 것이다.⁵¹⁾

통일 후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사업확대는 당연히 예산의 증대를 가져왔다. 한 예로 1969년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예산은 1230만 마르크였으나, 1989년 2800만 마르크로 100% 이상 증가하였다. 통일의 해인 1990년에 연방정부는 정치교육 활동을 위해 정치교육센터에 3920만 마르크를 책정하였으며, 1991년에는 5310만 마르크, 1993년도 6170만 마르크를 책정하였다. 또한 통일 전 연방내독성 산하 ‘연방전독연구소’가 연방정치교육센터로 이관됨으로써 조직이 확대되기도 하였다.⁵²⁾

통일 이후 신연방주에 있어서 정치교육의 제도적 형태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 정치교육센터이다. 신연방주의 주 정치교육센터의 설립은 구 동독 지역의 특수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1991년 튀링겐, 작센, 메클렌부르크-포오폼메른, 부란덴부르크와 작센-안할트 주에 설립되었다. 특히 신연방주의 정치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 서독의 자매주가

51) 허영식, “정치교육의 체계와 운영”, 전득주 편, 『독일연방공화국』, (서울:대왕사, 1995), p.377.

52) 허영식,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운영체계,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1997. p.122.

인적·물적으로 지원하였다.

주 정치교육센터는 주마다 상이한 설립조건, 주 정부의 정책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이념의 홍보, 시민의 정치참여 유도, 정치교육을 위한 지원, 정치교육 담당기관간의 협조체제 형성, 다양한 정치교육 자료 발간, 정치교육 담당자의 연수 등을 기본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聯邦全獨연구소

연방전독연구소는 1969년 동서독 관계의 진전에 따라 서독 연방정부가 동독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를 전담시키기 위해 신설한 연방내독부 산하의 연구소였다. 이 연구소의 창설 목적은 일차적으로 동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하는 것이었으며, 이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국민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이 연구소에서는 독일문제에 대한 각종 영상물, 책자,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독일통일 이후 연방내독부가 과제를 완수하고 해체되었기 때문에 산하기관인 이 연구소도 더 이상 존립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1991년 말 연방전독연구소는 폐쇄되었고, 독일문제 및 통일교육은 연방 정치교육센터로 이관되었다.

연방전독연구소의 활동 및 조직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73년 이 연구소는 동독의 실상 및 통일문제와 관련된 약 3백만권 이상의 보고서, 6만권 이상의 서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서독국민에게 무상으로 대출하였다. 또한 이 연구소에서는 동독실상에 관한 영화 및 비디오를 1973년 한 해 약 45,000회 상영하여, 약 2백만명 이상이 관람하게 하였다. 이밖에 이 연구소에서는 사진전시회, 슬라이드 상영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소는 1973년 한해 동독의 실상 및 통일문제에 관해 서독의 많은 도시에서 약 1,500회 이상의 세미나, 강좌, 그룹토의 등을 개설하였다.⁵³⁾

연방전독연구소는 4개 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제1국은 총무국, 제2국은 문서 및 서적담당국, 제3국은 홍보 및 교육담당국, 제4국은 베를린 전담국이었다. 연방전독연구소의 본부는 본(Bonn)이었으며, 베를린에는 독일문제 정보국을 설치하였다.

다. 연방공무원교육원

독일 연방공무원교육원은 독일의 사회체제 각 부문, 즉 행정, 경제, 학계와 연계하여 독일 중앙 및 지방공무원의 재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다. 즉 이 기관은 독일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통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현실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 내에서 상호 협력능력, 업무계획능력과 결정력 그리고 지도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통일 전 연방공무원교육원은 서독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및 소양교육을 담당하였으며, 소양교육의 일부분으로 독일분단 및 통일에 관한 문제도 교육시켰다. 그러나 통일 후 연방공무원교육원은 구 서독 출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물론 구동독 출신 연방 및 지방 공무원들을 전 영역에 걸쳐 재교육시키는 임무를 맡았다.

통합지역 즉 구동독 출신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은 독일의 통일전 구동·서독이 체결한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에서 명시된 사항이다. 통일조약 14조 3절에 따르면 통합지역 출신 공무원에 대해서 재교육을 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통일전 동서독 행정체제는 상이한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인수된 구 동독 출신 공무원들에게 재교육이 필요한 것은 당연했다. 서독의 행정체제는 비록 관료화, 법의 강조로 인한 행정의 경직성 등 일부 문제가 드러나긴 했지만, 민주적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가 공직자에게는 전문성, 합법성 등이 강조된 체제였다. 반면 동독의

53) 구체적 수치는 1973년 서독 정부가 발행한 정부백서를 기초로 하였다.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1973, hrsg. vom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p.507.

행정체제에서는 관료의 정치화는 물론 관료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난 관료의 이른바 ‘정치화된 무능(politisierte Inkompetenz)’⁵⁴⁾ 현상이 크게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연방공무원교육원은 연수원장과 대학교수 및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학술자문단, 사무국과 5개의 학술국으로 조직되어 있다. 학술국은 공직 업무를 시작한 고위공무원 교육, 승진을 위한 교육과정 담당하는 제1과, 기초 및 일반교육과정 담당하는 제2과, 국제관계 교육과정 담당하는 제3과, 인사, 지휘 및 정보과정을 담당하는 제4과 그리고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구 동독 출신 공직자의 재교육을 담당하는 제5과로 나뉜다.

구 동독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내용은 자유법치국가의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독일의 기본법, 행정법, 민법 등 법률에 관한 교육은 물론 컴퓨터 지식, 외국어 및 기타 세계 정치·경제까지 망라한 광범위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강조된 것은 공공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 사고와 법의 적용능력이었다. 이는 구 동독시절 관료에게 법적 사고보다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및 당성이 강조되었던 이유로 인해 그들에게는 법적 지식 및 사고능력이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사회체제에 대한 교육도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연방공무원교육원의 구 동독 출신 공직자 대상 교육내용 중 강조된 것 중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원리, 다원주의 가치관에 대한 교육과 함께 구 동독 공직자와 서독출신 공직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통일 독일의 공직자로서 원만히 근무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다음은 1995년 독일 연방공무원교육원이 구 동독출신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프로그램의 (원전: Bundesakademie für öffentliche Verwaltung(BAKÖV), Jahresprogramm 1995, hrsg. von der BAKÖV

54) Hans-Ulrich Derlien, “Integration der Staatsfunktionäre der DDR in das Berufsbeamtentum: Professionalisierung und Säuberung”, in: Wolfgang Seibel / Arthur Benz / Heinrich Mäding (Hrsg.), *Verwaltungsreform und Verwaltungspolitik im Prozeß der deutschen Einheit*, Baden-Baden, 1993, p.191.

im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일부로 교육과정의 종류,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기간 등을 알 수 있다.

(1) 기초과정: 민주법치국가의 행정업무 기초과정

○ 수강생

구 동독지역 출신으로 연방정부 고위공무원

○ 교육목표

이 과정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독일 기본법의 헌법규정과 민주연방국가, 특히 독일의 경제체제인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 행정업무의 기초를 이해시키는데 있다. 이 과정은 총 5주의 기간으로 참가자들은 강의를 통해 기본 지식을 습득한 후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학습하여야 한다.

○ 교육내용

헌법

- 독일 기본법의 구조원칙, 독일정부조직(입법, 사법, 행정)
- 일반적 기본권
- EU의 임무, 구조

행정

- 행정 및 행정소송법
- 행정법 보호
- 행정의 기능
- 공무원의 권한

민법

- 사회시장경제의 원칙
- 경제학에서의 기본개념
- 경제정책의 개론 및 각론

○ 교육방법

강사-수강생토의, 라운드테이블, 소그룹 토의, 사례연구, 자습 등

(2) 행정법, 행정소송, 법 응용의 방법 과정

○ 수강생

구 동독지역 출신으로 연방정부 고위공무원. 가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우선

수강조건: 前 과정인 “민주법치국가에서의 행정업무 기초”강좌를 이수한 자.

○ 교육목적

수강생들로 하여금 기초과정을 통해 습득한 행정법, 행정소송 등에 관한 지식을 실제상황에 응용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다. 즉 사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지식의 실제 응용을 가능하게 한다.

○ 교육내용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로서

- 효율성
- 필수
- 합법성 및 불법성
- 실행

공공계약

- 의미, 정의
- 공공, 법적 계약의 체결
- 결합과 요구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배상요구와 민법

- 계약상 요구권

- 계약과 비슷한 요구
- 일반법에 의한 요구

○ 교육방법

강사-수강생 토의, 소그룹 토의, 사례연구, 테스트 대비 연습

(3) 계약법, 재산권 과정

○ 수강생

구 동독지역 출신으로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 계약권, 물건법에 대해 기본 지식이 있는 자. 가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 수강조건: 前 과정인 “민주법치국가에서의 행정업무 기초” 과정을 이수한 자.

○ 교육목적

수강생으로 하여금 기초강좌를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민법 지식을 넓히도록 하는데 있다. 특히 사례연구를 통해 실용적인 지식을 넓히도록 하고 있다.

○ 교육내용

계약법

- 법 규정 및 응용능력
- 계약성립
- 대리인 등의 문제

재산권

- 소유권
- 소유권 보호
- 보호권

민사소송의 기초

○ 교육방법

강사-수강생 토의, 소그룹 토의, 사례연구

(4) 유럽공동체 (EU)의 조직과 임무 과정

○ 수강생

구 동독지역 출신으로 연방정부소속 고위공무원, 특히 가임용 기간에 있는 자.

○ 교육목적

수강생으로 하여금

- EU의 법적 근거,
- EU 산하 각 기관의 구조와 임무 등을 교육시킴.

○ 교육방법

강사-수강생 토의

(5) 지도자 과정

○ 수강생

구 동독지역 출신으로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 특히 가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

수강조건: 前 과정인 “민주법치국가에서의 행정업무 기초”과정을 이수한 자.

○ 교육목적

수강생으로 하여금

- 동료와의 협조정신을 높이고,
- 지도자의 자질, 동기, 업무형태 등에 대해서 숙지시키며,

- 동료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며,
- 언어구사, 행동의 전략, 법칙 등에 대해서 숙지시킨다.

○ 교육내용

1. 지도력 부분

- 지도자의 임무
- 지도자의 행동
- 상호 협조체제
- 동료상담

2. 협력(협조)

- 상관과 동료와의 관계
- 협조의 형태
- 효과적인 협조의 기술, 방법

○ 교육방법

강사-수강생 토의, 소그룹 토의, 사례연구, 모의토의

(6) 구 동독 국가보위부(슈타지) 관계 서류 조사를 위해 조직된 전권 위원회 대상 강좌

- 헌법 및 행정법
- 슈타지 서류 관계법

(가) 기초과정: 헌법 및 행정법 개론

○ 수강생

구 동독 슈타지 관계 서류를 조사하기 위한 조직된 전권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 교육목적

이 강좌의 목적은 전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무수행을 위해 이들에게 헌법, 행정법, 행정소송의 개관을 이해시키는데 있다. 수강생들은 우선 강의를 통해 기초지식을 습득하며 기타 제공된 참고서적을 토대로 각자 학습을 해야 한다.

○ 교육내용

□ 국가와 헌법

- 기본법의 조직, 헌법기관
- 행정법
- 행정법, 행정절차
- 공무원조직, 행정조직
- 행정행위
- 행정서류
- 행정절차의 기초
- 행정소송

○ 교육방법

강사-수강생 토의, 소그룹 토의, 자습

(나) 슈타지 서류 관계법

○ 수강생

구 동독 슈타지 관계 서류를 검사하기 위해 조직된 전권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 교육목적

수강생들에게 슈타지 서류법의 제정된 이유에 대하여 간략한 서술이 있는 후에 슈타지 서류법의 내용과 임무에 대해서 설명한다. 강의를 통

해서 얻은 지식은 사례연구를 통해 더욱 명확해 진다.

○ 교육내용

- 슈타지 서류법(StUG)의 제정 배경
- 이 법의 형식
- 일반규정
- 정의
- 슈타지 서류법을 검사하는 전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권한과 의무
- 구 동독 슈타지 관련 혐의자, 제3자, 슈타지 요원 등의 권리
- 슈타지 서류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사용
- 언론을 이용한 슈타지 서류의 정치적, 역사적 연구
- 전권위원회의 권한, 임무, 능력, 특히 안보유지 등

○ 교육방법

강사-수강생 토의, 그룹토의, 사례연구

(7) 외국어 (영어, 불어, 이태리어, 서반어 등 유럽언어) 과정

연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Bonn과 Berlin에서 근무하는 연방공무원, 특히 외국어의 구사가 요구되는 공무원을 상대로 외국어 교육을 시킨다. 선발된 공무원은 각자의 외국어 실력 테스트 후에 이에 상응하는 코스에서 교육을 1주일에 이틀(하루에 2시간)동안 받는다. 외국어 강좌는

- A(기초과정)
- B(중급과정)
- I(고급과정)로 나뉘어져 있다.

○ 교육장소

강좌는 내무부, 경제부, 연구 및 기술부 그리고 독일의회에서 주로 실시된다. 일반강좌 이외에 특별강좌도 개설되어 있는데 이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영어와 불어의 예).

- 일반학습: 2주(전일)
- 토론형식의 학습(3일)

(8) 소양교육

○ 수강생

구 동독지역 출신으로 연방정부 소속 전 공무원.

○ 교육목적

- 통일독일의 공직자로서 필요한 자질과 소양 배양
-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
- 구동독 사회주의 잔재 극복

○ 교육내용

1. 독일의 기본법 정치, 행정체제
2. 국제관계의 흐름
3. 독일의 경제체제 등

○ 교육방법

강사-수강생 토의, 소그룹 토의, 사례연구, 세미나

4. 독일 통일교육의 시사점

독일은 그 분단의 배경에서 시작하여 분단 양국의 정치적·문화적 상황이 한반도 상황과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통일교육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독일의 통일교육이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독의 통일교육은 정치교육, 즉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는 사실이다. 서독의 정치교육은 단순히 정치적 사안에 대한 지식의 전달보다는 개인이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써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정치과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사회의 가치 및 제도를 이해·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독일문제 관련, 서독의 정치교육은 서독국민으로 하여금 독일분단에 관한 현실을 인식하고 독일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한국의 통일교육은 국민들에게 북한·통일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힘썼다기 보다는, 정권안보를 위해 정부가 주장하는 특정 이념 및 정책을 홍보하고, 이에 순응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통일교육도 서독의 정치교육과 같이 민주정치교육의 테두리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공통의 가치를 발견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과거 관 주도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단시간 내에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어 지속성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착오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이며 다원주의적 시각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민족적 개념을 강화하는 교육이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서독의 통일교육은 동독인들도 독일민족으로 공통의 역사, 언어, 문화 등을 통해 서독인들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역사, 언어, 문화 등에 대한 공동의식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던 서독인들의 통일의식 및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이바지하였으며, 이는 통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물론 통일 후 나타난 여러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통일교육의 목표를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의 정치·사회·경제적 공간의 일치를 추구하는 민족국가의 형성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일의 의미,

통일의 당위성 등 통일에 대한 기본인식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실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촉구하고 상호 교류를 통한 민족적 정체성의 유지를 강조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셋째, 동독에 대한 객관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서독의 정치교육은 동독의 정치·경제·사회체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동·서독체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그 동안 북한에 관한 정보는 몇몇 기관이 독점하였고 주요 정보는 극히 일부분만이 공개되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인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다. 이런 까닭에 한국 국민의 대북한 인식은 왜곡되었으며, 이는 상호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국 통일교육에서는 북한의 권력구조, 경제현황, 사회구조 등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다양한 통일교육기관이 있었다는 점이다. 서독의 정치교육은 학교는 물론 정당, 교회, 노동조합 등의 다양한 주체에 의해 실시되었다. 특히 연방정치교육센터·연방전독연구소 등 범국민적이며 초당적인 통일교육기관이 있었다. 이 중 연방정치교육센터는 비록 연방내무부 산하의 기관이지만 초당적이며 범국민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교육은 정부에 의해 획일화된 형태로 실시되었으며, 이 또한 정권유지의 수단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추진된 경험도 있었다.

우리의 경우에도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통일교육을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전국민을 상대로 통일문제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는 초당적이며 범국민적 통일교육기구의 설립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VIII. 통일 이전의 독일의 정치교육

동서독이 통일되기 전의 상황은 남북한의 그것과 유사하다. 제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강대국들의 합의에 따라 분할되고, 이념 대립 하에 분단이 고착화된 점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독일의 통일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들이 많다. 그 점은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독일은 비록 통일이 올 것이라고 확신은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은 통일을 완성하는 기초로서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평화통일에 대한 의식과 의지를 갖추게 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통일교육이 통일을 준비하는 분단 한국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묻는 작업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1. 구 서독의 정치교육

통일을 정치, 경제, 법체제 등 체제와 제도의 통합으로 이해할 때,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교육은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진정한 통일은 의식의 통합이 이루어 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볼 때, 독일 통합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간과될 수 없다. 통일을 준비하는 독일의 교육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통일을 준비하는 동서독의 교육정책을 살피는 것이고, 둘째는 그러한 교육정책이 학교교육에서 어떻게 실천되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국가 체제의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남한과 유사한 구 서독의 통일교육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가. 통일교육정책

서독에서는 “통일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제 2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 분단이 되었고, 분단이 점령국가의 정치적인 의도 아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통일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에서 보다 급한 교육의 과제는 하루 속히 서독에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여 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평화를 정착 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이 전 후 독일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고, 그러한 요청에 부응하는 교육을 서독에서는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는 이름으로 전개하였다. 독일 통일에 관련된 문제는 이러한 정치교육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졌다. 따라서 서독의 통일관련 교육정책을 알기 위해서는 독일의 정치교육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독에서 정치교육의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정착시키고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국민에게 사회적·정치적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그들의 의무와 권리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독의 정치교육의 목표는 국민에게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게 하는 한편, 정치적·사회적 의식을 가지고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참가·비판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있다. 나아가 서독의 정치교육은 국제사회에서 지녀야 할 의식과 태도가 무엇인가를 인식시켜 국가의 안전질서를 유지하며 국제평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⁵⁵⁾

1949년 독일에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 양 국가가 수립되었다. 양 독일 국가는 자신들의 국가만이 정통성을 지니며,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폈다. 서독의 초대 대통령 아데아우어(K. Adenauer)는 서독이 전체 독일을 대표한다는 유일대표권을 주장하

55) 김택환 외, 『국민정치교육의 효과적 추진방향과 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고원대학교, 1987, p.57.

면서 동독을 국가로서 승인하지 않았으며, 동독의 국제적 승인을 막기 위해 동독을 국가로서 인정하는 국가와는 교류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ktrin)’을 천명하기도 하였다.

서독 정부의 이러한 기본 입장은 교육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서독은 정치교육에서 서독 정부만이 독일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동독 정부는 소련에 의해 세워진 괴뢰정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통일은 서독 주도로 달성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입장은 교육과정에서 자신의 체제를 옹호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서독의 통일정책의 획기적 변화는 1969년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나타났다. 1969년 서독 수상에 취임한 사민당의 브란트(W. Brandt)는 취임연설에서 동방정책을 발표하고 다음 해에 「분할된 독일에서의 민족의 상황」이라는 연두교서에서 「독일 민족은 하나이나, 독일 땅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1민족 2국가론’을 제기하였다. 이후 브란트는 꾸준히 대동독 접근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마침내 동·서독 양국 정부는 1972년 서로를 국제법적으로 승인하는 ‘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동·서독관계가 정상화되자 서독의 정치교육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서독 정치교육의 중점은 동독에 대한 비난보다는 동독실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모아졌다. 서독은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특징, 동독의 경제 현황, 생활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알려 주고, 서독의 체제, 생활수준, 경제역량을 동독의 그것과 비교하였다. 물론 동독사회의 경직성과 폐쇄성도 객관적으로 교육시켰다. 서독은 상호 적대시하고 비방하는 정치교육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어느 체제가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며, 경제·사회적으로 더 우월한 것인지를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서독은 정치교육에서 동서독 이데올로기적 갈등대립을 완화시키는 방안과 평화적 공존에 요구되는 여러 조건들을 모색하는 한편, 서구민주국가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유럽공동체의 지도적 국가로서 민주국가의 실현과 유럽의

평화 정착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후 독일에서는 통일교육과 관련해 학교의 과제와 역할을 주제로 하는 정치적이고 교육적인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예컨대 1978년 6월 서독 국회의 내독관계위원회는 정치교육에 있어서의 독일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당시 독일의 대통령 쉘(Walter Schell)은 1978년 8월 17일에 행한 연설에서 모든 학교와 교사들은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학생들에게 자유 속의 독일 통일을 향한 의지를 불러 일으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통일에 대한 열망은 바로 평화와 자유에 대한 열망임을 강조하였다.⁵⁶⁾

뿐만 아니라 1978년 보스만(D. Bossman)은 서독의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독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생각들을 조사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서독의 청소년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독일 분단의 원인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으며, 또한 감정적인 반공 의식과 함께 통일을 위한 제반 활동에의 참여 준비성은 결여된 채, 베를린에 대하여는 강한 감정적 유대감을 갖고 있으며, 동독에 대하여는 서로 상반된 관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⁵⁷⁾ 또한 이보다 먼저 1975년에 실시된 연구에서도 유사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즉, 조사 대상 학생의 80%는 동서독 기본 조약을, 56%는 6월 17일의 동독 의거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체의 3분의 2는 베를린 장벽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80%는 베를린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⁵⁸⁾

이와 같은 학계의 연구 결과와 정계의 지대한 관심을 통하여 체계적인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서독 문교부 회의(KMK)는 1978년 11월 25일 학교에서의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지침을 결정 발표하였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지침은 통일 때까지 서독의 각급 학교를 위한 통일교육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원칙으로 적용되었다.⁵⁹⁾

56) 문용린 외, 『학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8, p.4.

57) 문용린 외, 『학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8, p.44.

58) 문용린 외, 『학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8, p.44.

제 1장에서는 이 지침서가 나오게 된 배경 및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서 서독의 기본법 정신 및 각종 규정이 제시되고 있으며, 제 2장에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학교의 과제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다. 즉, 청소년들은 독일의 분단을 직접 경험한 구세대와 마찬가지로 국토 분단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의식화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학교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이라는 맥락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평화와 자유 속에 자결을 바탕으로 독일 민족의 통일에 대한 의식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고 그 과업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독일 통일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독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평화, 자유, 자결 속의 민족적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책임 의식과 참여 정신을 고취시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본 입장 하에 제 3장에서는 실제 수업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유의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1) 독일문제는 동시에 유럽문제이다. 2) 독일문제의 점진적 해결은 평화지향적인 정책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3) 독일의 항구적인 분단은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다. 4) 민족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정당하다. 5) 역사적 유산에 대한 책임은 독일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관계된다. 6) 국경선 양편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은 공통된 역사, 언어, 문화를 통해 결속되어 있다. 7) 독일의 국민들은 공동 국가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의 공동 국적을 갖고 있다. 8) 동독의 체제와 우리 고유의 사회질서와의 비교는 기본법에 제시되어 있는 가치척도 하에서 비롯된다. 9) 동독에 있는 독일인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는 당연한 권리이며 우리의 인도주의적 요구이다. 10) 인권에 대한 요구는 결코 내정간섭이 아니다. 11) 동독은 서방의 영향력에 폐쇄정책으로 대항하려고 한다. 12) 중요한 사실들은 동독 주민들도 독일 통일에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13) 동독의 독일인들도 동독의 발전에 대해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있다. 14) 독일의 통일은 확고한 우리의 목표이다. 15) 서독이

59) 서독 문교부 회의, “독일문제에 대한 서독 문교부의 교육지침”, 박재운, 백성준, 「독일의 교육통합」(한국교육개발원, 1992), pp. 51-72.

독일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제 4장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 및 그와 관련된 교과목들에 대한 몇 가지 지침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제 5장에서는 교과서 편찬 방향과, 교수 및 학습 참고자료들을 제작함에 있어서의 준수사항을 명기하고 있다. 끝으로 제 6장에서는, 교사 양성 및 연수과정에서도 이 합의 내용들이 적절히 고려될 수 있도록 각 주의 문교부장관들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나. 정치교육

독일문제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통일교육은 서독에서는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는 명칭하에 실시되었다. 서독의 정치교육은 특정 독트린을 주입하는 것보다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적 계도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⁶⁰⁾ 즉,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심어주고, 또 그들의 의무와 권리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 훌륭한 ‘시민’으로 교육시키려는 데 있다.

정치교육내용은 각 부문에 걸쳐 상당히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의 존중과 공익 우선의 정신, 협동정신 등을 강조하는 것과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법률적 지식은 물론 국제정세에 대한 지식들을 전달하는 것이 포함된다.⁶¹⁾ 특히 주목할 만 한 내용은 서독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현안문제에 대한 갈등을 극복하는 데 있어 민주주의의 기능과 가능성을 폭넓게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국가 질서 및 사회발전을 방해하는 적대자(극우파, 극좌파)는 물론 동구 공산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

60) 김경웅(편저), 정치교육론, 서울: 유풍출판사, 1982, p. 168.

61) 윤건영, “남북한 교류 협력시대 통일교육의 방향”, 『92 북한, 통일 연구 논문집(6)』, 통일원, 1992, p. 418.

하고 비판력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국제정치와 유럽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 독일 역사에 대한 선입견을 제거하여 공정하게 비판하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 구 동독의 정치교육

구 동독의 정치교육은 철저하게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매개하고,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서독 식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론과 의사결정과정의 중심 되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서는 먼저 구 동독의 일반 교육의 모습을 살펴보고, 정치교육이 어떤 모습을 지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구 동독의 일반교육

(1) 사회주의 교육의 특징

사회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교육은 먼저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과 집단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것이다. 교육은 동시에 사회주의 사회 건설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의 기능을 지닌다. 이러한 사회주의 교육의 특징을 Lindner는 “사회과정의 계획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⁶²⁾ 즉,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과 조직은 사회주의 사회의 기대에 영향을 받는다.

(2) 교육정책

사회주의 교육의 특징에 맞게 교육정책도 결정된다. 구 동독 교육정

62) W. Lindner u. a., “Ziel, Inhalt, Methoden, Organisationsformen und Mittel der sozialistischen Erziehung”, *Pädagogik*, 9(1971).

책의 기초는 학생들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1970년에 개최된 제 7차 교육학 대회에서 동독 교육정책의 기본 원칙이 네 가지로 제시되었다.⁶³⁾

첫째, 학교와 생활과의 결합이다. 학교를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혁명적 과업 완수의 도구로 인식하고, 학교교육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을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공산당의 정책을 기초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학교의 통일성이다.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게 일반교육을 받을 권리를 강조하고, 학교를 일반교육을 위한 종합기술 학교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셋째, 이념교육이 강조되었다. 사회주의적 가치관과 행동방식 함양, 학교 내의 수업과 학교 외의 각종 교육활동에서 교과 교육과 이념교육의 결합이 강조되었다.

넷째, 사회주의적 인격 형성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가치관과 도덕을 갖추는 것이 주요 교육의 과제로 인식되었다.

(3) 교육과정

구 동독의 일반 교육제도는 10년제 종합기술교학교(AOS)와 2년제 상급고등학교(EOS)로 구성된다. 먼저 10년제 종합기술학교의 교육과정 편제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971/2학년도).

63) Niermann, J., *Wörterbuch der DDR-Pädagogik*, Heidelberg, 1974, 193ff.

<표 VIII-1> 10년제 종합기술학교의 교육과정 편제안

교과목/학년	1		2	3	4	5	6	7	8	9	10
	1학기	2학기									
국어(독일어)	11	10	12	14	14	7	6	5	5	3	3
러시아어						6	5	3	3	3	3
수학	5	5	6	6	6	6	6	6	4	5	4
물리							3	2	2	3	3
천문											1
화학								2	4	2	2
생물						2	2	1	2	2	2
지리						2	2	2	2	1	2
작업	1	1	1	1	2	2	2				
학교정원가꾸기		1	1	1	1						
다기능 수업								4	4	5	5
1) 생산활동입문								1	1	2	2
2) 기술 설계								1	1		
3) 생산활동								2	2	3	3
역사						1	2	2	2	2	2
국가시민교과								1	1	1	2
미술	1	1	1	1	1	1	1	1	1	1	
음악	1	1	1	2	1	1	1	1	1	1	1
스포츠	2	2	2	2	3	3	3	2	2	2	2
주당 수업 시간 수	21	21	24	27	28	30	33	32	33	31	32
바느질					1	1					
제 2 외국어								3	3	3	2/3
주당 수업시간수	21	21	24	27	30	31	33	35	36	34	34/35

다음으로 고등학교 상급반인 상급고등학교(EOS)의 교육과정 편제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III-2> 상급고등학교(EOS)의 교육과정 편제안

교과목/학년	11	12
필수과목		
국어(독일어)	3	3
러시아어	3	3
제 2 외국어	2	3
수학	5	5
물리	3	3
천문	-	1
화학	2	3
생물	2	3
지리	2	-
역사	3	-
국가시민교과	1	2
스포츠	2	2
주당 수업 시간 수	28	28
필수선택과목		
학문적-실천적 활동	4	4
음악 또는 미술	1	1
주당 수업시간수	33	33
자유선택과목	3	3
총 주당 수업시간수	36	36

(4) 교수학적 원칙 및 교육방법

교수학적 원칙은 교육의 조직과 내용, 방법을 이끌어 가는 원칙이 된다. Klingberg은 사회주의 교육의 교수학적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한 학문적 교육과 다면적 사회주의적 교육과의 연합의 원칙, 2) 이론과 실천, 수업과 생산활동과의 연합의 원칙, 3) 수업의 계획성과 체계성의 원칙, 4) 수업활동에 있어서 교과통합적 조직의 원칙, 5) 교사의 인도적 역할과 학생들의 독자성의 원칙. 6) 명료한 수업의 원칙, 7) 집단활동에서 학생들 개개인 고려의 원

칙, 8) 수업에 있어서 직관교육의 원칙, 9) 지속적인 질 관리 원칙이 그것이다.⁶⁴⁾

사회주의 교육은 사회적 요구에 따른 통일적인 교수방법에 기초하여 각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라 교사는 교육에 있어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지배적 권한이 부여된다. 교사의 지도에 따라 학생들은 독자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다른 학생들과 상호협력적인 작업을 한다.

사회주의 교육방법에서 집단주의는 큰 의미를 지닌다. 교육의 목적이 집단주의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교육의 방법 역시 집단적 활동을 강조한다. 집단주의 교육의 장점을 사회주의 교육학자들은 첫째, 학생들이 이론교육이나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가치관과 행동방식을 획득하는데 서로 돕고 지원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작은 단위의 그룹에서 구성원들의 소질과 능력이 상호 이상적으로 계발될 수 있다는 점, 셋째, 사회주의적인 행동양식이 끊임없이 연습되고 견고해 질 수 있다는 점, 넷째, 구성원들이 상호간에 개인적이고 공동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Mannschatz는 집단주의 교육에서 교사가 고려해야 할 점을 1) 학급 내 소 그룹의 학생들이 집단주의 정신을 갖도록 하고, 2) 과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3) 집단적 문제 해결과정에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4) 집단 구성원인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5) 결과적으로 모든 학생들의 다면적인 계발을 돕도록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⁶⁵⁾

(5) 사회주의 교사상

구 동독의 교사교육의 모범과 이상은 사회주의 교사로서의 인격과 성품을 갖춘 인물이다. 모든 교사는 사회주의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이

64) L. Klingberg u.a., *Abriß der Allgemeinen Didaktik*, Berlin, 1966.

65) E. Mannschatz, *Entwurf zu einer Methodik der Kollektiverziehung*, Berlin, 1970.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동독 공산당(SED)은 이러한 교사상을 사회개혁의 기초로 보았다. 사회주의 교사상은 몇 가지 원칙 아래 자신이 교육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1) 공산당의 정책과 교육을 결합시키도록 하는 것, 2) 공산주의 사회건설과 교육을 연결시키는 것, 3) 사회적으로 유용한 작업활동과 수업을 연결시키는 것, 4) 이론과 실천 그리고 지식과 생활을 연결시키는 것, 5) 교육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독자성과 자발성을 고취시키는 것, 6) 집단성의 강조, 7) 통일적이고 상호작용적인 활동으로서의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기 위하여 교사들에게는 학문성과 적극성과 창의성이 요구되었다. 사회주의 교사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모든 교사는 이상적인 교사로 성장하기 위해 자신들의 활동을 끊임없이 개혁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⁶⁶⁾

(6) 종합기술교육(polytechnische Bildung)

종합기술교육은 구 동독 교육에서 이론과 실천을 결합하려는 주요 교육원칙이다. <수업과 생산활동의 결합에 대한 마르크스-엔겔스의 사상과 종합기술교육>이란 제목의 Krapp의 연구에서 종합기술교육은 본래 “기술 기초교육”이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동독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이 개념은 여러 성격을 지닌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1952년에 개최된 제 3차 공산당 대회에서 종합기술교육의 도입이 확정되었다. 모든 성장세대들은 사회의 요구에 적절한 자질이 요청되는데, 특히 산업 생산과제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이를 매개하는 것이 종합기술교육의 주요 과제라고 천명하고 있다. 동독에 종합기술교육의 기초를 놓은 Dorst에 의하면 종합기술교육은 여기서 특수한 기술교육이 아니라, 일반교육을 의미한다. 일반교육으로서의 종합기술교육은 첫째, 종합기술적 관점을 의미한다. 역사, 지리, 물리, 생물, 화학 등 모든 교과

66) J. Niermann, *Wörterbuch der DDR-Pädagogik*, Heidelberg, 1974, p. 131.

목에서 국가경제, 주요생산분야,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노동조직, 동독의 산업인력 분포 등에 대한 이해를 매개하는 것이다. 둘째, 주요 경제분야의 생산활동의 기본 원칙들에 대해 이해시키는 것이다. 즉, 산업과 농업 분야에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법칙들을 기술적으로 응용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생산과정과 생산시설에 대한 이해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척도, 검사기계, 표준 계량, 기술 설계 등에 대한 이해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망치, 톱, 칼, 자, 바늘 등 모든 생산활동에 필요한 도구들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⁶⁷⁾

일반교육으로서 종합기술교육은 1958/59학년도부터 모든 일반학교에 필수교과목으로 채택된다. 1-4학년까지는 일반기술교육이, 5-6학년에는 생산과 관련된 기술교육이, 8-9학년에는 기술 설계가, 9-12학년에는 농업과 공업 분야에서의 사회주의적 생산이 주요 교육내용으로 가르쳐졌다. 9학년부터는 매년 14일 동안의 실습도 행해졌다.

그러나 종합기술교육은 1953년 도입된 이래 계속되는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 특별히 소련의 영향에 따라 1964/65학년도부터는 일반교육적인 기능보다는 실천적인 기능이 강화되어 직업준비교육으로의 성격이 강하게 부각되었다.

나. 정치-이념교육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동독의 일반교육 자체에서 우리는 상당히 정치적이고 이념지향적인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교육과 관련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별도의 정치-이념 교육이 강하게 학교교육을 각인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여기서는 정치-이념 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67) W. Dorst, *Die polytechnische Bild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Schule*, 1953.

(1) 이데올로기 교육

동독의 이데올로기 교육은 “국가시민” 교과 등 교육 전반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는 이데올로기 교육의 기본 구조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내용적 측면 : 이데올로기 교육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을 전달하는 것이 중심적인 과제가 된다.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교과 등 모든 분야에서 이데올로기 교육내용이 다루어진다.

(2) 인격적 측면 : 여기서는 학생들의 공산주의 인격을 도야하는 것이 중점 과제가 된다. 사상, 가치, 규범, 규칙, 도덕적 행동 등 학생들의 사고와 행동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3) 집단적 측면 : 이데올로기 교육에서는 집단적 가치와 집단정신, 집단생활을 강조하고 개인주의적 사고를 경계대상으로 여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교육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동독에서는 예술, 신체단련, 스포츠, 사회주의 도덕, 훈련, 책임의식 등이 교육에서 강조되었다.

(2) 국가시민교과

국가시민교과는 정치-이념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이다. 국가시민교과는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그리고 직업학교에서 교과목으로 책정되었다. 국가시민교과의 중점은 학생들로 하여금 확고하고도 실천가능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지식을 매개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질서야말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의 유일한 척도임을 깨우쳐야 한다.

7학년 때에는 동독의 역사와 사회적 질서를 배우는 것이 중점 내용이고, 8학년 때에는 동독의 헌법이, 9학년 때에는 사회주의에로의 사회발전의 법칙과 계급투쟁과정을 배우고, 10학년 때에는 노동자 계급과 노동자 당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어 주요 문제들을 다루고, 11-12학년 때에는 변증법적 유물사상의 기초를 배우게 된다.

(3) 군사교육

군사교육 역시 정치-이념 교육의 장으로서 강조되었다. 동독의 모든 국가 구성원은 국가 방위를 위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했다. 이 점은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해당되었다. 군사교육은 그러한 준비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군사교육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교과에서 실시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필요시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예비군과의 협력 아래 이루어졌다.

군사교육의 과제는 1) 국토방위 동기 부여, 2) 목숨을 걸고 사회주의 국가를 지키겠다는 정신 함양, 3) 군사정치적, 사회과학적, 군사적 지식과 능력 매개, 4) 용기, 순종, 희생정신 등 성격 형성과, 힘, 인내 등 신체단련 등이다.

군사교육은 이미 학령전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 군인을 만나고, 군사 장난감을 갖고 놀면서 어린이들은 일찍부터 국토방위와 평화의 중요성을 깨우쳐야 했다.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에서는 군대와 군인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도록 감정적인 차원의 교육이 강조되었다. 중급과 상급단계의 학교교육에서는 특별히 역사와 “국가시민” 교과에서 군사교육과 관련된 수많은 가능성이 제공되었다. 여기서는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 체계적이고 기초적인 군사지식이 전달되었다.

(4) 자유독일청년연맹(FDJ)

자유독일청년연맹은 북한의 사로청과 유사한 조직이다. 14세부터 26세까지의 청소년은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대중조직으로 동독 청소년 조직을 대표한다. 자유독일청년연맹은 제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반제국주의-민주주의 대중조직으로 구성되었고, 그 기능상 공산당인 SED의 결정에 따라 움직였다. 자유독일청년연맹의 목적은 1) 청소년을 사회주의와 평화수호를 위한 투쟁가로 교육시키는 것, 2) 청

소년들을 동독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참여시키는 것, 3) 청소년 군대조직의 건설, 4)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 확산, 5) 다면적인 여가 선용 조직과 학습활동 장려 등이다.

자유독일청년연맹에 가입하는 청소년들이 수행하여야 할 의무는 1) 자유독일청년연맹의 결정을 실천에 옮기는 것, 2) 학습과 노동과 연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것, 3) 군사지식 획득과 노동자-농민 국가 방위태세 확립, 4)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국제적 결속력 강화, 5) 공동체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적 규칙을 엄수하는 것, 6) 조직활동에 참여하고, 조직을 홍보하고, 총회에 참석하는 것 등이다.

자유독일청년연맹의 조직은 중앙집권적이다. 각 지방에는 지회를 두고 있고, 지회에는 기업체, 행정, 학교, 대학, 공장 등에 구성되어 있는 그룹이 속하게 된다. 자유독일청년연맹의 최고 상급기관은 국회이다.

자유독일청년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독자적인 복장과 휘장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독자적인 일간지를 발행하고, 각종 잡지를 발행하였다.

(5) 에른스트 텔만(Ernst Thälmann) 연맹

자유독일청년연맹이 청소년 조직이라면 Ernst Thälmann 연맹은 유소년들을 위한 학생 조직이다. 북한의 소년단과 유사한 조직이다. Ernst Thälmann 연맹은 자유독일청년연맹의 지도를 받으며 6세에서 14세의 어린이들이 가입대상이다. Ernst Thälmann 연맹은 1948년 자유독일청년연맹의 연합단체로 결성되었다.

Ernst Thälmann 연맹의 목적은 모든 어린이들을 평화와 사회주의 이념 아래 철저한 동독 국가 시민 의식을 갖춘 인간으로 키우는 데 있다. Ernst Thälmann 연맹 주요 과제는 1) 학교가 사회주의적 기관으로 성장하는데 지원하는 것, 2)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3) 흥미있고, 교육적이고, 어린이에 맞는 활동의 개발 등이다.

자유독일청년연맹과 마찬가지로 Ernst Thälmann 연맹에 가입한 학생들은 독자적인 복장과 여러 상징적인 휘장들을 하고 다닌다.

Ernst Thälmann 연맹 조직은 학교 내의 전체 조직과 학급 내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독일청년연맹이 지원하고 신문과 잡지도 발행한다.

3. 구 동·서독 정치교육과정 비교

가. 구 서독 정치교육과정

독일의 정치교육은 사회정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정치교육본부, 그리고 학교 정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 교육부 두 곳에서 총괄하고 있다. 각 주 정부는 학교 정치교육의 방향, 그리고 정치교육에 필요한 교과서의 선택 등과 같은 사항을 결정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정치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 정부의 정치교육 지침서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서독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를 사례로 통일 전 정치교육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정치교육 기본계획안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교육부에서 1987년 공포한 “정치교육 지침”(Richtlinien für den Politikunterricht)에는 정치교육의 기본 목표들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⁶⁸⁾:

1. 사회, 정치, 경제 질서 속에서 나름대로의 방향을 잡고 그 질서의 강제와 지배관계 그리고 그 질서 자체를 아무런 검증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의미, 목적, 필연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68)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교육부, “독일 정치교육의 위상과 목표”, 박재운, 백성준, 『독일의 교육통합』, 한국교육개발원, 1992, p. 97f.

그것들의 토대가 되고 있는 이해, 규범, 가치 등을 비판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위한 자세

2. 사회, 정치, 경제적 구조, 지배관계, 결정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인식하고 이용하며 확대시킬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위한 자세

3. 사회, 정치, 경제에서 의사소통의 조건을 분석하고 동기, 이해, 권력흐름 등에 근거해서 검증하며, 참여의 기회를 늘려가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

4. 정치적 결단의 상황에서 생각하고 정당을 선택하며, 때에 따라서는 반대의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민주주의적 규정에 따라 결정을 실현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

5. 자기 자신의 권리를 알고, 가능하면 자기의 이해를 연대적으로 타협할 자세를 갖춘 채 주장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사회의 이해와 손해를 본 사람의 이해도 고려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선권을 주기도 할 줄 아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

6. 갈등의 사회적 기능을 인식하는 능력과, 적합한 사상을 선택함으로써 갈등의 해결에 참여하려는 자세

7.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관을 발전시키고, 사회적 책임 속에서 이것을 인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

8. 개인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솔선수범하고, 피해자가 솔선수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자세

9. 다양한 사회집단에 소속되어 함께 일하면서 어려움을 견뎌내고 자기발전의 기회를 활용하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

10. 다른 사회의 권리와 자주성을 인정하고 올바른 평화적 질서와 피해받은 민족의 이해를 옹호할 수 있는(비록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속한 사회가 부담을 짊어지게 되더라도)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

11. 자기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서 미래의 생활조건을 보장하는데 대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

12. 노동이 어느 정도까지 개인과 사회의 생존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자기 실현과 정치적 참여를 위한 토대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적인 노동의 조건을 만들어 가는데 진력할 수 있는 자세

(2) 정치교육 교과서 주요 내용

서독에서는 정치교육을 다루는 교과명이 “정치”, “사회” 등 각 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사회” 교과에서 정치교육을 담당하였다.⁶⁹⁾

<표 VIII-3> 전기중등학교(7-10학년) 사회 교과

단원 주제	주요 교육 내용
사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정의 ○ 사회화의 기능
커뮤니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케이션 모델 ○ 대중매체 ○ 광고 및 선전 ○ 정보의 구조적 변혁 ○ 대중매체와 민주주의 ○ 대중매체의 발전
사회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와 경제의 상호 의존관계 ○ 사회와 정치의 상호 의존관계 ○ 사회적 계층 ○ 사회 이동 ○ 사회적 변화 이론

69)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Zur Situation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r Schule*, Bonn, 1982, pp. 196-198, 270-274.

단원 주제	주요 교육 내용
사회적 질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정치의 개념 ○ 사회와 국가의 관계 ○ 계층사회로서의 사회 ○ 정치체제 ○ 정당 ○ 이해단체
지배권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정의 ○ 지배권력의 탄생 ○ 지배권력의 형태
권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정의 ○ 사회적 권력들의 형태와 관계 ○ 권위 ○ 사회적 지배그룹의 구조 ○ 권위적인 지배권력구조의 해체 ○ 이데올로기와 지배권력
사회적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법에 따른 기회균등의 원칙 ○ 범죄자의 재사회화의 방해요인으로서의 편견 ○ 교육사회의 거울로서의 기회균등 ○ 사회적 불평등의 기능과 결과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사회에서의 재산형태 ○ 권력구조로서의 기업구조 ○ 부의 집중과정 ○ 시장질서/시장권력 ○ 독일의 재산분배 구조 ○ 정의로운 소득분배의 척도와 목적 ○ 소득분배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에 대한 일반적 정보 ○ 경제의 결정영역으로서의 기계와 기업 ○ 소비선택: 욕구충족을 지향하는 행위의 공통성 ○ 소비의 사회적 기능 ○ 소비자의 역할 ○ 소비행태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요소 ○ 경제순환에서의 돈 ○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로서의 시장 ○ 비시장경제적 질서체계로서의 중앙행정경제

단원 주제	주요 교육 내용
노동과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의 의미 ○ 직업선택의 결정요인 ○ 상이한 작업상황에 대한 비교 분석 ○ 직업구조의 발전경향과 직장인의 사회적인 상황 ○ 일자리 보장의 법적 조치 ○ 여가의 개념 정의 ○ 여가활동
내적 산업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의 내적 산업구조의 문제점들 ○ 인구증가와 산업구조적 문제 ○ 개발도상국 지원에서 최상의 문제로서의 내적 산업구조 건설
환경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과피 문제 ○ 산업의 발달과 인구 증가 ○ 환경보호의 경제적 문제 ○ 정치적 문제
국제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정치 이론 ○ 사회적 편견 ○ 세계관과 정치권력의 대립 ○ 국제 질서 ○ 유럽 연합

나. 구 동독 정치교육과정

구 동독의 정치교육은 “국가시민” 교과에서 집중적으로 행해졌다. 따라서 이 교과의 교육과정 기본계획안과 교과서를 분석하면 구 동독의 정치교육의 기본 특징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 “국가시민”교과 교육과정 기본계획안⁷⁰⁾

“국가시민”교과는 보통교육과정의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정규과목으

70) Ministeriat der DDR, Ministerium für Volksbildung, *Lehrplan der zehnklassigen allgemeinbildenden polytechnischen Oberschule - Staatsbürgerkunde, Volk und Wissen*, 1988.

로 가르쳐졌고, 상급고등학교인 11-12학년과 직업학교의 직업교육과정에서도 필수교과로 강조되었다.

국가시민교과의 목적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정책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시민교과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을 전달하여 사회주의 혁명 과업을 완성해 가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국가시민 교과는 정치이념교육으로서 학생들을 사회주의 시민으로 키우고,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공산주의 이상,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을 일깨워 사회주의 모국과 공산당에 충성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국가시민교과 수업에서 매개되는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철학적 지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주의가 인류 역사의 진보과정의 법칙적 귀결이요,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휘 아래 노동자 계급의 투쟁의 결과요, 반인류적인 제국주의 체제의 유일한 대안임을 알게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학생들은 전체 국가시민 교과 수업에서 사회주의 세계가 그 힘과 권력과 권위에서 인간의 사회적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갖고 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의식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사회주의가 역사적 주도권을 쥐고 있고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승리를 거둘 것이며, 사회주의를 지키고 강화하는 것이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학생들은 위의 사실들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동독과 소련 등 동구권 국가들의 역사적 위치와 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더불어 노동자 계급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역할,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본질, 선진 사회주의 사회의 역사적 정당성과 제국주의에 대한 우월성 등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국주의와 투쟁하여 승리하고 선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학생들의 고유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

이를 위해 요청되는 것은 세계관 교육, 정치교육, 도덕교육이다. 학생들은 먼저 사회주의의 역사적 필연성과 우월성에 대한 신념을 갖고, 마

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 아래 사회주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학생들은 사회주의적 가치와 사회주의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주의를 지키고 사회주의 조국을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국가시민 교과 수업에서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기초 능력이 강조된다.

-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발전 모습을 노동자 계급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유물론적 변증법적으로 사회발전 현상을 볼 수 있는 능력
- 마르크스-레닌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세계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지식을 획득함은 물론 독자적인 안목을 형성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적대계급의 정책과 이념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쟁할 수 있는 능력
- 마르크스-레닌주의 관련 문헌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관련 문서, 그리고 사회주의적 대중매체 수단을 이용하여 지식을 획득하고, 현재의 정치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자신이 고유한 경험을 사회적 삶의 관련성 속에서 평가하고, 사회적-정치적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위와 같은 “국가시민” 교과의 목적에서 각 학년별로 강조될 이념적이고-이론적인 주요 교육과정안이 산출된다. 먼저 7학년과 8학년에서는 사회주의의 산물인 동독 국가가 공산당의 지도 아래 노동자 계급이 이루어 낸 결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투쟁의 산출물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의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비교적 체계화된 사실적 사회주의로서의 동독 국가에 대한 상을 각인시키는 것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7학년 수업에서는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사료를 기초로 동독 국가의 형성과 성장과정, 사회주의 정치와 경제의 탄생과 전개과정이 설명된다. 이러한 기초지식은 8학년에서의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본질을 깊이있게 이해하는데,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한 지식을 확대, 심화하여 이해하는데 기여한다. 즉, 7,8학년에서는 사회주의 사회의 본질적인 구조와 발전단계를 이해하는 데 중점이 놓여 있다. 이와 함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시민” 교과와 기초가 다져지게 된다.

동독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으로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이 어떻게 노동자 계급을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사회주의를 위해 성공적으로 투쟁하도록 이끌었고 이끌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수업은 이렇게 사회 발전이 국민 대중의 행동의 결과임을 인식하도록 이끈다. 그리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 아래 노동자 계급이 현대 사회 발전의 혁명적 원동력이고, 그러한 혁명적 투쟁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사회주의자들의 과제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7,8학년의 수업은 사회주의가 제국주의보다 우월하다는 신념을 갖도록 하고, 동독 사회주의 국가의 시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것을 과제로 갖고 있다.

9,10학년의 수업의 주안점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을 기초로 하여, 사회 발전과정에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가 충돌할 것이고, 결국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투쟁을 통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승리하는 것이 역사적인 필연성이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에 놓여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수업에서 획득하는 지식들을 이론적으로 심화하고 풍부하게 하는 것이 과제가 된다.

학생들은 노동자 계급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은 구체적이고-역사적인 투쟁조건들을 근본적으로 분석하고, 투쟁을 위한 과학적인 전략과 방법을 연구하고, 노동자 계급이 자신들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능력을 제공하고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기본 지식은 특히 10학년에서는 동독이 선진 사회주의 국가가 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사회주의 혁명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사회적 필연성이요 중요

한 과제임을 인식하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9,10학년에서 학생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배울 것이며, 노동자 계급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역할, 혁명적인 세계발전과정에서 사회주의의 역사적인 주도권, 선진 사회주의 사회의 역사적인 위치 등을 파악하게 된다.

(2) “국가시민”교과서 주요 내용

위와 같은 교육과정안에 기초하여 구성되어 있는 “국가시민” 교과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III-4> 7학년 “국가시민” 교과

단원 주제	주요 교육 내용
우리의 시대	
파시즘으로부터의 해방과 DDR(독일인민민주 공화국)의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시즘으로부터 독일 민족의 해방 ○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 공산주의자들 ○ 독일노동자계급 정당의 탄생 과정 ○ 서독지역에서 제국주의 권력이 재탄생된 배경 ○ 독일인민민주공화국의 탄생 배경 ○ 요약
사회주의 조국 강화를 위한 국민들의 위대한 업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 경제의 높은 위상 - 노동자들의 창의적 능력 ○ 동독의 사회주의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과 자원 생산을 위한 높은 능력 - 협동농장 농부 계급에 다다른 길 - 오늘날의 사회주의 마을 ○ 동독 노동자의 높은 사회적, 문화적 성취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성취능력 - 자명한 것인가? - 위대한 유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확장 - 무엇이 핵심 사항인가? ○ 요약

단원 주제	주요 교육 내용
노동자 계급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선도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사회의 주축으로서의 노동자 계급 ○ 공산당(SED) - 공동체의 자율적인 투쟁 조직 ○ 삶과의 밀접한 관련성 ○ 노동자 계급과 연합단체 ○ 너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돌아보고 행동하라!(요약)

<표 VIII-5> 8학년 “국가시민” 교과

단원 주제	주요 교육 내용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 -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국가는 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권력수단인가? -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실현 방법 - 동독의 헌법 ○ 동독에서 사회주의 국가권력의 태동과 작동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의 국민대표기관 조망 - 인민의회 - 국가 최고 권력 기관 - 국회의 양대 주요 기관 - 지방의 국민대표기관 - 인민의회 선거와 활동 ○ 민주주의적인 중앙집권주의
동독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권 ○ 노동권과 사회적으로 유용한 행위에 대한 의무 ○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권리 ○ 평화와 사회주의 조국을 지키기 위한 권리와 명예로운 의무 ○ 국가적이고 사회적 기관을 통한 시민 권리의 보호
사회주의 동독과 제국주의 서독 - 대립적인 사회 질서를 갖고 있는 두 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과 서독의 대립적인 권력관계와 재산관계 ○ 서독 제국주의의 공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의 건설 - 독일 국민 역사의 전환점 - 독점이 지배할 때 국민은 착취되고 억눌림을 당한다 - 동독에 대한 서독의 공격적 정책 ○ 사회주의 강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동독의 정책

<표 VIII-6> 9학년 “국가시민” 교과

단원 주제	주요 교육 내용
<p>사회 발전의 법칙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의 수레바퀴는 무엇을 통해 움직이는가? ○ 계급투쟁 - 사회발전의 주요 원동력 ○ 사회의 생산방법 - 생산자와 생산관계의 일치 ○ 혁명 - 역사의 원동력
<p>자본주의 해체의 역사적 당위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주의적 착취의 본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또는 고용주와 고용인 - 이익은 어떻게 산출되는가? - 잉여가치 법칙 -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법칙 - 자본주의자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이익을 산출하는가? ○ 제국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주의적 독점 - 제국주의의 결정적 요소 - 국가 독점적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점은? - 제국주의 - 국가내부적 반응 - 제국주의를 공격적이고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가? - 독점지배 - 자본주의 부패와 해악의 근원 - 제국주의 - 미래가 없는 사회
<p>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사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혁명의 내용 ○ 공산주의 - 노동자 계급 투쟁의 목표 ○ 노동자 계급 -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의 혁명 선도적인 계급 ○ 혁명적 당 없이는 노동자 계급의 승리도 없다 ○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노동자 계급의 기본적 과제들

<표 VIII-7> 10학년 “국가시민” 교과

단원 주제	주요 교육 내용
우리 시대의 특성과 평화를 위한 투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시대의 주요 특징 ○ 국제적인 권력관계 - 사회주의의 역사적 주도권의 표현 ○ 평화정착을 위한 사회주의의 주도권
공산당의 전략적 과제 - 동독의 선진 사회주의 사회로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론적, 전략적 명료성 - 성공적 발전의 기초 ○ 선진 사회주의 사회 건설 - 사회적 변혁의 역사적 과정 ○ 선진 사회주의 사회 건설 - 사회주의적 우월성이 발전하는 과정
동독 경제발전의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법칙과 선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주요 과제 ○ 사회주의와 과학-기술 혁명 - 공산당 경제정책의 기본원칙 ○ 사회주의 경제 계획 ○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
동독의 사회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의 사회구조 ○ 선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사회주의 국가의 역할
마르크스-레닌주의 - 우리가 살아가고 행동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르크스-레닌주의 - 노동자 혁명 계급의 과학적 세계관 ○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기본적 지식 - 정당의 정책 - 혁명적 행위 ○ 젊은 혁명가들의 투쟁과제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인식

다. 정치교육의 특징 비교

구 서독의 정치교육을 살펴볼 때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첫째, 구 서독의 정치교육은 그 근본 목적이 독일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정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치교육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중점을 이루었고, 독일의 통일과 관련된 교육은 동서독의 비교 등 극히 일부분으로 다루어졌다. 즉, 통일교육은 통일 전 서독의 교육에서 그다지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다. 둘째, 서독의 통일교육은 분단 직후에는 상대방의 체제를 비난하거나 자기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

어졌으나, 1970년대 이후 동방정책과 함께 냉전적 구도에서 탈피하여 평화와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통일관련 교육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학생들에게 매개하는 교육이 강조되는 변화를 맞게 된다. 셋째, 서독의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은 통일이 올 것을 예측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교육은 아니었다. 그러나 서독은 학생들의 통일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였다. 통일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통일 이후의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민주적 소양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민주시민교육에 충실하였다.

반면, 구 동독의 경우에는 통일교육의 모습이 서독과는 다르게 전개되었다. 구 동독에서는 분단 이후 구 동독이 붕괴될 때까지 일관되게 체제를 옹호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제국주의로 몰아 세워 후진성과 문제점을 강조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세뇌시키는 교육이 행해졌다. 이러한 교육은 민주적인 방식의 민주시민교육과는 거리가 먼 교육이었다. 구 동독의 정치-이념 교육에서도 통일교육은 그 자치하는 비중이 약하다. 서독의 교육에서보다는 동서독 관련 교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그 내용상에 있어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

4. 시사점

통일 전 동서독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을 살펴볼 때, 몇 가지 점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첫째,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동서독을 막론하고 국가의 기본 정책이 교육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서독에서는 전 후 민주주의 사회 건설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정치교육이라는 이름 아래서 행하였다. 동독에서도 선진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매개하는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다.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서독의 정책변화에 따른 정치교육의 변화이다. 1970년대 이후 추진된 동방정책이 정치교육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것이다. 최근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결실을 가져왔고, 통일교육에서도 일대 전환을 가져오고 있는 점은 서독의 1970년대 이후 정치교육의 변화와 양상이 유사하다. 둘째, 동방정책 이후 서독의 정치교육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동독의 체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서독의 체제와 비교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반면 동독에서는 정책의 변화 없이 이전의 정치-이념교육을 그대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볼 때 주목할 점은, 서독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체제에 대해 더욱 신뢰하고 그 체제를 지켜야 하겠다는 생각이 강화되었고, 반면, 동독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체제에 대해 점차 회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체제를 동경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상대방에 대해 비난 없이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결코 체제유지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통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상대방의 체제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통일교육을 변화시키는 것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동서독의 사례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동서독의 정치교육이 주는 시사점은 기존의 통일교육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공존과 공영이라는 차원에서 교육의 틀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 옳은지 진지하게 토론하고 국론을 모으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점검해보고,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전달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 전 남한 학생들의 통일 준비 교육으로서 우리가 독일에

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민주시민교육이다. ‘정치교육’이라는 이름 아래서 행해진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가르쳐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토대가 되었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사고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문제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해나가는 민주주의적인 가치관은 통일 이후 독일 사회가 갖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민주적인 독일 사회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해방 이후 우리 나라에서도 중요한 교육이념으로 수용되었으나, 아직 교육현장에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민주시민교육을 점검하고 우리 교육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넷째, 동서독의 정치교육이 주는 또 하나의 시사점은 평화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서독은 제 1,2차 세계대전을 겪은 나라로서, 평화의 이념이 민주주의만큼 중요한 정치적 이념으로 수용되었다. 정치교육에서도 평화교육은 매우 강조되었다.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당면하게되는 갈등, 공격성 등 비평화적 요소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정치 교육의 내용에서 언제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었다. 남북한은 서로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어 상호 적대감과 대결의식이 동서독의 경우보다 훨씬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평화교육의 중요성이 훨씬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간의 갈등, 반목, 적대감을 해소하고, 남북한이 공존 공영 속에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기반 조건으로서 평화교육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점은 통일의 과정 뿐 아니라, 통일 이후를 내다볼 때에도 그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 구 동독 학생들의 부적응과 갈등 양상이 특별히 통일 초기에 심각하였던 점은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통일 초기 사회 불안과 불확실한 미래, 심리적 갈등이 폭력과 부적응으로 표출되었다. 남북한의 경우에서도 통일 이후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부적응과 갈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학생들의 갈등 요인

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평화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키워주고, 통일 후 있게 될 갈등을 평화적으로 풀어 가는 능력을 매개하고, 새로운 가치와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 평화교육은 통일준비교육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다섯째, 통일 전 독일은 비록 두 개의 나라이지만 하나의 민족임을 강조하면서, 민족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점이 통일 이후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동서독을 엮는 끈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민족은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단일민족 구성체로 존재해 왔다. 수 천년 동안 남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핏줄을 지닌 혈연공동체였으며,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 온 단일 민족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민족적 갈등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않았다. 즉, 한 민족이라는 점은 한국 사회 구성의 기본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분단 이후 비록 남북한이 다른 길을 갔지만, 동일민족이란 점은 남북간의 이념 대립 및 경쟁의 벽을 해소하고, 남북한을 묶는 중요한 끈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남북한을 하나로 이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념적 체계가 민족주의임을 확인하게 된다. 통일 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민족의 이념은 한핏줄로서 공통된 역사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지향적 가치창출과 국가발전에 참여하는 공동체라는 뜻으로 발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민족공동체의 실현과 한민족 공동의 번영은 통일 한국의 일차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통로로서 민족공동체 교육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섯째, 독일 통일이 낳은 최대 문제점은 통일이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교육통합 역시 최대 문제점은 통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교육통합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부족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 당시 동서독이 통일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 지난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통일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 한 발짝 성큼 다가왔음을 체감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준비 작업이 지금부터 계획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분야에서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의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통합 관련 연구가 구체화되고 활성화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남북한이 시간을 갖고 교육통합을 공동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한 교육통합 준비위원회(가칭) 등의 기구를 설치해 교육통합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독일에서는 통일이 급속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통합을 위한 과도 규정을 만들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북한도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되든 통일 이후 발생할 여러 문제점과 후유증을 예상해 남북한 교육체제의 완전한 통합 이전에 통용되는 잠정적 학교운영 방안, 교육과정 계획안, 교재 개발도 필요하다.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 없는 통일은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낳고, 결과적으로 진정한 통일인 정신적이고 의식적인 통합, 즉 국민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독일 통일이 주는 교훈이고, 감상적 통일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오늘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X.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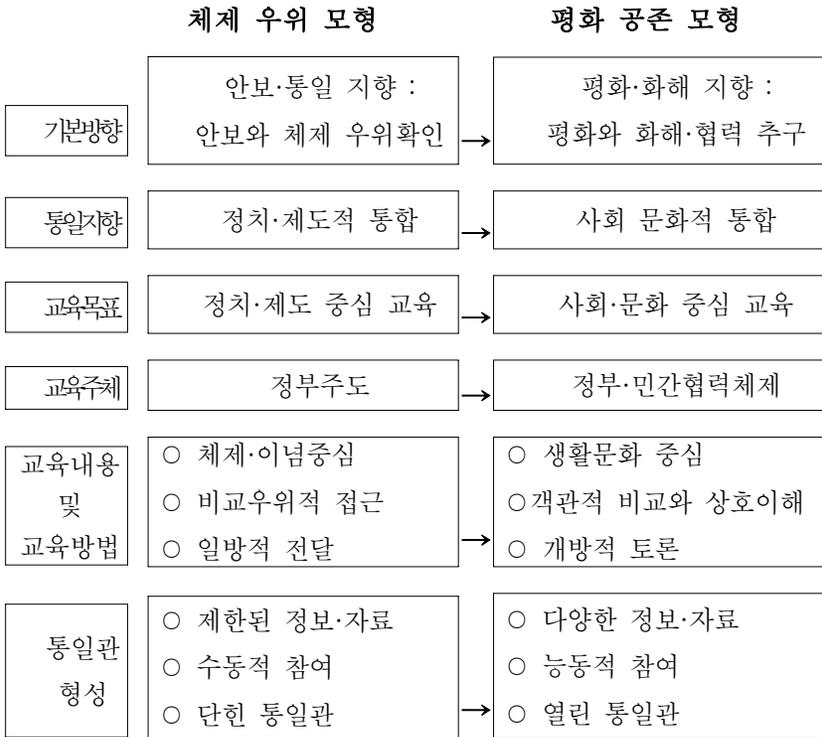
1. 평화공존 모형으로의 방향 전환

가. 평화공존 모형

최근 들어 통일교육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계기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지난 6월의 남북 정상 회담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데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남북관계를 비롯하여 통일 환경이 변화하였으며, 학생과 교원, 국민들의 통일의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의 방향은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평화를 정착시키고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통일교육은 기본적으로 과거 우리 체제의 우월성과 안보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 중심의 통일을 지향하는 방식에서 변화하고 있다. 남북한간의 평화와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평화공존과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다.⁷¹⁾ 평화공존에 기초하는 통일교육의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1) 통일부, 2000년 「통일교육기본계획」, 1999. 12; 통일부, 「2000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한만길 외,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9 참조



[그림 IX-1]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모형

종래의 통일교육은 냉전구조라는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냉전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환경에서 통일교육은 남북한이 서로 자신들의 이념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이념을 비판하고, 각자 자신들의 이념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흑백논리적 시각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따라서 기존의 안보·통일교육은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통일을 대비하고 민족의 이질화된 생활공간을 재통합시키기 위한 차원보다는 오히려 남북한간의 이질화 및 적대감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근본적인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새로운 통일교육은 아직도 대치와 단절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냉전적 가치들을 지양하고 공존, 화해, 평화와 같은 상

호 접근을 도와주는 지평을 심화하고 확대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과거의 통일교육은 그 내용에 있어서 정치·이념적 접근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미화, 사회주의에 대한 일방적인 부정, 그리고 북한의 부정적 특성을 부각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특히 북한 현실에 관한 교육에서 민족동질성 회복의 시각에서 접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질성을 크게 부각시켜 왔다. 동서독이 통일 이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후유증, 그리고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던 예멘 통일후의 부작용은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특히 정치·이념적 통합뿐만 아니라 상이한 이념과 체제 속에서 살아 온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에 있어 이질성의 극복이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새로운 통일교육은 그 내용구조에 있어서 정치체제나 이념에 치우침 점에서 벗어나 북한 주민의 생활상, 사회구조와 가치관 등 생활문화에 주목하고 이를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교육의 새로운 모형에서는 교육의 주체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협조와 역할 분담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과거 정부주도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형태를 지향해야 한다. 즉 정부의 경우는 통일교육의 방향과 지침, 내용체계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일교육을 촉진, 지원하는 법적 기반 확충 및 재정적 지원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교육의 추진 방법은 각 교육기관과 민간단체의 독자적인 특성에 따라 자율성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학교를 포함하여 공공 및 민간 사회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라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건전한 통일관을 형성하고 통일의를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남과 북 사이의 화해와 상호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북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과 의식을 존중하면서 민족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과 프

로그래의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교육기관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서로의 특화된 통일관련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교류하고, 국민의 건전한 통일 의지를 함양시키고, 통일교육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형성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나. 통일을 보는 관점의 변화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중요한 점은 통일을 보는 관점의 전환이다. 최근 남북관계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통일에 대한 기대와 논의가 활발하다. 현 시점에서 성급한 통일 논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두 체제가 하나의 체제로 변화하는 것 뿐 아니라, 이질적인 가치와 문화가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제도나 체제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지만, 상이한 의식과 문화를 통일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이점은 독일 통일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성급한 통일 논의는 양측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혀 회복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때 통일을 논의할 때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통일을 제도적인 통일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통일은 하나의 체제를 만들어 가는 제도적인 통일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의식의 통합의 문제이고, 사실상 의식의 통합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의식이 통합을 이룰 때까지 통일은 계속 진행중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난 독일 통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 제도적 통일은 오늘과 같은 국제환경 하에서는 남북 쌍방이 정치적 합의만 이룩하면 어느 의미에서는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사회의 내면적 통일, 즉 마음의 통일은 정치 제도만 통합된다 해서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쌍방 모두가 구 시대에 심어진 가치관이나 의식구조의 변화 없이는 참된 의미에서의 화해와 단결, 협력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통일이 된 지 10년이 지난 오늘 독일은 제도적인 통합은 이루었지만, 의식의 통합은 계속 진행중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을 제도적이고 의식적인 통합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했을 때, 통일은 단기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통일교육은 통일 이전의 통일 준비교육, 통일의 진행과정에서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교육, 그리고 통일 이후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통일교육은 통일 이후까지를 대비하는 교육을 말한다. 통일교육은 장기적 관점에서 분단된 남북한 사회의 궁극적 통합에 기여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 나가는 통일은 외형적 정치적 통일만이 아니라 둘로 갈라져 있는 민족 사회의 실질적 통일, 실질적 융합이기 때문에 통일교육은 서로 달라져 있는 남북한 주민의 의식, 가치관, 행동양식의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따라서 북한 바로알기, 현대 한국사인식, 분단현실 인식, 통일의 당위성 인식 등 단기적 과제와 더불어,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다원화교육 등 장기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셋째, 통일을 말하기보다는 먼저 평화와 화해를 바탕으로 하는 공존을 핵심 주제로 삼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에 대한 논의에서 통일을 앞세우기보다는 북한 주민에 대한 화해의식이 필요하고 나아가 그들과 평화롭게 어울려 살아 갈 수 있는 공존의 자세를 갖는 것을 더욱 중요한 교육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포용적 화해, 상호 협력과 지원을 통한 공존, 나아가 공동체의 수립이라는 목표가 통일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정립되어야 한다.

그 동안 남북한의 분단상황에서 형성되어 온 상호 적대감과 대결의식을 불식시키고 화해를 추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하여 평화교육은 중요한 시사를 주고 있다. 평화교육이란 전쟁이나 폭력이 아닌 평화를 선호하고 이를 수호해 나가는 의지를 심어 주는 교육일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함께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의식화시켜주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는 당면케 되는 사회적 갈등관계를 공격성이나 배타성, 폭력 등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대화와 화해, 합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평화와 화해의 관점에서 볼 때 “남북간의 갈등, 반목, 적대감을 해소하고, 계층, 지역, 종교간의 갈등을 불식시키며 전쟁과 폭력에 대한 경계심, 핵이나 공해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는 것”⁷²⁾ 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적 차원에서는 남북한이 공존 공영 속에 평화로운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기반 조건으로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이의 수호 의지는 남북한이 평화 속에 공존 공영하면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는 통일의 과정을 원만하게 추진하게 하는 환경 조건의 바탕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삶에 필요한 기반 요소의 하나로서 마땅히 강조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화의식과 의지를 심어 주는 평화교육은 존재하는 갈등관계를 공격적이나 배타적으로 폭력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대화와 화해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지도하는 교육으로서 근본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깨우치고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주안으로 하는 것이 된다.

2.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가. 통일교육 이념의 정립

새로운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통일교육의 이념을 정립하여야 한다. 교육이념이란 교육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관념을 의미한다.⁷³⁾ 이러한 이상적 관념은 교육목적 및 목표 설정에서 뿐 아니라,

72) 한만길, “통일교육의 사회과학적 접근 모형”, <통일문제연구> 94년 겨울호, 평화문제연구소, p.184

모든 교육적 계획과 실천의 기준이나 원리로서 작용한다.⁷⁴⁾ 교육행정이 어떤 특정한 교육정책을 정하거나, 교사가 특정한 교육방법 또는 훈육방법을 취하거나, 입시제도를 어떤 특성을 가진 것으로 결정할 때, 그 판단의 궁극적 정당화의 기준은 교육의 이념에서 찾을 수 있다. 교육이념의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육의 목표를 정하거나 교육을 실천할 때, 먼저 교육이념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로 제기된다.

그런데 남북한은 지금까지 별도의 교육이념을 정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남한은 홍익인간의 민주주의적이고 휴머니즘적인 건국이념이 바탕을 이루며 계속 발전되어 오면서, 사회 문화적이고 정치 경제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그 이념이 재조명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교육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사상적 뿌리를 두고, 사회 정치적인 상황 변화와 더불어 북한의 독자적인 사회주의 사상인 주체사상이 정립되면서, 그것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변천되어 왔다. 북한 사회주의 교육의 이념을 요약하면 1) 마르크스-레닌주의, 2) 집단주의, 3) 중오교육, 4) 이론과 실천의 결합, 5) 조기 교육, 6) 평등주의, 7) 혁명 전통의 교양, 8) 주체사상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⁷⁵⁾

남북한 교육이념의 특징을 살펴보면,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을 지향하며 반 세기 동안 제 갈 길을 경주해 왔다. 따라서 극도로 이질화 된 남북한의 교육이념을 묶어 새로운 통일된 교육이념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이제 통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여러 사회분야와 함께 교육 분야에서도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모든 교육을 이끌어가는 바탕이 되는 교육이념의 통합 논의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남북한의 체제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미래 사회를 내다보며 공통적

73) 서울대 교육연구소(편),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하우, 1994), 121.

74) 한명희, “한국교육 이념 철학의 정립과제”, 『교육학연구』 22(1984), 75.

75) 김형찬(편), 『북한의 교육』 (서울: 을유문화사, 1990), 32면 이하.

으로 추구해야 할 이념적 가치는 세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는 민주의 이념이다. 통일민족 국가의 국가이념으로서의 ‘민주’는 남북한이 모두 지향하는 점이다. 그러나 남한에서 민주란 “권력의 독점이나 집단의 제외 등을 예방하고 다원적인 국민의 의사와 이익이 공평하고 포괄적으로 대표되는 구조를 갖고 운영되어야”⁷⁶⁾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민주란 “주권을 틀어쥔 계급이 자기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급적 독재의 한 측면”으로 되어 있다.⁷⁷⁾ 따라서 민주주의란 단순히 모든 국민들이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상이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이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주인이 되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민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이 어떤 집단에 독점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민주에서 ‘민’이란 중세시대의 계층성과, 공산세계의 계급성을 벗어난 국가 구성원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 한국이 지향해야 할 이념으로서의 ‘민주’는 국가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장되는 구조와 체제를 의미한다.

둘째는 민족의 이념이다. 한 민족은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단일 민족 구성체로 존재해 왔다. 수천년 동안 남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핏줄을 지닌 혈연공동체였으며,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 온 단일 민족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민족적 갈등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않았다. 즉, 한 민족이라는 점은 한국 사회 구성의 기본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분단 이후 비록 남북한이 다른 길을 갔지만, 동일민족이란 점은 남북 간의 이념 대립 및 경쟁의 벽을 해소하고, 남북한을 묶는 중요한 끈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76) 이흥구, “통일이념으로서의 민주와 자유”, 이상우(편), 『통일한국의 모색 - 이념, 환경과 정책적 노력 -』 (서울: 박영사, 1988), 31.

77) 이흥구, “통일이념으로서의 민주와 자유”, 이상우(편), 『통일한국의 모색 - 이념, 환경과 정책적 노력 -』 (서울: 박영사, 1988), 40.

여기서 우리는 남북한을 하나로 이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념적 체계가 민족주의임을 확인하게 된다. ‘민족’이 통일한국의 이념으로 제시되는 데 있어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남과 북이 한 민족임을 확인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남한에서는 민족개념을 그 동안 혈통중심적이고 공동문화적인 것으로 다분히 미발전적인 차원으로 이해했고, 북한에서는 민족개념을 계급적 성격을 띤 것으로 이해해 민족의 본질적 속성을 왜곡시키고 있다. 통일 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민족의 이념은 한핏줄로서 공통된 역사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 지향적 가치창출과 국가발전에 참여하는 공동체라는 뜻으로 발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는 평화의 이념이다. 통일은 남북한의 화합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 한국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민족사회를 이루는 모든 세력들이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과 북의 주민들이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극복하게 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서 국제 분쟁 등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세계 여러 민족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평화교육은 통일 한국 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과제이다.

나. 통일교육 내용의 변화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에 적합한 형태로 교육내용 역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분단과 북한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통일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로서 우리 사회 안에서 화합할 수 있는 평화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1) 북한의 현실에 대한 사실적 인식

현재의 시점에서 남북간에 긴장과 적대감을 씻고 상호 신뢰를 회복해 나가기 위해 무엇보다 현실적 대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북한을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공동체의 일방이라는 통일관에서 본다면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와 협력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쪽의 특수한 사회 체제를 이해하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마음을 길러야 한다. 그들은 우리와 다름없는 같은 민족이란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관한 무지와 불신은 통일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 북한의 실체를 그대로 정확히 파악하여 국민에 알리고, 이 바탕 위에서 남북한의 동질성과 상이성을 확인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질감과 불신감을 해소하며, 상호 이해의 수용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사회화적 기능을 통일교육이 담당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관한 사실들을 정확히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교육은 그 동안 체제와 이념 교육이 중심을 이루어왔다. 체제와 이념 중심의 교육은 공산주의 이념과 체제, 북한의 정치체제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나아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하여 사회문화 중심의 통일교육은 북한 사회의 전반적 특성,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념과 체제 중심의 접근은 남북한이 체제통합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면,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은 사회문화적 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서의 북한 이해 교육은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구상해야 한다. 생활문화라고 한다면 이념이나 체제 또는 사상과 제도와 같이 거창하거나 추상적인 소재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통 문화, 관습, 의식주 생활, 가정생활과 가족관계 또는 자연지리나 관광

자원 등을 말한다.

종래에는 통일교육에서 이념과 체제, 또는 사상과 제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어 왔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내용은 단순히 암기하도록 하거나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학습내용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구체적이면서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통일교육이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에 기인한다.

또한 이념과 체제에 관한 지식은 학생들에게 남북한의 차이점과 이질성을 부각시키는 데에는 효과가 있으나 남북한의 동질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효과가 적다.

이제 통일교육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서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재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은 대단히 많다. 학생들은 가정생활, 의식주 생활, 가족관계, 생활관습 등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관한 많은 사항들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생활문화를 소재로 하여 교육을 실천한다면 북한을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세계로 인식하기보다는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우리와 같은 문화를 갖고 같은 방식으로 생활하는 우리의 이웃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의 생활상과 더불어 그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은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으로부터 유래된 요소도 있으며, 우리 민족의 전통에서 유래된 요소도 있다. 따라서 남한 사회와 다른 점도 있고 유사점도 있다. 다른 점과 유사점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다른 점에 대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유사점에 대해서는 민족의 전통적인 요소에 대한 애정과 함께 사회발전의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방적 자세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탈북자들은 남북한 사회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간의 특성과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다. 탈북자들의 생활 태도를

통하여 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남북한 사회에 대한 비교도 가능하다. 그들의 증언을 기초로 하여 남북한 사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남한 사회의 특징은 개인주의, 물질주의, 합리주의가 지배적인 가치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에 남한 사회는 지나친 이기주의, 금전만능주의, 비인간적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북한 사회는 집단주의, 인정주의, 명분과 자존을 중시하고 가치관이 중심이 되고 있는 반면에, 타율적이고 수동적이며 권위주의, 가부장적인 부정적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자들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거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 사회의 장단점에 대한 자화상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 사회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북한 사회의 장단점을 수용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편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북한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인간의 다양한 모습, 활발하게 움직이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북한 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보아 주민들도 나름대로의 강점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통일에 대한 관심과 성취 의지 고양

통일을 앞당겨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개선의 시발이라 할 수 있는 화해협력의 단계를 진전 시켜 나가려면 통일 과업의 담당 주체인 모든 국민들이 통일에 높은 관심을 갖고 통일의 여정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분단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의 국민 통일 의식 상황을 보면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와 통일 의지 즉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쇠퇴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전후 세대들, 20세 이하의 청소년 계층에서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⁷⁸⁾

사람은 누구나 각기 지향해 나갈 미래상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에 대한 신념을 가질 수 없게 되고, 뚜렷한 신념이 없으면 추진하는 과업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통일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면, 새로운 남북관계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남북간의 상호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늘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교육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3) 북한 주민에 대한 화해의식 형성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는 첫 걸음은 지난날의 분단과 대치시기에 쌓인 상호 불신과 적대의식을 씻고 북한과 화해 협력의 상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우리들 모두에 부지불식간에 내면화되어 있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불신은 근본적으로 그간에 누적되어 온 상호 갈등과 동족 상잔의 전쟁이란 역사적 경험에 근거하는 것이지만, 적지 않은 경우 지난 이데올로기적 냉전시기에 실시되어 온 교육의 결과로 빚어진 상대방에 대한 몰이해와 오해, 선입견 등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에서 전개되어 나갈 화해 협력의 새 시대를 맞이하여 구시대에서 길들여진 이데올로기적 적대감이나 상대방에 대한 불신은 하루 속히 청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불화감을 그대로 두고는 우리가 원하는 화해 협력을 통한 관계개선은 물론이고 남북의 동포가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 함께 만나는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는 통일의 도정에 진입해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은

78)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성장세대들의 통일 관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자명하다. 그런데 남북간에 누적되어 온 이념적 적대의식과 불신은 저절로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의 전 과정에서 이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적개심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맨 먼저 상대방인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정치적 이념을 비롯하여 각 분야 사회상에 대한 객관적 현실적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냉전적 반목과 불신으로부터 벗어나 북한을 좀더 폭넓은 시각과 열린 자세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탈냉전, 화해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 동족간 이념적 대결과 경쟁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자각과 대북 자신감에서 오는 여유에 바탕 하는 것이다. 대결과 경쟁의 상대방으로서의 북한과 협력과 화해의 상대, 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북한을 국민들에게 알려 주는 일은 그 관점과 역점이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북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해 나가는 일과 관련하여 특히 청소년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냉전시대에 길들여진 사고방식, 가치관 중 후대에 전승되는 경우 혼란과 강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큰 요소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것이 후대에까지 계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시기 냉전적 대결 구조하에서 부지불식간에 체득된 흑백논리나 독단, 독선적 주장, 이념편향적 발상 등이 민족적 화해와 단합 나아가 통일 과업의 수행과정에 얼마나 많은 장애와 해독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를 스스로 인식케 하고, 이를 당대에 불식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이 점에 있어 우리가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대북정책 수립에 참여하거나 국론의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사회의 각계 지도층에 일반화되어 있는 냉전적 사고방식과 부정적 대북 인식, 구조화된 적개심과 불신감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론적 근거의 일단은 아자르(Edward E. Azar)를 중심으로 한 ‘고질화된 갈등이론’ 연구가들이 지난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간의 분쟁을 사례로 하여 연구한 결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에 의하면 분쟁 당사국들의 지도층이 내리는 의사결정은 오랜 갈등구조 속에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되어진 인식 프리즘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요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 프리즘을 먼저 바꾸지 않고서는 분쟁에 있어 긍정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증동분쟁을 사례로 연구한 바 얻어진 결론은 그와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남북한의 ‘고질화된 갈등관계’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4) 민족공동체의식 함양

오늘날 우리 대북 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과도적 목표의 하나는 분단으로 인해 남북으로 나뉘어진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합쳐 하나의 민족공동체적 삶을 회복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민족공동체」란 “같은 민족으로서 공유하는 민족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관과 신념에 입각하여 민족 단위의 생존과 번영을 지향하며 집단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생활공동체”로 정의된다. 이 민족공동체에서는 구성원 개개인에 내재하게 되는 공동체의식이 전체 구성원을 하나로 결속하는 끈이 되고, 갈라진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결합시키는 가장 큰 명분이 되며, 재통합을 추진해 가는 힘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통일의 성취 과정과 이후를 준비케 하는 국민교육에서 담당해 나갈 기본 과제 중의 하나는 「한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모든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심리적 융합에 기여할 가치관」과 「공동체 지향적 의식」을 심어 줄 것인가가 된다.

그러면 같은 공동체 성원으로서 「심리적 융합에 기여 할 중심 가치 덕목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울타리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끼리 도움을 주고받는 협동심, 자신의 주의 주장이나 입장만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타인의 주장이나 생각도 존중하며 이해하려 노력하는 폭넓은 마음자세, 내 이익만을 지나치게 앞세우지 않고 타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이익을 양보할 줄도 아는 태도 등이 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볼 때, 통일 이후의 독일 정치교육에서 독일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의 하나로 ‘관용과 절제’가 특히 강조되었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관용’이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동정심을, ‘절제’란 한마디로 ‘절제된 이기심’을 말하는 것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의 바람직한 행위규범으로서 극기, 양보와 희생정신 같은 것이 된다.

어릴 때부터 상극의 논리보다는 상생의 논리를 체득케 하여야 성인이 되어 관용스럽고 이타적인 인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청소년기부터 ‘나’나 ‘내 집안’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속에 같이 살아가는 남의 사정을 보살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타적인 태도를 체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간에 인적 왕래와 접촉이 확대되어 경제적 수준과 생활문화가 서로 다른 남북의 주민이 한 테 어우러져 살아가게 되면 남한 사람들이 가지게 될 상대적 우월 의식이나 과시적 태도, 북한문화에 대한 냉소적 비판 등이 공동체적 융합을 가로막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대방에 대한 우월 의식이나 실생활문화에 대한 편견은 공동체적 단합을 위해 하루빨리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공동체 지향적 의식」이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공동 운명체 의식, 책임의식, 소속 집단이나 생활 공동체에 대한 귀속의식 등을 말하는 것이다. 화해 협력을 통한 통일 접근 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이와 같은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는 가치 덕목들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우리 체제하에 길들여진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 물질만능주의, 지역 이기주의 등과 같은 더불어 살아감에 장애가 될 부정적 의식구조나 행동양식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의도적 교화 노력도 함께 경주되어야 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로 지적되는 지나친 개인주의적 가치관이나 사익 우선 주의의 추구는 공동체 성원간의 단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 것으로서 서둘러 치유되어야 한다.

통일의 성취 과정이나 통일 이후의 삶에서 구성원들에게 공동체의식이 약하거나 결핍되어 있는 경우 어떤 부작용을 결과하는가는 통일 후 10개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적지 않은 사회 문화적 후유증과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 독일 통일의 선례에서 교훈 받는 바가 크다.

통일 후의 독일에 나타난 구 동서독 지역 출신 주민간에 의식상의 갈등을 빚고 있는 요인의 대부분은 서로 다른 체제와 이데올로기 속에 살아 왔던 양 지역 주민들이 통일된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같은 공동체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 근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5) 문화적 전통에 대한 유대의식 강화

남북한의 주민이 상대방을 같은 민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게 되는 기본적인 요소는 서로가 혈연으로 이어져 있고 같은 언어, 역사와 함께 생활상의 문화 전통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중에서도 천부적 요소인 혈연이나 인종을 같이 한다는 사실 외에 우리 민족에 고유한 문화전통이 우리의 통일의지를 지탱해 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전통은 인간을 집단화 시켜주는 결집력으로 작용하며, 바로 그 힘이 남과 북으로 분리된 민족사회를 재결합시켜 줄 동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⁷⁹⁾

그런 의미에서 통일과업과 관련하여 우리가 해야 할 원초적인 작업은 우리고유 문화전통의 확인, 계승, 발전, 보급의 과업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주민을 의식 차원에서 묶어 주는 연대의식이 다름 아닌 문화전통의 공유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바로 그 연대를 강화하는 데에서 통일의지를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⁸⁰⁾

통일 후 남북한 주민들의 갈등과 이질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남북관

79) 이상우(1991), “문화전통과 통일의 과제”, 『문화전통과 사회발전』, 미원문화재단, p.153

80) 이상우(1991), 위의 책 p.153

계의 개척 과업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학자들이 독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문화적 일치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서로의 이념적 가치관의 첨예한 대립을 해소하고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 문화적 일치의식 뿐이라고 생각한다

민족적 전통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민족적 긍지를 심어 주는 시발점이 된다. 또 민족주의는 동족을 사랑하는 민족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조국애, 자기의 주권을 옹호하는 충성심, 민족문화와 전통을 사랑하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이것은 통일에의 접근 과정과 이후에 걸쳐 민족 통합을 촉진하는 기반 이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남북한 주민이 같은 민족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뿌리인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한 공유의식, 민족사에 대한 강한 애착과 긍지, 이의 계승 발전 의지를 고양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열린 민족주의’ 시각에서 전개되는 「민족교육」이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일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

(6) 통일에 대한 책임감 함양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 과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통일 의지가 고취 되어야 함과 동시에 각자가 자신이 그리는 통일의 장래나 미래상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일의 당위성이나 미래상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자칫하면 통일에 대한 환상적 기대나 무책임한 이상주의에 빠지게 하기 쉽다. 우리의 통일은 결코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성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아무런 노력이나 희생 없이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성사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모두가 철저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통일이 염원의 차원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통일 추진에 따르는 고통과 희생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정확히 인식할 필요

가 거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일에의 접근과정이 우리 눈앞의 현실로 전개되고 있는 오늘에 와서는 통일 과업을 감당해 나갈 국민 각자가 자기가 맡아야 할 책임과 희생의 내용을 먼저 적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에 따른 개개인의 희생과 고통, 경제적 부담에 대한 사전 인식과 이에 대한 각오가 없이 통일 과정에 진입하거나 통일을 맞게 되는 경우, 뜻 아니게 당면케 되는 여러 가지 곤란과 부담을 끝까지 인내해 내지 못해 도중에 좌절하기 쉽다.

통일의 경제적 비용을 비롯한 물질적 부담 등과 함께 심리적 고통, 통일 추진 과정과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개인적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구체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여 이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과업의 일익을 담당해 나가야 하겠다는 각오와 사명감을 스스로 다짐해 나갈 수 있도록 통일교육과정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다. 통일교육 방법의 개발

(1) 통일교육의 다양한 방법 적용

과거의 통일교육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개념의 지식만을 전달하는 원칙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의 주입식 강의방식 위주로 실시되어 왔기 때문에 피교육자의 관심이나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해 교육의 내면화 효과가 그다지 큰 것이 아니었다고 평가된다. 새로운 시대의 통일교육은 교육 자체가 가지는 특성과 대상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수방법과 학습기법이 다양하게 개발 활용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대상의 자율적 판단력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하기 것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이념이나 사상, 교수자의 주관적 주장을 일방적으로 주입하여 기대되는 정형화된 의식과 행동이 심어지도록 강요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교육과정에서 피교육자의 다양한 주장과 개방적인 논의를 허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피교육자 스스로가 참여하는 가운데 능동적인 교수 학습이 진행되도록 하며,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수업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법을 실천하려면 통일교육에 관한 각종 시사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이 중요하다. 교육자료는 문서자료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자료,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영상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교육방법에서도 종래의 강의중심,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대화와 토론을 통한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개방적으로 개진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보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체험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북한과 통일문제를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2) 통일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각종 교육 홍보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현재 통일교육원에서 간행된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이해』는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원론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초·중등학생용, 대학생용, 성인용 등으로 내용을 차별화하여 대상에 맞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사성 홍보자료를 교육용으로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이 홍보자료는 만화나 소설의 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에 부합하는 시청각 자료의 개발도 시급히 요청된다. 시청각 자료는 교육단계별 수준에 맞게 제작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의 여건에 맞게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 및 사회교육 기관의 통일관련 과목 시간 배당에 맞추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1~2시간 배당은 20분 내외, 3시간 이상은 40~50분 내외)를 개발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종합적 네트워크에 기초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도 중요하다.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은 우선 이용대상자의 수준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를 개발하고, 정부부처나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북한실상이나 주민 생활을 가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 요소를 개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 통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자료집으로 발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중이거나 개발된 통일 관련 교육 프로그램, 통일부나 교육부로부터 과제로 부여받아 제출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총 집대성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고 보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통일교육지원센터의 주도하에 통일교육 시범학교나 각종 사회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독창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공모, 선정하여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프로그램 공모 시 세대별, 성별, 교육기관별, 전문직별, 시간별 구분 하에 일선 교육기관에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프로그램 개발시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하여 학습자들의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경우 가산점을 부여해 준다.

프로그램 बैं크를 운영할 수도 있다. 개발된 통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बैं크의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통일부나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프로그램 बैं크에는 통일교육 전문가, 북한문제 전문가,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목록작성이 아니라 지역별 목록의 교차배치를 통해 지방에서의 통일교육을 위한 강사지원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3) 전자통신매체를 활용한 통일교육의 활성화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 과제는 다양한 정보화 대중매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다. 관련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각급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대부분이 통일문제를 비롯한 북한실정에 관한 정보들을 정규 교육과정에서보다는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등 대중 정보매체들을 통해 더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중매체들을 통일교육의 전달매체로 활용하면 교육 대상의 제한과 적절한 교육시설의 확보 문제 등 교육 실시 상의 애로를 쉽게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정규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효과를 크게 보완하거나 강화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것이다. 특히, 각급 학교의 교과과정에서 학습되거나 인지된 내용이 매스컴 등 제 2의 학습 매체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그 내면화 효과는 일층 배가된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입증된 결론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통일교육의 확충방안의 일환으로서 지금까지 거의 방임시 되어 왔던 T.V. 라디오, 신문 등 다양한 대중전달 매체를 활용한 통일교육 실시방안이 다각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사이버시대를 맞아 통일교육원이 이미 시도하고 있는 『사이버통일교육센터』와 같이 교수요원과 청소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의 전문 사이트를 개설해 이를 통해 공개 『사이버통일강좌』나 『통일토론평당』 같은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3.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의 개선 방안

가. 학교 통일교육의 개선 방안

(1) 북한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 활용

이제 통일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현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의 현실과 통일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인 판단과 비판, 이것이 통일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북한 관련 시사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 관련 자료와 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통일부와 국가안전기획부를 비롯하여 각 기관이 수집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를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문, 잡지, 방송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는 북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 방문자들이 가져오는 영상자료도 중요한 교육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 자료 전시회를 지역별로, 학교별로, 수시로 개최하여 학생들이 북한 자료를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 자료 전시회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며, 상설 전시장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도 있다. 또한 학교 단위로 상설 전시실을 마련하여 통일과 북한에 관한 시사 정보 자료를 게시할 수도 있다.

종래의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정서적 태도를 강조하였으며,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규범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하여 우리 민족이고 우리 동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고 포용해야 한다는 정서적인 태도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적인 접근은 북한을 우리 동포의 일원으로서 이해하고 포용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정서적인 접근은 객관적 이해를 기초로 해야 한다. 즉 북한을 보다 객관적으로 정확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통일교육은 정서적 태도와 의지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의적인 접근과 더불어 인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의 현실과 통일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태도와 의지를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사실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 사회에 관한 실물 자료를 교

육활동에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각종 영상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이를 교육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교과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강화

현재의 통일교육은 도덕 윤리과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범교과적으로, 그리고 모든 교육활동으로 확대해야 한다. 즉, 통일교육 관련 교과를 모든 교과로 확대하여 북한 및 통일문제를 각 교과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반영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은 각 교과의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발하고, 이를 교과서 개편 과정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어과는 북한 언어의 특성과 우리와의 차이점, 그리고 남북한 문학의 차이점이나 유사점, 남북한 학생이 공통적으로 즐겨 읽고 있는 문학작품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서울 ‘표준어’와 평양 ‘문화어’의 차이점, 남북한 어휘, 용어의 차이점 등을 가르칠 수 있다.

도덕윤리과는 북한의 현실과 통일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다. 즉 분단의 과정과 남북한 현실, 통일을 위한 노력, 통일사회의 전망과 통일사회 적응 태도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사회과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현실과 특징, 최근 북한 사회의 변화와 실상, 그리고 남북 관계의 현실과 변화, 북한 주민 생활에 관한 사실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지리과는 북한의 자연 지리적 특성, 산업, 자원, 유물, 유적지, 관광지, 주민생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예체능 교과에서도 북한의 예술, 체육, 민속, 오락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으려면 각 교과에서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해야 한다.

(3)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체험활동, 특별활동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별활동을 통해서도 통일교육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별활동을 활용하여 시사반이나 통일반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의 각종 교육활동에서 통일 관련 주제를 반영할 수 있다. 즉 훈화, 학교행사, 시사교육, 환경계시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의 단체활동, 현장학습, 유적지 답사와 같은 활동에서도 통일교육과 관련되는 주제를 다루도록 할 수 있다. 학교 자체에서 또는 청소년 단체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단체 수련활동에서도 통일교육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각 시도 단위로 1-2개 학교를 지정하여 통일교육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 수를 확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을 통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학교에 통일교육의 모형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따라서 각 시도에서 지역 교육청 단위로 1개 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교원의 통일교육 연수 기회 확대

교원들은 누구보다도 통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열의를 가져야 한다. 통일에 무관심한 청소년, 학생들에게 통일의식을 고취시키고 언제 다가올지도 모를 통일 상황에 대비하려면 교원들 자신부터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선 교원들은 북한과 통일 문제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통일 상황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통일 문제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나 통일 문제에 대하여 극

단적으로 편협한 시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원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문 또는 교과 내용을 통일 문제와 관련지어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적인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교원들은 각 교과 내용에서 북한 및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가르칠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해야 한다. 그 소재와 주제는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소재를 교육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교원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각 교과와 관련한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통일교육 연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교원의 통일교육 연수는 통일문제, 북한 현실,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 과외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등 다양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많은 교원들이 연수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통일교육에 대한 자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원 연수의 방법도 연수 기관 중심의 연수에서 탈피하여 자율연수, 위탁연수, 사회단체 연수 등 다양한 형태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통일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나. 사회 통일교육의 개선 방안

(1) 통일교육 유형의 다양한 발전

통일교육의 유형을 정부와 민간 교육기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정부주도형, 민간주도형, 민관협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래에는 통일교육은 정부가 주도하는 유형이 주류를 이루어왔으나 최근 들어 민간 사회단체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민간 주도의 통일교육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주도형은 사회 통일교육을 정부가 기획, 집행, 그리고 비용을 전

액 담당하는 형태이다. 정부주도형은 정부의 정책의지가 왜곡되지 않은 채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전문교육기관이 아닌 관계로 체계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어렵고, 학습자들의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획일적 운영방침을 지닐 수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민간주도형은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아닌 민간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이다. 민간주도형은 정부의 공식적인 개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로서 각종 민간사회단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민간주도형은 국가의 정치적 부담, 재정부담, 전문인력 부족, 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지의 반영이 곤란하고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단체들의 고유한 목적이 우선적으로 개입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통일적인 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전체적인 체계를 조정하고 관리할 능력의 부족이 나타나게 된다.

민관협조형 모델은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의 혼합형태로서 그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이다. 즉 이 모델은 다양하면서도 전문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며,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민관협조형은 민간과 정부의 협동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사회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정부는 전체적인 기획과 비용을 담당하며, 실질적인 사회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시행, 평가 등은 민간단체가 주로 담당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통일교육을 시작한 이래 90년대에는 통일논의와 교육의 개방화, 민주화,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통일논의와 관련된 자유로운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통일교육의 개방화, 민주화,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의 내용 마련 등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정부 주도적 통일교육 정책의 전통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한편에서 국민들은 통일교육과 논의의 자율기능과 창조적 적응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부가 나서서 통일논의를 중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 민간단체 할 것 없이 문제만 발생하면 정부의 입을 쳐다보는 정부 의존적 행태가 잔존하고 있다. 사회 통일교육의 실천적 장소인 교육기관과 단체는 정부가 자신들을 관리나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불신을 지니고 있다. 반면, 일부 단체는 공공연히 정부주도의 통일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2) 민간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통일교육이 민간 교육기관으로 확산되면서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기본 역할은 분명하며, 때로는 강화되어야 할 측면이 있다.⁸¹⁾ 예컨대 통일교육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제도적 틀의 완비는 정부의 몫이다. 이러한 것들은 통일논의 유인을 증대시키고 국내외적인 통일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꼽힌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통일논의 기반과 여건의 조성은 통일교육과 관련된 민간주체들 간의 통일논의의 장애 대한 진입비용을 줄이고 통일논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또한 통일교육과 논의의 경쟁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내 통일교육 과정에 대한 참여 영역을 넓히고 공정한 통일논의 규칙을 수립·집행하는 일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극단적 보수주의와 급진적 진보주의의 저변이 넓기 때문에 통일논의 불균형성과 경직성, 일방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통일논의의 공평한 논쟁의 장을 구축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아울러 정부는 통일교육과 관련된 네트워크의 구축, 통일교육 교사양성, 통일교육 기초정보 및 자료 생산 등 통일교육과 관련된 공공적 통일교육 자료를 공급하고, 안정적인 통일교육의 전체적인 여건을 구축해

81) 고정식, “통일교육발전을 위한 학교와 정부의 역할”, 통일부, 제4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1999.11.11) 주제발표 원고.

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과 관련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한다.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단체는 사회집단의 다원성의 한 표현으로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이는 전체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통일교육 업무의 통합적 측면을 고려할 때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다. 통일교육과 관련한 이견 조정 문제도 가능한 민간단체간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다양한 통일교육의 실천 방안

공무원 및 교원 교육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의적인 교육 목표와 내용,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민간사회단체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체들의 통일교육은 체험학습(가상 및 현장 체험학습) 뿐만 아니라 토론식 수업방법을 도입하여 수강자들의 자기주도식 학습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방법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통일문제가 일정한 공간에 앉아서 듣는 교육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축제나 행사와 같이 기획되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지향한다는 데 있다고 보여진다.

학습자들 또한 의무적으로 통일교육에 임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교육의 내실화 및 교육에의 적극성이 발휘됨으로써 호응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민간사회단체에서 기획된 사회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1999년도에 비해 평화교육이나 이문화이해 교육 등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강 대상 또한 여성이 주요 대상인 단체도 서서히 증대되고 있다.

반면 많은 민간사회단체들의 자체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체제나 이념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과 자체 공간 확보에 문제가 있는 관계로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즉 남북한간의 이해와 화해, 그리고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에 중점을 둔

다는 차원에서 사회문화적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는 아직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 특히 30장 이상의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경우는 이러한 경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내용의 측면에서도 북한주민의 생활이나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삶과 관련되는 삶의 통합의 측면을 체제나 이념, 통일정책 내지 방안 등을 포함하는 체계통합의 측면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통일준비교육이자 통일대비교육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강자의 직종별, 대상별, 교육기관 유형별, 교육시간별, 교육환경별로 적절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현실성과 참신성을 조화시켜 개발하여, 기존 민간사회단체들이 서로 공유하고 대화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통일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정보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4.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가. 「통일교육강령」의 제정

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교육이 지향해 나갈 기본 목표와 방향을 강령의 형태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강령은 통일교육의 기본적인 명제로서 범국민적 토론을 통하여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초당파적 차원에서 제정 공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교육강령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공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관과 통일관은 세대에 따라 계층과 지역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일관의 차이는 통일교육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고 통일정책의 혼선을 가져오기도 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 사이에서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일

관된 통일관을 형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때로는 정치적인 쟁점으로 비화하여 국민들의 시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통일관과 통일정책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된 관점을 형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통일 명제를 명료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교육 시행지침이나 추진계획, 교육목표와 내용, 지도방법 그리고 통일교육의 지원 관리 체제에 대한 확고한 지침이나 정책방침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채 그때 그때 상황적 요구에 따라가는 임기응변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여 왔다.

통일교육을 체계 있게 실시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각종 통일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일정한 방향으로 통합되고 체계화되어야 한다. 또 통일교육을 주관하는 각 주체들의 역할이 종합적인 견지에서 계열화되고 분담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70년대이래 통일부는 통일교육에 관한 정부 차원의 종합 지침이라 할 수 있는 「통일교육방향」을 간헐적으로 제시하여 왔다. 그러나 이 지침은 정부의 정책의지나 현안문제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을 뿐 폭넓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탈 이념과 화해 협력의 새 시대를 맞아 새로운 차원에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국가차원에서 초당파적으로 정립된 명실 상부한 「통일교육강령」의 제정이 시급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성공적 사례로서 1978년 11월 23일 서독연방 문부성장관들이 합의 발표한 「독일문제에 대한 서독문교부의 교육지침」은 우리에게도 시사해 주는 바 많은 것이다.

다음과 같이 통일교육 10대 강령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남북의 통일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실현한다. 비록 남북분단의 원인이 외세의 개입과 민족내부의 분열에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통일은 민족 내부의 자주적이며 남북한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실현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남북의 통일은 주변 국가의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실현한다.

우리 민족의 주도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주변 국가에 대한 이해와 설득, 그리고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남북은 대립과 갈등을 청산하고 이제는 화해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말하자면 남북한이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협력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한반도의 냉전체제에서 비롯된 대립과 전쟁, 상호 불신과 갈등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매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남북은 한 민족이다. 남북한은 하나의 혈통과 역사, 언어를 가지고 발전해 온 한 민족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민족공동체는 역사적인 뿌리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다섯째, 남북은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유지해 오던 생활공동체를 현실적으로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 남북의 발전과 번영에 유익하다는 점이다. 남북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상보적인 관계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남북한의 상호보완적 관련성을 회복함으로써 공동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남북은 상호 상대방의 차이와 이질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남북은 분단 이후 이념과 체제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제도로부터 의식구조와 생활방식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와 이질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호 불신과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가치관과 생활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합의점과 공동의 이익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곱째, 남북의 이념과 가치, 현실에 대하여 보편적 가치에 기초하여 비교하고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다. 오늘날 인류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 가운데 자유와 인권, 평등, 복지 등은 보편적 가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치에 기초하여 남북의 현실에 대한 비교와 비판을 통하여

보다 나은 사회 발전을 지향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한 것이다.

여덟째, 남북의 통일은 한반도의 안정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남북의 통일은 필수적이다. 남북한 주민들이 모두 안정된 조건에서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고, 동북아시아에서 정치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남북의 통일은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홉째, 남북의 통일은 점진적인 해결을 통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 남북의 현안은 긴장과 대립, 갈등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상호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점진적인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열 번째, 남북의 통일 절차와 형태는 남북의 공동 협의와 이해를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국가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노력하여 만들어 가는 것이다. 통일 절차와 형태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남북한 주민 모두가 현재보다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통일의 절차와 형태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

열 한 번째, 남북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남한 사회의 화합과 안정이 필수적이다. 통일을 준비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사회의 화합과 모두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지역차별과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화합을 실현하고 우리 민족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 상호 대립된 집단간의 타협과 공존, 차별 없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

나. 통일교육 협의 기구 구성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수행되어야 한다. 통일논의 과정에 국민들의 동참하고 국민들의 합의된 의사가 반영되어 통일교육의 방향이 설정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당파적인 통일교육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통일교육협의기구는 교육부, 통일부 등 정부관련부처, 정당인사, 통일 및 통일교육전문가, 시민단체의 대표가 참여하여 구성하고, 실무를 추진하는 여러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협의기구는 통일교육강령의 제정, 통일교육지원법의 보완, 각종 통일관련단체의 지원, 통일교육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현재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통일교육심의위원회와 통일교육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 기구는 통일교육의 방향과 지침을 심의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 정책을 자문 건의하는 심의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이 위원회의 위원중 6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된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하면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통일부장관 주관 하에 수립되는 통일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기구이다.

현재로서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통일교육에 관한 범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고 통일교육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이견을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든지 별도의 상위 기구를 구성하여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과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 정부의 조정 및 지원 역할

(1) 통일교육 기본 지침 개발

국민들의 북한관이나 통일관의 차이와 혼란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통일교육에 있어 강령적 성격을 띠는 기본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국민들의 건전한 통일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합의하는 수준에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정립해 주어야 한다. 예컨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 통일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등에 대한 일관된 지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에 통일교육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공공 및 민간 사회교육기관 지원

정부는 민간 통일교육 기관에 대하여 표준교재, 프로그램, 강사요원, 교육자료 등을 보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시설의 인프라 확충과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예컨대 통일교육 수강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통일교육 실시 기관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통일문제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3)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부처의 협력

정부는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 공개를 확대하여 교육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된 자료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교육기관에 통일교육 관련 과목설치를 위해 관련부처(교육

부, 행자부, 노동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내무부, 국정원 등) 담당자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통일교육 지원 기관의 기능 강화

통일교육 지원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통일교육에 관한 종합적 지원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통일교육의 기능을 강화할 수도 있으며, 다른 관련 기관의 기능을 보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가칭 통일교육 지원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 지원기관은 통일교육의 방향과 목표, 기본 지침, 내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관하도록 한다. 통일교육지원기관은 학교통일교육, 사회통일교육과 관련된 각종 통일교육 관련 단체의 통일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통일교육지원 기관은 연구기능이나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개발 기능, 각 교육기관에 대한 종합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원 관리기능을 보강할 수 있다. 또한 통일 교육 관련 기관의 기능을 보강하거나 연계하여 통일교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다.

라. 법적 지원체제의 정비

(1) 법·제도적 제약 요소의 해소

다른 교육도 그러하지만 특히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적 성격이 짙은 통일교육의 경우, 그 시행에 있어 당시의 사회적 환경과 여건 여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반세기가 넘는 동안의 냉전구조 속에서 통일교육 실시의 외적 환경과 분위기는 적대적 경쟁의 상호 관계와 상이한 이념적 대치 상태의 영향 때문에 특히, 북한교

육에서 교수자의 강단에서의 언행은 그다지 자유롭지 못한 것이었다.

90년대 후반 이후 법규적 규제에서 오는 실무적 제약은 상당히 경감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적지 않은 교사들이 북한을 가르칠 때 혹시 실수하는 일이 없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학습분위기 속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발표와 찬반토론이 중심이 되는 ‘열린교육’방법의 실시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는 각급 학교 교사들을 비롯한 일선 통일교육 담당 요원이 느끼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법·제도적 제약을 요소를 먼저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2) 통일교육지원법의 보완

정부는 1999년 현행 통일교육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육지원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획기적인 것으로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 통일교육지원법이 충실히 추진되는 것은 통일교육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올해 6월 15일 정상회담 이후 통일교육에 있어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교육지원법의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그 내용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시행령의 내용에서 교육훈련과정에 따른 통일교육의 반영은 다루고자 하는 교육 내용,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교육시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확보와 관련된 사항이 법과 시행령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통일교육기본계획」에는 예산에 관한 사항(조달 및 집행계획)이 첨부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본 위원회의 구성원 중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대학교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교육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언론사대표 등의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비상임 전문위원 구성과 유사하게 15인 이내의 실무위

원회도 5개 분야의 소위원회(실무작업단 내지 Task Force)로 나누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 실무위원회는 각급 행정기관의 공무원 비율보다 민간 전문가 비율을 높임으로써 실무작업이나 개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등의 여러 업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구는 무엇보다도 현재 통일교육을 실천하는 기관과 단체의 협의체의 성격을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으로써 자체연수뿐 아니라 정보교환, 계몽 및 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통일교육 실천과정에서 수강자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통해 여론을 형성·수렴하고, 나아가 예산확보를 위한 압력단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정부와 민간의 의사교환 통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새로운 통일교육체제 확립방안

가. 효과적인 통일교육의 방안

한국의 현행 교육체제로는 바람직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급진전되고 통일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고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현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효과적·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학교를 통한 통일교육의 강화 방안이다. 통일교육의 영역은 크게 학교교육, 사회교육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학교는 조직적·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한 공식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정치사회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학생들을 상대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를 통한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달라진 남북관계에 맞는 통일교육의 교재 및 교육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행 교과서는 2000년부터 시작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안보를 강조하고 북한을 적대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많이 삭제되었으나, 교과서 제작당시 급격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급진되고 남북이 더 이상 적이 아닌 동반자적 관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육도 이에 맞게 교육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국가안보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기는 어렵지만, 이보다는 남북주민이 한 민족이라는 점, 남북 화해·협력을 통해 민족동질성이 회복되고 민족동질성이 통일의 기초가 된다는 점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밖에 정부는 교사들에 대하여 재교육을 실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학교에서의 새로운 강의안을 개발케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사들은 물론 일반 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정확한 실상 및 남북화해의 배경 그리고 화해·협력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은 학교교육에서 필수적일 것이다.

초·중·고등학교 중심의 학교교육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대학교를 이용한 통일교육이다. 현재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은 학제적 체제의 미비상태로 효과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졌던 국민윤리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되거나 또는 폐지됨에 따라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정규 과목자체가 없어진 것이다. 몇몇 대학에서 학부에 북한학과를 설치하는 등 북한·통일관련 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이도 일부 대학에 국한되어 있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교, 학과, 담당교수의 재량과 판단에 의해 통일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대학이 통일과 북한문제에 대한 학문적 논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통일문제를 학문적 차원에서 논의하려는 교수와 학생들의 자세가 필요하겠지만,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당국의 노력과 제

도의 개혁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 예로 대학의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을 활용한 통일교육체제의 확립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이는 대학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사회봉사기능을 수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대학과 사회와의 거리를 좁히고 유대를 강화하며, 대학과 지역사회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학교는 마치 서독의 시민대학(Volkshochschule)처럼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운영될 수 있으며 전 시민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대학이 자율적으로 통일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대학의 재정형편상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해주고,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의 기본적인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육방안을 개발하여 이에 참여하는 수강생들도 일정액의 강의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민운동단체를 통한 통일교육의 강화이다. 물론 지금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경실련), 참여사회시민연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 통일교육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급성장하여 우리의 정치, 사회생활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각종 시민단체들의 활동내용을 보면 주로 환경운동, 의회감시 등 정치개혁운동, 소속단체원의 이익보호 등에 머물렀지 통일 및 북한문제에 관한 활동은 부족한 편이었다. 이는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북한 및 통일문제에 소홀히 한 이유도 있지만, 통일논의를 정부로 일원화하려는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도 그 책임이 있었다.

특히 그나마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시민단체들도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일회성 교육에 그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재정이 취약하여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일회성의 강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제 북한·통일에 관한 문제는 정부만의 문제도, 시민단체만의 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통일교육도 다양한 시각에서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 각종 시민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물론 정

부도 시민단체의 활동변화에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하며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교육에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 각종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편집·보도토록 하는 방법이다. 특히 정부가 통제하기 보다 자율적으로 대중매체가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매체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통일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한다면 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어느 조직이나 기구보다도 큰 현실에서 통일교육기능을 수행한다면 대중매체의 위상도 재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EBS 교육방송, 대교방송 등 교육관련 방송을 적극 활용하여 어린이는 물론 성인대상으로 다양한 통일교육을 실시하면 그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가칭)통일교육본부』와 같은 통일교육을 전담하는 범국민적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즉, 서독의 『연방정치교육센터』와 유사한 기구를 만들어 통일교육을 전담하게 하는 방법이다.

현재 통일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통일부 산하의 통일교육원으로서, 이 분야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원은 원칙적으로 통일부 산하의 정부기관으로서, 교육대상도 극히 적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사회단체의 간부로 제한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기관은 아닌 것이다. 또한 현재의 통일교육원은 교육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전문서적 등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거나 영상물 제작·배포 등 기타 통일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다.

『통일교육본부』의 설립은 공식적인 통일교육체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국적인 규모의 방대한 새로운 통일교육체제를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설립하느냐하는 것이 문제이며, 기존의 통일교육원 등 각종 교육원이나 연구소와의 관계설정도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통일교육본부는 정부지원을 받는 정부산하단체인

가 또는 순수 민간단체로서 전적으로 국민의 후원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중 범국민적인 「통일교육본부」의 설립방안을 제외한 나머지 세 방안은 모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안으로서 어려운 방안은 아니다. 다만 이들 방안은 모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법과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더욱 강화하는 방안인 것이다. 그러나 「통일교육본부」의 설치 및 운영방안은 관련법규의 개정을 비롯해 이에 필요한 여러 문제까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전국규모의 시민교육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체제의 하나인 「통일교육본부」설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나. (가칭) 통일교육본부 설립 및 운영방안

(1) 통일교육본부 설립취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급속한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상응하고, 장기적으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개혁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 대안의 하나로 범국민적인 통일교육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범국민적인 통일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해 통일교육의 목표가 더욱 명료해지고 교육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방법도 보다 다양화될 수 있으며 사회적인 권위집단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통일교육본부의 설립목적

통일교육본부의 설립 목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통일의 과업성취
- ② 민족의 동질성 회복
- ③ 한반도 평화정착
- ④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

(3) 기능과 역할

- ① 통일교육의 기본정책 수립
- ②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육성
- ③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諸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④ 통일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 ⑤ 통일교육과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⑥ 통일교육과 관련된 각종 자료 (학술지, 시장각 자료,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발간·배포
- ⑦ 기타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4) 교육내용

통일교육은 남북관계의 변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상황 등에 따라 그 내용이 약간씩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통일문제 전반에 걸쳐 국민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배양(민주시민교육과 병행해서 실시)
- ② 한반도 분단과 남북 갈등역사에 관한 분석
- ③ 남북한 화해·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 ④ 통일의 당위성 및 민족동질성 회복방안
- ⑤ 남북한 통일방안
- ⑥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 ⑦ 통일한국의 미래상 및 통일 후 나타날 후유증 극복 방안

(5) 교수·학습원칙

통일교육본부의 통일교육은 피교육자가 적극적인 학습태도를 가지고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하며, 또한 배운 것을 실제로 현실에 적용토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① 실습위주의 교육, ②주입식 강의보다는 토론식 교육, ③ 통일현장교육, ④ 시청각 교육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6) 교육대상

통일교육본부의 교육대상은 ①통일교육 담당요원, ②각급 학교 교사, ③공무원과 군인, ④정치인, ⑤언론인, ⑥대학교수, ⑦근로자, ⑧학생, ⑨일반시민 등 대단히 포괄적이다. 특히 이 중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북한·통일문제를 객관적·합리적 사고의 틀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업무를 통일교육본부에서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7) 조직과 운영

(가) 조직

- ① 본부장과 부분부장 및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운영
- ② 통일교육본부의 정치적 중립과 감독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학자,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와 감사를 구성

- ③ 통일교육본부의 실질적인 활동영역을 결정할 학술자문위원회 구성
- ④ 실무진으로 사무총장 산하에 기획개발국, 총무국, 대중매체교육국, 성인교육국, 학교교육국, 학술진흥국, 간행물국을 둔다
- ⑤ 직속기관으로 통일교육연구소 및 도서관(간행물 전시관)을 둔다
- ⑥ 통일교육본부는 중앙조직 이외에 전국 광역시·도에 지부를 설치하되 중앙과 유사한 형태의 기구를 둘 수 있다.

(나) 통일교육본부의 유형

통일교육본부를 설립할 경우 그 성격상 어떤 유형의 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다. 일반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유형은 ①정부주도형 ②민간주도형 ③혼합형 등 세가지가 있다.

< 정부주도형 >

통일교육본부를 정부의 기구로 설립하여 교육이나 운영 등 모든 책임을 정부가 담당하는 방법이다. 이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첫째, 현재 통일부 산하기관인 통일교육원을 통일교육본부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이다. 둘째, 국무총리실 또는 행정자치부 산하에 통일교육본부를 설립하는 것이다. 셋째, 입법부 소속으로 설립하는 방안이다.

현재의 통일교육원을 확대·개편해서 통일교육본부를 설립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다. 현재의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부기관으로서 그 동안의 경험과 현재의 조직을 감안할 때 가장 쉽게 통일교육본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교육본부는 단순히 지금까지 실시해 오던 통일교육이 아닌 민주시민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범국민적 초당기구여야 하는데 통일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지는 의심이 된다.

또한 통일교육본부는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여러 형태의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제 기관의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검

토하여 새로운 내용과 방법을 개발해 가는 등 통일교육의 총본산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현재의 위상으로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기구로 설립하게 되면 통일교육본부가 총리직속기구이기 때문에 위상도 높고 각 부처간의 업무협조나 지원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에도 총리실 산하에 수많은 직속기구가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기구가 총리실 산하의 직속기구로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행정자치부 산하에 통일교육본부를 두고 운영하는 방법은 독일식으로, 독일이 내무성 소속에 연방정치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벤치마킹 한 것이다. 이 방법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용이하기 때문에 전국 광역시·도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 지부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교육을 실시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할 경우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운영도 방지할 수 있어 정치적 중립성도 보장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지금까지 교육분야와 별 관계가 없었던 행정자치부가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타 부처, 특히 통일부와 교육부의 반대가 있을 수 있으며, 지금도 거대 조직인 행정자치부의 조직이 확대된다는 여론의 비판도 있을 수 있다.

입법부 산하에 두면 행정부의 관료주의의 영향도 덜 받을 수 있어 초당적인 통일교육기관의 설립은 가능할 것이며, 예산의 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연수원과 연계하여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방법 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통일교육본부의 설립안에 야당이 찬성할 리 없다. 야당이 반대하는 한 관변단체 시비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며, 결국 입법부에 정부주도의 통일교육본부 설립은 불가능할 것이다.

만일 여·야 합의하에 국회가 주도하더라도 합의와 타협의 정치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현실, 정당의 빈번한 이합집산과 낮은 제도화 수준, 정당의 파벌성과 불당성, 여·야간 정권교체경험의 미비, 여·야간 동반자 관

계가 아닌 타도와 투쟁적인 자세 등 선진화되지 못한 한국정치문화의 현실로 인해 통일교육본부의 운영에 정치논리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여·야가 초당적·초정파적·초정권적으로 국가사업을 공동 추진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여러 형태의 정부주도형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주도형의 장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①재정확보 및 행정지원이 용이하다. ②전국적인 조직을 가동하기 쉽고, 통일교육본부의 운영에 있어서 체계성 유지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③교육내용 및 편성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 ④교육대상의 선발이나 동원이 유리하다. ⑤교육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용이하다. ⑥통일교육본부가 추진하는 기타 사업을 능률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단점은 다음과 같다. ①통일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어렵다. ②과거 정부주도의 통일교육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범국민적인 지지를 획득하기 어렵다. ③통일교육본부가 교육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관료주의와 행정편의주의로 운영될 공산이 크다. ④내실보다는 업적에 치우쳐 형식적인 교육이 될 가능성이 있다. ⑤정부 내에 전국적인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행정개혁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⑥통일교육의 생명인 다양성을 침해하고 官주도로 획일화되기 쉽다. ⑦시민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국가의 개입이 극소화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⑧국가의 과중한 재정부담이 예상된다. ⑩정부주도안에 대해서 여·야간 합의가 어려울 것이다.

< 민간주도형 >

민간주도형은 통일교육에 뜻이 있는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통일교육 본부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법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적극 참여하고 이들은 물론 통일교육에 뜻이 있는 개인 및 단체의 재정적 후원으로 운영된다.

이 방안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조직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민주

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②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다. ③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교육의 저변확대 명분이 있다. ④교육내용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 그리고 시민의 요구에 객관적으로 부응할 수 있다. ⑤다양성을 유지하기 쉽다.

그러나 언급한 장점 못지 않게 단점도 많다. ①재정의 확보가 어렵다. ②통일교육본부의 설립에 동참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간의 입장을 조율하기 어렵다. ③설립과 운영 등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④조직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⑤주도권 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⑥재정후원자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⑦대외적인 공신력을 획득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 혼합형 >

이 방안은 정부는 재정을 지원하고, 그 운영 책임은 전적으로 민간단체에 맡기는 방법이다. 이 민간단체는 교수, 교사 등 북한·통일문제 전문가, 민주시민교육전문가,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참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체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통일교육본부의 정치적 중립과 감독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학자,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감사로부터 감독과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체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정부와 민간단체가 연계하여 국가적인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명분이 있다, ②재정확보가 용이하다, ③교육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④순수 정부주도형 보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용이하다.

단점으로 ①정부와 민간단체간에 주도권, 운영방법, 교육내용 편성 등에 있어 갈등의 소지가 있다. ②재정지원을 하는 정부로부터 인사, 교육내용, 조직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최소한 예산결산, 직무감사, 교육효과 측정 및 평가 등에 감독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③조직이 민과 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갈등의 소지가 있다. ④조직내부에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경우 행정과 조직관리의 비전문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⑤조직내부에 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할 경우 관료화에 대한 폐단이 우려된다. ⑥소속직원에 대한 법적 신분과 처우 문제 등이 사전에 조정되어야 한다. ⑦정부가 막대한 시설투자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교육기관 운영을 민간단체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겠다는 가하는 의구심이 있다.

위의 세 가지 모형은 모두가 장·단점이 있다. 정부주도형은 현실형이다.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규모의 통일교육체제를 설립하는 데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이다. 그러나 운영상 문제가 가장 많다. 민간주도형은 이상형으로 장점도 많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가장 낮은 방안이다.

혼합형은 절충형이라고 볼 수 있는 데 위에 제시한 기준에 비교적 근접한 유형이다. 혼합형은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위의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 민간단체가 통일교육본부 운영의 주도권을 행사하면 정치적 중립성, 다양성,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협조나 재정지원을 받게 되어 체제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것이고, 전국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체제구축이 용이할 것이다.

결국 범국민적 통일교육본부를 설립·운영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이든 설립된 통일교육 전담기구는 조직 스스로 정권의 교체나 특정한 정파의 압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전문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X. 결론

이 연구는 남북한이 상호 이해와 화합을 실현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 남한의 학교와 사회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동서독의 화해협력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살펴 본 후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한의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교육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최근 들어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다. 학생과 국민들은 북한사회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통일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 동안 남북한은 분단 상황에서 상호 대결적이며 경쟁적인 교육을 지속하였다. 남한에서는 반공교육 또는 통일안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경계하거나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 가르쳐 왔다. 반면에 북한은 남한을 적화통일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학생들에게 남조선해방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려는 교육을 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은 한 민족이며 동포이면서도 학생과 주민들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교육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대립과 갈등보다는 화해와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경쟁의 시대에 있어서 남북한은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우리 민족 모두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의 과제를 모색하는 일은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통일교육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통일교육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소련을 비롯한 구 공산권 국가들의 체제 붕괴와 냉전 구도의 종

식, 그리고 동서독의 통일은 우리의 분단상황과 통일교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통일교육은 냉전적 사고를 기초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함께 살아야 할 이웃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전제 위에서 적극적 의미의 통일교육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북한관과 통일관은 세대에 따라 계층과 지역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일관의 차이는 통일교육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고 통일정책의 혼선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토론을 통하여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남북간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졌으며, 경의선 철도복원 공사 착공식과 다방면에 걸친 경제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교류와 스포츠 교류 등을 통해 남북관계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제 남북간의 화해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시되는 상황에서 남북간의 분단으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 상호 적대적이며 대결적인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화해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는 과제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남북한은 상호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학생과 국민들에게 상대방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와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육분야에서 상호 적대적이며 대결적인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남한 주민이나 북한 주민들에게 모두 서로에 대한 이해와 화해를 도모하고 남북의 통일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북한을 바르게 이해하고 통일문제를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시기이다. 모든 국민과 학생들이 북한을 이해하고 통일에 대한 건전한 판단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모두가 새로운 통일학습의 자리에 참가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의 방향은 평화공존 모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은 학생들이 ‘평화능력’, 즉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기존의 삶의 조건 속에서 갈등의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러한 갈등을 평화적인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며, 이전과는 다른 대안적인 삶의 질서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화능력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분단상태가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상황에서 평화능력은 곧 통일과정을 이끌어 가는 문제해결능력으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평화능력은 통일과 관련된 지식을 포함하여 다층적인 삶의 차원에서 겪게 될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해결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통일교육은 남북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며, 통일의 과정과 통일 후 수많은 갈등 상황에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교육은 평화교육의 한국적 형태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학생과 교원의 통일 의식을 분석해 볼 때,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통일의 당위성과 가능성, 통일미래상 등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말하자면 남북한의 상호 불신과 대립보다는 평화와 화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과 북한 사회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학생과 교원들의 통일의식에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견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은 현재의 통일교육에 대하여 비교적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교과서 등 교육내용이 재미없다거나 교수학습 방법이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 통일교육은 1990년대 이후 통일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다양하고 개방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통일교육은 정부 중심의 교육 형태에서 민간 단체로 확대되고 있으며, 교육내용이나 방법 또한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사회 통일교육의 유형을 교육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그런데 공공 교육기관의 통일교육은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민간단체의 통일교육은 가상 및 현실체험학습, 수련활동,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 통일교육 가운데 공무원 통일교육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통일교육원과 공무원교육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무원 통일교육은 북한정세 이해와 통일준비역량제고, 그리고 안보현장 답사 등을 통하여 통일의지를 함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북 화해·협력시대에 부응하는 통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방향에 기초하여 통일교육의 내용을 개편해야 할 것이며, 북한사회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독일의 통일교육 사례를 통하여 남북한의 화해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의 역할을 제시해 주고 있다. 동서독의 통일교육이 주는 시사점은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공존과 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점검해보고,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전달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민주시민교육을 점검하고 우리 교육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간의 갈등, 반목, 적대감을 해소하고, 남북한이 공존 공영 속에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기반 조건으로서 평화교육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점은 통일

의 과정 뿐 아니라, 통일 이후를 내다볼 때에도 그 의미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학생들의 갈등 요인을 예측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배양하고, 새로운 가치와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 평화교육은 통일준비교육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통일교육은 평화교육의 접근이 필요하며 평화교육의 한국적 형태가 통일교육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에 적합한 형태로 교육내용 역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통일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로서 우리 사회 안에서 화합할 수 있는 평화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통일교육의 방법 역시 과거의 주입식 강의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시대의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학교 통일교육은 북한의 현실과 통일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인 판단과 비판이 통일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통일교육이 도덕 윤리과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범교과적으로, 그리고 모든 교육활동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즉, 통일교육 관련 교과를 모든 교과로 확대하여 북한 및 통일문제를 각 교과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체험활동, 특별활동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교원들 역시 통일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각 교과와 관련한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통일교육 연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사회 통일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단체의 협력이 중요하며 강의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교수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교육이 지향해 나갈 기본 목표와 방향을 교육강령의 형태로서 제정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강령은 통일교육의 기본적인 명제로서 범국민적 토론을 통하여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초당파적 차원에서 제정 공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강령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남북의 통일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실현한다. 2. 남북의 통일은 주변 국가의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실현한다. 3.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청산하고 이제는 화해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4. 남북은 한 민족이다. 5. 남북은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유지해 오던 생활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남북의 발전과 번영에 유익하다. 6. 남북은 상호 상대방의 차이와 이질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7. 남북의 이념과 가치, 사회현실에 대하여 보편적 가치에 기초하여 비교하고 비판할 수 있다. 8. 남북의 통일은 한반도의 안정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9. 남북의 통일은 점진적인 협의를 통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 10. 남북의 통일 절차와 형태는 공동의 협의를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국가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가운데 만들어 가는 것이다. 11. 남북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남한 사회의 화합과 안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국민들이 통일문제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통일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통일문제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당파적인 통일교육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국민들의 북한관이나 통일관의 차이와 혼란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통일교육 기본 지침을 개발하거나, 공공 및 민간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통일교육 지원체제가 강화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통일교육지원법 등 법적·제도적 정비도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도 통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

요하다. 최근 들어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정책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통일교육을 지원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가 중요하며,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민간 교육기관의 관심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순원, 『평화. 인권 교육』, 한울, 2000.
- 경기도 파주교육청(1998), “통일대비 체험학습 프로그램”
- 고병헌, 『평화교육의 성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 고정식, “통일교육발전을 위한 학교와 정부의 역할”, 통일부, 제4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샵 (1999.11.11) 주제발표 원고.
- 곽병선 외, 『민주시민교육』, 한국교육개발원, 1994.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Ⅰ)』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 교육부, 『고등학교 윤리과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고시 제1992-19호, .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자치행정연수부, 『2000 교육훈련계획』, 2000.
- 김경웅(편저), 『정치교육론』, 유헤출판사, 1982.
- 김성재, “교육개혁에 대한 발상의 대전환 : 하나의 세계체제와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국가발전 전략과 교육개혁』, 새교육공동체위원회, 1999
- 김정환, “평화교육학의 이론과 과제”,
- _____, 『현대의 비판적 교육이론』, 박영사, 1988
- 김택환 외, 『국민정치교육의 효과적 추진방향과 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원대학교, 1987.

김택환, “독일의 민주화와 민주시민교육”, 전득주 외, 『현대민주시민교육론』, 서울: 평민사, 1992.

김택환. “독일의 민주화와 민주시민교육”,

전득주 외, 『현대민주시민교육론』 평민사, 1992.

김학준, “분단사의 재조명”, 이흥구,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 박영사, 1984

김형찬(편), 『북한의 교육』, 서울: 을유문화사, 199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교육부, “독일 정치교육의 위상과 목표”

박재운, 백성준, 『독일의 교육통합』, 한국교육개발원, 1992.

또 하나의 문화통일 소모임,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도서출판 또 하나의 모임, 1999

문용린 외, 『학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한국교육개발원, 1988.

박보영, 『평화교육에 관한 연구 - 한국에서의 평화교육 실천을 위한 이론적기초』,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박형중, “한국과 서독의 분단·통일 관련 교육의 비교정치학: 대내정치적 배경과 통일론의 차이를 중심으로”, 2000년도 한국정치학회 춘계 학술회의, 발표문

박형중. “한국과 서독의 분단·통일 관련 교육의 비교정치학: 대내정치적 배경과 통일론의 차이를 중심으로”, 2000년도 한국정치학회 춘

계학술회의 발표문.

백낙청, 『흔들리는 분단체제』, 창작과 비평사, 1988.

_____,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창작과 비평사, 1994.

사카모토 요시카즈, “냉전후의 과제는 무엇인가”, 『탈냉전 아시아 시민
운동의 과제』,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위임, 한울,
1996

서울대 교육연구소(편),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하우, 1994.

송영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점검-사회통일교육의 현황과 개선방
안: 이론보다 현실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한국』 제
17권 8호, 평화문제연구소, 1999

송영대. “통일교육지원법 제정의 의의-통일교육 활성화의 틀 마련”, 『통
일한국』 제17권 3호, 평화문제연구소, 1999

신세호 외, 『독일 교육통합과 과생문제점 분석연구』, (서울: 한국교육
개발원, 1993)

신용철, “통일을 향한 동서독의 접근이 남북한의 교류에 주는 시사”,
『통일문제연구』, 제 2권 1호(1990년 봄)

_____, “독일통일과 문화 및 교육의 교류”, 『통일문제연구』, 제 2권 3
호(1990년 겨울)

여성단체협의회, 통일문화 한마당 프로그램 및 자료집, 2000.

오인택, “평화교육의 이념과 내용”, 『기독교사상』, 32권 9호(1988년 9월),

- _____ “평화교육의 근거와 조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편),
- _____ 『성숙한 교회와 평화교육』,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8,
- _____ “평화교육의 개념과 우리의 과제”, 『우리교육』 (1991년 10월)
- _____ “통일독일에서의 교육의 역할”, 『기독교사상』, 416호(1993.8).
- 오일환, “통일을 전후한 독일의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보』, 29집 2호, 1995,
- 와다 하루끼, “개혁과 유토피아 사이에서-새로운 전지구적 문명을 향하
여”, 『창작과 비평 창간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1996,
- 윤건영, “남북한 교류 협력시대 통일교육의 방향”, 『'92 북한, 통일
연구 논문집(6)』, 통일원, 1992.
- 윤철경 외, 학교붕괴 실태 및 대책 연구(정책연구과제), 한국청소년
개발원, 1999.
- 이민호, 『독일, 독일민족, 독일사 - 분단독일의 역사의식』, 서울: 느티
나무, 1990.
- 이삼열, 『평화의 철학과 통일의 실천』, 햇빛출판사, 1991.
- 이상우, “문화전통과 통일의 과제”, 『문화전통과 사회발전』, 미원문화
재단, 1991
- 이상우(편), 『통일한국의 모색 - 이념, 환경과 정책적 노력 -』, 서울: 박
영사, 1988.

이정화, 통일 및 북한교육의 방향과 어려운 점, 한국교총, 한국정치학회공동 주최, 교육정책토론회,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 자료, 2000. 7. 5

이흥구, “통일이념으로서의 민주와 자유”,

인천광역시교원연수원, 2000년 교원연수계획, 2000

장석은, 『분단국 통일문제』, 국토통일원, 1990.

전득주 외, 『현대민주시민교육론』, 평민사, 1992.

전득주, 『독일연방공화국-정치교육, 민주화 그리고 통일』, 대왕사, 1995.

정용길, 『분단국 통일론』, 고려원, 1988.

조성배, “남북한 생화문화 탐색활동을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경기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연구회,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통일 대비교육 방안의 모색』 (1998. 11. 26)

조 형, “통일, 더불어 사는 연습”, 『대화』, 대화출판사, 통권 6호, 가을호, 1995.

주독대사관, 『독일 통일 2주년 중간 결산』, 1992.

중앙대학교 남북통합교실, 경제생활체험과정, 2000

주병완,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통일정보신문사, 『학교 통일교육의 내실화 방안』, 1999. 3. 23

통일연구원, 「1999년도 통일 문제 여론조사」, 1999

- 민족화해협력범국민 협의회, '청소년 통일의식 여론조사 결과보고',
1999
- 통일연수원, 『북한의 이해』, 1996.
- _____, 『통일문제 이해』.
- 통일원, 『독일통일백서』, 1994.
- 한겨레신문, 7월 10일자, '부정적 청소년 통일관'.
- 한국교육개발원, 『독일 교육통합 과생문제점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1993.
- 한국자유총연맹(1999), 청소년 기초시민의식 하계 캠프 프로그램
- 한국자유총연맹, 통일준비 교원연수 및 교육안내, 2000.
- 한국정치학회, 『북한·통일연구위원회 1 - 분단현실과 통일교육의 방
향』, 한국정치학회, 2000.
- 한만길 외, 『학교 통일교육 내용의 체계화 방안 연구』, 1997.
- 한만길, "통일교육의 사회과학적 접근 모형", <통일문제연구> 94년 겨울호, 평화문제연구소
- 한만길, '개방적 정치교육으로서 통일교육의 과제', 한국정치학회 학술 회의 발표 자료, 「세계화와 민주화 시대의 정치와 교육」 1997, 8, 19
- _____, 『통일 교육 실태 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9.

_____,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9

한명희, “한국교육 이념 철학의 정립과제”, 『교육학연구』 22, 1984.

한상우,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통독 사회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92 북한, 통일 연구 논문집(6)』, 통일원, 1992.

_____ “통독 이후 교육, 문화부문에서의 통합에 관한 고찰 -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 『통일문제연구』, 제 5권 4호(1993년 겨울).

한준상, “평화교육을 위한 사회교육”, 『문동환박사 고회기념 논문집. 평화 교육과 민중 교육』, 풀빛, 1990.

허영식,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운영체계,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1997

_____, “정치교육의 체계와 운영”. 진득주 편, 『독일연방공화국』, 대왕사, 1995.

황병덕, 『동서독간 정치통합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6.

_____,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1995.

_____. 『통일교육 개선 방향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7.

황성모, 『통일독일현장연구』, 도서출판 일념, 1990.

홍민통, 2000 청소년 지역화합 한마당 프로그램, 2000

Bosse, H., Hamburger, F., *Friedenspädagogik und Dritte Welt*,

Stuttgart, 1973.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Zur Situation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r Schule*, Bonn, 1982.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Zur Situation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r Schule*, Bonn, 1982,

Derlien, H.-U., "Integration der Staatsfunktionäre der DDR in das Berufsbeamtentum: Professionalisierung und Säuberung", W. Seibel /A. Benz/ H. Mäding(Hrsg.), *Verwaltungsreform und Verwaltungspolitik im Prozeß der deutschen Einheit*,

Dorst, W., *Die polytechnische Bild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Schule*, 1953.

Dürr, O., *Frieden - Herausforderung an die Erziehung*, Stuttgart, 1971.

E. Mannschatz, *Entwurf zu einer Methodik der Kollektiverziehung*, Berlin, 1970.

Galtung, J.(1990), "Violence and Peace", *A Reader in Peace Studies*, (ed.) Smoker, Davies & Munske, Pergamon Press, pp. 9-18

Galtung, J., "Probleme der Friedenserziehung", *Zeitschrift für Pädagogik*, 19(1973), 185-200.

Gerhard Langguth, "Politische Stiftung und politische Bildung in Deutschland",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34, 1993.

Günter Plub / Werner Röder (hrsg), *Einheit der Nation*,

Diskussionen und Konzeptionen zur Deutschlandpolitik der großen Parteien seit 1945, Stuttgart 1978,

Hans-Ulrich Derlien, "Integration der Staatsfunktionäre der DDR in das Berufsbeamtentum: Professionalisierung und Säuberung", in: Wolfgang Seibel / Arthur Benz / Heinrich Mäding (Hrsg.), *Verwaltungsreform und Verwaltungspolitik im Prozeß der deutschen Einheit*, Baden-Baden, 1993,

Hicks, D., 고병현(역),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도서출판 서원, 1993).

J. Niermann, *Wörterbuch der DDR-Pädagogik*, Heidelberg, 1974.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1973, hrsg. vom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1973. Hrsg. v.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Jaspers. K., *Freiheit und Wiedervereinigng*, Freiburg, 1950.

K. Jaspers, *Freiheit und Wiedervereinigng*, Freiburg 1950.

Klingberg, L., u.a., *Abriß der Allgemeinen Didaktik*, Berlin, 1966.

Küpper, Ch.(Hrsg.), *Friedenserziehung*, Opladen, 1979.

L. Klingberg u.a., *Abriß der Allgemeinen Didaktik*, Berlin, 1966.

Langguth, G., "Politische Stiftung und politische Bildung in

- 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34, 1993.
- Lindner, W., u. a., “Ziel, Inhalt, Methoden, Organisationsformen und Mittel der sozialistischen Erziehung”, *Pädagogik*, 9(1971).
- Mannschatz, E., *Entwurf zu einer Methodik der Kollektiverziehung*, Berlin, 1970.
- Ministeriat der DDR, Ministerium für Volksbildung, *Lehrplan der zehnklassigen allgemeinbildenden polytechnischen Oberschule - Staatsbürgerkunde, Volk und Wissen*, 1988.
- Ministeriat der DDR, Ministerium für Volksbildung, *Lehrplan der zehnklassigen allgemeinbildenden polytechnischen Oberschule - Staatsbürgerkunde, Volk und Wissen*, 1988.
- Nicklas, H./ Ostermann, A. “Ueberlegungen zur Ableitung friedensrelevanter Lernziele aus dem Stand der kritischen Friedensforschung”, *Zeitschrift für Pädagogik*, 19(1973).
- Niermann, J., *Wörterbuch der DDR-Pädagogik*, Heidelberg, 1974, 193.
- Niermann, J., *Wörterbuch der DDR-Pädagogik*, Heidelberg, 1974.
- Pfister, H.(Hrsg.), *Friedenspädagogik Heute. Theorie und Praxis. Ein Handbuch für den Lehrer*, Waldkirch, ³1980.
- Plub, G./ Röder, W.(Hrsg), *Einheit der Nation: Diskussionen und Konzeptionen zur Deutschlandpolitik der großen Parteien seit 1945*. Stuttgart, 1978.

Report to UNESCO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1996), *Learning : The Treasure Within*, UNESCO

Rudolf Hrbik, *Die SPD-Deutschland und Europa, Die Haltung der SPD zum Verhältnis von Deutschland-Politik und West-Integration*, Bonn 1982

Röhrs, H., *Erziehung zum Frieden*, Stuttgart, 1971.

Ulshöfer, R., Götz, Th.(Hrsg.), *Politische Bildung - Ein Auftrag aller Fächer*, Freiburg, 1975.

W. Dorst, *Die polytechnische Bild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Schule*, 1953.

W. Lindner u. a., “Ziel, Inhalt, Methoden, Organisationsformen und Mittel der sozialistischen Erziehung”, *Pädagogik*, 9(1971).

Wulf, Ch.(Hrsg.), *Friedenserziehung in der Diskussion*, München, 1973.

<http://cne.knue.ac.kr:8080/>

<http://www.okedongmu.or.kr/>